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수립 연구

2017. 11.



제 출 문

당진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11.

충남연구원 원장 강현수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
제2장 당진시 현황	5
제1절 당진시 일반 현황	7
1. 위치 및 행정구역	7
2. 인구	9
제2절 당진시 유형별 현황	19
1. 복지	19
2. 주거	25
3. 교육	26
4. 사회안전	28
5. 산업	29
제3장 당진시 인권 현황	31
제1절 당진시 인권의식 실태조사 경과	33
제2절 당진시 인권의식 설문조사	35
1. 조사개요	35
2. 조사결과	36
1) 총괄	36
2) 당진시민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및 평가	37
3) 당진시의 인권 침해와 차별	55
4) 당진시 인권교육	82

제3절 당진시 인권취약계층 인터뷰 조사	88
1. 조사개요	88
2. 분야별 인터뷰 조사 결과	89
1) 노인	89
2) 장애인	91
3) 여성	97
4) 다문화	98
5) 아동·청소년	100
6) 비정규직	101
7) 북한이탈주민	103

제4장 기본방향 및 향후과제105

제1절 기본방향	107
1. 노인	107
2. 장애인	107
3. 여성	109
4. 다문화	110
5. 아동·청소년	110
6. 비정규직	111
7. 북한이탈주민	111
제2절 향후과제	112

[붙임] 당진시 인권의식 실태조사 설문지	113
------------------------------	-----

표 목 차

[표 1] 당진시 행정구역 현황	8
[표 2] 당진시 인구 현황	9
[표 3] 당진시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	10
[표 4] 당진시 여성 인구 현황	11
[표 5] 당진시 여성 가구주 현황	11
[표 6] 당진시 연령별 인구 현황	12
[표 7] 당진시 장애인 인구 현황	13
[표 8] 당진시 외국인 인구 현황	14
[표 9] 당진시 외국인 근로자·결혼 이민자 현황	15
[표 10] 당진시 외국인과 혼인 현황	15
[표 11] 당진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6
[표 12] 당진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17
[표 13] 당진시 연령별 독거노인 현황	18
[표 14] 당진시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19
[표 15] 당진시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20
[표 16] 당진시 여성폭력상담소·상담건수 현황	21
[표 17] 당진시 보육시설 현황	22
[표 18] 당진시 문화공간 현황	23
[표 19] 당진시 의료기관 현황	24
[표 20] 당진시 아동복지시설 현황	25
[표 21] 당진시 주택유형별 가구 현황	25
[표 22] 당진시 학교 총 현황	26
[표 23] 당진시 공공도서관 현황	27
[표 24] 당진시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28
[표 25] 당진시 범죄발생 현황	28
[표 26] 당진시 사업체 현황	29
[표 27] 당진시 고용률 현황	30

[표 28] 당진시 지역총생산 현황	30
[표 29] 당진시 인권취약계층 인터뷰조사	33
[표 30] 당진시 인권취약계층 인권감수성교육	33
[표 31]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36
[표 32] 당진시민의 전반적인 인권의식에 대한 문항 평균값	37
[표 33] ‘대한민국 헌법’에 인권 보호 명시 인지도	37
[표 34]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인지도	38
[표 35] 한국에서 인권 존중 인지도	38
[표 36] 3년 전에 비해 인권 향상 인지도	39
[표 37] 인권약자의 인권 존중 인지도	39
[표 38]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당진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 평균값	43
[표 39] 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인권의식 고취	44
[표 40]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의 확대	44
[표 41] 인권관련 전문가의 확대 및 충원	45
[표 42] 당진시 공무원들의 인권행정 감수성 향상	45
[표 43] 사회복지분야 시설 지원 및 확충	46
[표 44] 인권관련 시민단체 활성화	46
[표 45]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대	47
[표 46] 당진시에서 시민을 위한 인권분야의 중요도 평균값	48
[표 47] 시정 정보 공개, 정책 참여 기회 보장	48
[표 48] 자유로운 의사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49
[표 49]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누릴 권리	49
[표 50] 기본적 사회보장서비스 누릴 권리	50
[표 51] 범죄, 폭력, 화재,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보장	50
[표 52] 자유로운 이동 및 편리하게 공공시설 접근할 권리	51
[표 53] 오염방지, 쾌적한 자연환경 누릴 권리	51
[표 54] 노동기본권, 고용안전 및 임금 보장	52
[표 55] 학교·성인·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등 교육기회 제공	52
[표 56] 예술활동 지원, 충분한 여가 기회 및 장소 제공	53
[표 57] 공중위생 및 보건 관리, 공공의료 체계 지원	53

[표 58] 쾌적하고 안전하며 부담 가능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	54
[표 59] 인권취약계층 분야별 인권 존중 인지도 평균값	55
[표 60] 인권취약계층 분야별 인권존중 인지도 평균값 비교(분야별/전체)	56
[표 61] 여성인권 존중	57
[표 62] 여성인권 존중에 대한 여성 응답자의 교차분석	57
[표 63] 노인인권 존중	58
[표 64] 노인인권 존중에 대한 노인 응답자의 교차분석	59
[표 65] 장애인인권 존중	60
[표 66] 장애인인권 존중에 대한 장애인 응답자의 교차분석	60
[표 67] 아동 및 청소년 인권 존중	61
[표 68] 아동 및 청소년 인권 존중에 대한 아동 및 청소년 응답자의 교차분석	62
[표 69] 북한이탈주민 인권 존중	63
[표 70] 결혼이주여성 인권 존중	63
[표 71] 결혼이주여성 인권 존중에 대한 다문화가족(여성) 응답자의 교차분석	64
[표 72] 노동자 인권 존중	65
[표 73] 이주노동자 인권 존중	65
[표 74]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존중	66
[표 75]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존중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 응답자의 교차분석	66
[표 76] 사회복지 시설 생활자 인권 존중	67
[표 77] 전과자 인권 존중	68
[표 78] 미혼모 인권 존중	68
[표 79] 병력자 인권 존중	69
[표 80] 일반 당진시민 인권 존중	69
[표 81] 일반 당진시민 인권 존중	70
[표 82] 인권 침해 및 차별 유발 요인에 대한 인지도 평균값	71
[표 83] 출신국가 인권 침해 및 차별	71
[표 84] 성별 인권침해 및 차별	72
[표 85] 경제적 지위 인권침해 및 차별	72
[표 86] 나이 인권침해 및 차별	73
[표 87] 종교 인권침해 및 차별	73

[표 88] 용모 인권침해 및 차별	74
[표 89] 학력/학벌 인권침해 및 차별	74
[표 90] 장애 인권침해 및 차별	75
[표 91] 출신지역 인권침해 및 차별	75
[표 92] 혼인상태 인권침해 및 차별	76
[표 93] 병력자 인권침해 및 차별	76
[표 94] 정치적 입장 인권침해 및 차별	77
[표 95] 최근 3년 동안 인권침해 경험 사례	78
[표 96] 인권 침해·차별 경험시 조치사항	79
[표 97] 인권교육 필요성 인지도	83
[표 98] 인권교육 담당 주체에 관한 인지도 평균값	85
[표 99] 공교육의 정규교과과정에서 시행	85
[표 100] 인권시민단체에서 시행	86
[표 101] 지방정부에서 시행	86
[표 102] 당진시 인권취약계층 인터뷰 개요	88

그림 목 차

[그림 1] 당진시 위치	7
[그림 2] 당진시 행정구역 현황	8
[그림 3] 당진시 인구 추이(2008~2017년)	9
[그림 4] 당진시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	10
[그림 5] 노인분야 인권교육 및 인터뷰	34
[그림 6] 장애인분야 인터뷰(시각·지체·청각)	34
[그림 7] 여성분야 인권교육 및 인터뷰	34
[그림 8] 다문화분야 인권교육 및 인터뷰	34
[그림 9] 아동·청소년분야 인터뷰	34
[그림 10] 당진시 인권정책에 대한 평가	40
[그림 11] 당진시가 시민들의 인권보장에 부족한 점	41
[그림 12] 당진시가 시민들의 인권보장에 부족한 점(1순위·2순위)	41
[그림 13] 당진시가 가장 역점 두고 추진해야 할 인권의 영역	42
[그림 14] 당진시가 가장 역점 두고 추진해야 할 인권의 영역(1순위·2순위)	43
[그림 15] 여성인권 존중에 대한 응답자 비교(전체/여성)	58
[그림 16] 노인인권 존중에 대한 응답자 비교(전체/노인)	59
[그림 17] 장애인인권 존중에 대한 응답자 비교(전체/장애인)	61
[그림 18] 아동 및 청소년 인권 존중에 대한 응답자 비교(전체/아동 및 청소년)	62
[그림 19] 결혼이주여성 인권 존중에 대한 응답자 비교(전체/결혼이주여성)	64
[그림 20]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존중에 대한 응답자 비교(전체/비정규직 노동자)	67
[그림 21] 일반 당진시민 인권 존중에 대한 응답자 비교(전체/일반 당진시민)	70
[그림 22] 최근 3년 동안 인권침해 경험 사례	78
[그림 23] 인권 침해·차별 경험시 조치사항	79
[그림 24] 인권 침해당했을 경우 취할 행위	80
[그림 25] 인권 침해당했을 경우 취할 행위(1순위·2순위·3순위)	81
[그림 26] 당진시에서 인권교육 받은 경험 유무	82
[그림 27] 인권교육프로그램 받을 의향 유무	82

[그림 28] 인권증진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사람	84
[그림 29] 인권증진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사람(1순위 · 2순위)	84
[그림 30] 인권교육 실행시 가장 중요한 사항	87
[그림 31] 인권교육 실행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항(1순위 · 2순위)	87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 위한
실태조사 실시

- 2016년 3월 30일 제정된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인권실태조사 실시
-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2. 연구의 목적

■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 위해 인권의식과 인권실태조사 실시

- 당진시민 인권의식과 인권취약계층 인권실태 조사
- 당진시민 인권의식 및 감수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수요조사 실시
 - 당진시민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및 평가
 - 당진시의 인권침해와 차별
 - 당진시 인권교육

■ 당진시 인권증진계획 기본방향 제안

-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당진시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인권과제 설정
- 차별 및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인권정책수립의 토대 마련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당진시

■ 시간적 범위

- 2017년 현재

■ 내용적 범위

- 당진시의 전반적 인권의식 수준에 대한 조사
 - 당진시민의 전반적 인권의식 정도
 - 다양한 인권현안에 대한 동의 정도
- 당진시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 당진시의 인권존중 정도
 - 당진시 인권침해 요인
 - 당진시민의 인권침해 경험
 - 당진시의 향후 역점 인권방향
- 당진시 인권교육에 현황 및 수요 조사
 - 인권교육 경험 및 필요성
 - 향후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 당진시 인권취약계층의 인권실태 조사
 - 당진시 주요 인권취약계층별 인권상황
- 향후 당진시 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 설정
 - 향후 당진시 인권의 증진방향과 과제 제시

2. 연구의 방법

■ 연구방법

- 문헌·자료 등 수집과 분석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당진 시민 대상 설문조사
- 인권취약계층별 인터뷰조사

제2장 당진시 현황

제1절 당진시 일반 현황

제2절 당진시 유형별 현황

제1절 당진시 일반 현황

1. 위치 및 행정구역

■ 위치

- 당진시는 국토공간상 한반도의 중서부 및 수도권 남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서울로부터 약 102km의 거리에 위치한 서해안 교통요충지임
- 수도권~충남~호남을 연결하는 서해안고속도로의 통과지역이며, 당진~대전간 고속도로를 통해 경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와도 연결이 용이함
- 서해안 임해신산업단지의 배후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광역아산만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해상 물류·교통의 중심지역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 당진시는 충청남도 북부지방에 자리하여 동쪽으로는 아산시와 경기도 평택시, 서쪽으로는 서산시, 남쪽으로는 예산군과 서산시, 북쪽으로는 경기도 화성군과 접하고 있으며 대체로 산악과 구릉이 연결된 넓은 평야지대로써 농업과 철강산업이 발전되고 있음
- 충청남도 내에서 당진시의 입지여건은 아산만권 개발의 거점, 서해안 개발의 교두보로써 향후 대중국 교류의 거점이며, 서해안 수도권 관문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증대되고 있는 충남의 북부권에 속해 있음
- 당진시의 동쪽으로는 아산시, 서쪽으로는 서산시, 남으로는 예산군, 북으로는 경기도 화성시와 접하며 2읍, 9면 3동으로 구성됨

[그림 1] 당진시 위치



■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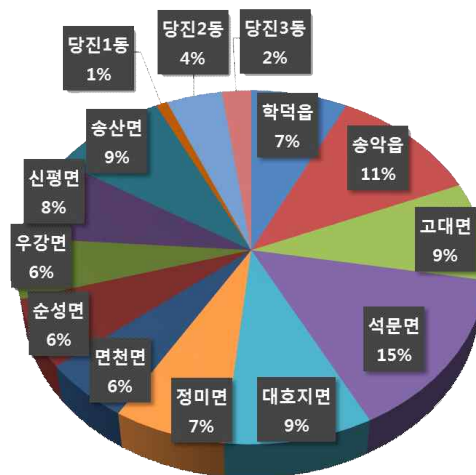
- 당진시는 117년만의 승격에 따라 기존의 3읍 9면의 행정구역이 2012년 1월 1일부터 2읍 9면 3동으로 조정됨

[표 1] 당진시 행정구역 현황

구 분	면적 (km ²)	구성비 (%)	통·리				반 계
			계	통	행정리	법정리	
당진시	704.25	100	272	51	221	-	1,557
합덕읍	51.3	7.3	34	-	34	-	175
송악읍	80.46	11.4	31	-	31	-	189
고대면	63.34	9	18	-	18	-	89
석문면	103.06	14.6	19	-	19	-	77
대호지면	65.82	9.3	12	-	12	-	57
정미면	49.57	7	18	-	18	-	69
면천면	39.24	5.6	17	-	17	-	80
순성면	44.39	6.3	17	-	17	-	109
우강면	38.86	5.5	17	-	17	-	101
신평면	54.38	7.7	19	-	19	-	139
송산면	62.58	2.9	19	-	19	-	89
당진1동	6.03	0.9	15	15	-	-	126
당진2동	29.62	4.2	20	20	-	-	132
당진3동	15.6	2.2	16	16	-	-	125

자료 : 당진시 통계자료(2014)

[그림 2] 당진시 행정구역 현황



2. 인구

■ 당진시 인구 현황

- 2017년 8월 기준으로 당진시의 인구수는 172,661명, 세대는 74,342가구임
 - 남성 91,451명, 여성 81,210명임
- 당진시의 인구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8년 136,432명, 2012년 155,104명, 2017년 172,661명으로 점차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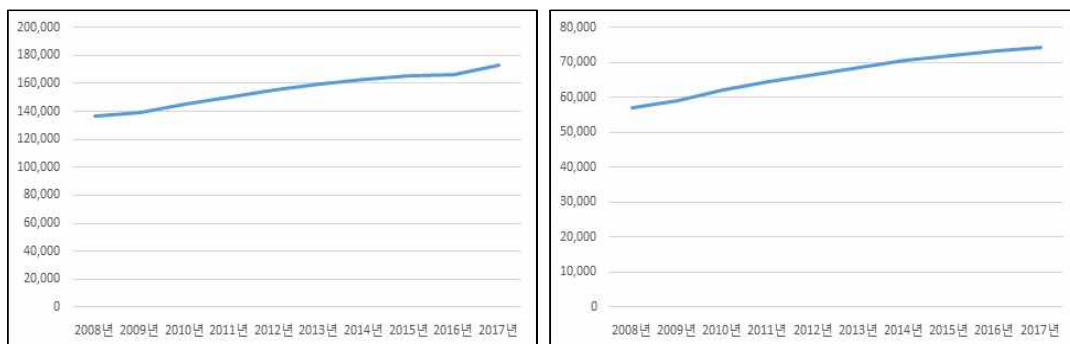
[표 2] 당진시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 분	인구			세대 (가구)	세대당 평균인구
	계	남	여		
2008년	136,432	70,081	66,351	57,141	2.39
2009년	138,798	71,405	67,393	58,907	2.36
2010년	144,903	74,720	70,183	62,076	2.33
2011년	150,219	77,703	72,516	64,333	2.34
2012년	155,104	80,427	74,677	66,369	2.34
2013년	159,615	82,925	76,690	68,490	2.33
2014년	162,844	84,963	77,881	70,502	2.31
2015년	165,122	86,454	78,668	72,074	2.29
2016년	166,630	87,388	79,242	73,434	2.27
2017년	172,661	91,451	81,210	74,342	2.32

자료 : 당진시 통계자료(2017)

[그림 3] 당진시 인구 추이(2008~2017년)



■ 당진시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

- 2017년 행정구역별로 인구수를 살펴보면, 송악읍의 인구가 28,72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당진1동과 당진2동의 인구가 각각 25,541명과 20,404명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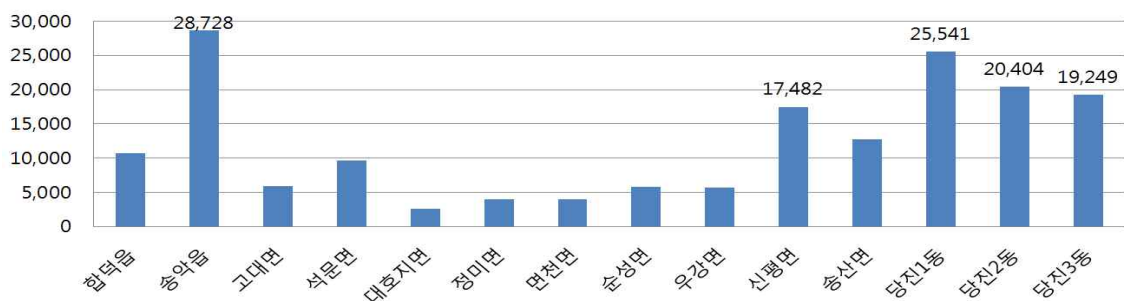
[표 3] 당진시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 분	인구			세대
	계	남	여	
당진시	172,661	91,451	81,210	74,342
합덕읍	10,737	5,773	4,964	4,862
송악읍	28,728	16,173	12,555	12,831
고대면	5,906	3,027	2,879	2,764
석문면	9,688	5,342	4,346	5,073
대호지면	2,646	1,326	1,320	1,289
정미면	3,974	2,029	1,945	1,972
면천면	4,017	2,160	1,857	1,807
순성면	5,823	3,085	2,738	2,540
우강면	5,734	2,921	2,813	2,459
신평면	17,482	9,004	8,478	6,908
송산면	12,732	7,145	5,587	5,720
당진1동	25,541	13,360	12,181	11,193
당진2동	20,404	10,331	10,073	7,955
당진3동	19,249	9,775	9,474	6,969

자료 : 당진시 통계자료(2017)

[그림 4] 당진시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



■ 여성 인구

- 당진시 여성인구는 2014년 77,881명(47.8%), 2015년 78,668명(47.6%), 2016년 79,242명(47.6%), 2017년 81,210명(47.0%)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4] 당진시 여성 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 분	당진시 인구			여성비율
	계	남	여	
2012년	155,104	80,427	74,677	48.1%
2013년	159,615	82,925	76,690	48.0%
2014년	162,844	84,963	77,881	47.8%
2015년	165,122	86,454	78,668	47.6%
2016년	166,630	87,388	79,242	47.6%
2017년	172,661	91,451	81,210	47.0%

자료 : 당진시 통계자료(2017)

- 당진시 여성 가구주는 2010년 10,758세대(여성가구주 비율 20.63%), 2015년 15,041세대(여성가구주 비율 23.99%)로 증가하였음

[표 5] 당진시 여성 가구주 현황

(단위 : 세대, %)

연도	일반 가구수1)	여성가구주 가구수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2)
		계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2010	52,151	10,758	-	-	-	-	20.63
2015	62,697	15,041	-	-	-	-	23.99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주 : 1)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비혈연가구, 1인가구 포함),

단, 집단가구(6인이상 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는 제외

2)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 (B)/(A)*100

■ 연령별 인구

- 당진시 0세부터 19세까지 전체 인구대비 아동·청소년 인구 구성비를 보면 2012년 21.7%, 2013년 22.7%, 2014년 21.3%, 2015년 21.0%으로 다소 감소하였음
- 당진시 60세부터 85세이상까지 전체 인구대비 노인 인구 구성비를 보면 2012년 20.9%, 2013년 19.9%, 2014년 21.0%, 2015년 21.7%으로 다소 증가하였음

[표 6] 당진시 연령별 인구 현황

(단위 : 명, %)

연령별	2012		2013		2014		2015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총계	155,104	100.00	159,615	100.00	162,844	100.01	165,122	100
0 ~ 4	8,958	5.78	11,158	6.99	9,537	5.86	9,571	5.80
5 ~ 9	7,646	4.93	7,807	4.89	8,333	5.12	8,754	5.30
10 ~ 14	8,293	5.35	8,363	5.24	8,010	4.92	7,524	4.56
15 ~ 19	8,743	5.64	8,854	5.55	8,792	5.40	8,851	5.36
20 ~ 24	8,075	5.21	8,180	5.12	8,620	5.29	8,703	5.27
25 ~ 29	9,328	6.01	10,136	6.35	9,326	5.73	9,361	5.67
30 ~ 34	12,985	8.37	13,677	8.57	13,542	8.32	13,108	7.94
35 ~ 39	12,587	8.12	12,913	8.09	12,903	7.92	13,276	8.04
40 ~ 44	12,654	8.16	12,894	8.08	13,247	8.13	13,339	8.08
45 ~ 49	11,325	7.30	11,572	7.25	12,544	7.70	12,580	7.62
50 ~ 54	12,346	7.96	12,516	7.84	12,491	7.67	12,455	7.54
55 ~ 59	9,723	6.27	9,820	6.15	11,259	6.91	11,791	7.14
60 ~ 64	8,113	5.23	8,130	5.09	8,265	5.08	8,956	5.42
65 ~ 69	6,345	4.09	6,355	3.98	7,000	4.30	7,647	4.63
70 ~ 74	7,176	4.63	7,060	4.42	6,719	4.13	6,530	3.95
75 ~ 79	5,772	3.72	5,560	3.48	6,306	3.87	6,077	3.68
80 ~ 84	3,022	1.95	2,841	1.78	3,544	2.18	4,019	2.43
85세 이상	2,013	1.30	1,779	1.11	2,406	1.48	2,580	1.57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6)

■ 장애인 인구

- 당진시 장애인 인구추이는 2013년 9,397명에서 2014년 9,475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음
- 2014년 장애인 인구 현황을 성별로 보면 남자 5,600명, 여자 3,875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음
- 2014년 장애인 인구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송악읍 1,342명, 신평면 1,083명, 당진2동 943명, 합덕읍 871명 순으로 나타남

[표 7] 당진시 장애인 인구 현황

(단위 : 명)

읍면동	2013			2014		
	계	남	여	계	남	여
합계	9,397	5,554	3,843	9,475	5,600	3,875
합덕읍	865	512	353	871	514	357
송악읍	1,334	830	504	1,342	833	509
고대면	533	299	234	533	299	234
석문면	595	350	245	598	353	245
대호지면	227	136	91	231	136	95
정미면	362	214	148	365	214	151
면천면	378	209	169	373	204	169
순성면	523	314	209	533	312	221
우강면	518	298	220	511	290	221
신평면	1,094	643	451	1,083	634	449
송산면	586	341	245	615	363	252
당진1동	831	497	334	840	505	335
당진2동	917	541	376	943	560	383
당진3동	634	370	264	637	383	254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6)

■ 외국인 인구

- 당진시 외국인 인구는 연도별로 보면 2010년 3,434명, 2011년 3,776명, 2012년 3,901명, 2013년 4,306명, 2014년 5,048명으로 매년 점차 증가추세임
- 2014년 당진시 외국인 인구 현황은 지역별로 송악읍 1,315명, 합덕읍 630명, 신평면 559명, 당진1동 485명, 순성면 402명 순으로 나타남

[표 8] 당진시 외국인 인구 현황

(단위 : 명)

연도	총계		
읍면동	계	남	여
2010	3,434	2,441	993
2011	3,776	2,640	1,136
2012	3,901	2,645	1,256
2013	4,306	2,897	1,409
2014	5,048	3,440	1,608
합덕읍	630	447	183
송악읍	1,315	988	327
고대면	123	93	30
석문면	178	115	63
대호지면	64	43	21
정미면	161	117	44
면천면	287	249	38
순성면	402	333	69
우강면	57	25	32
신평면	559	408	151
송산면	339	223	116
당진1동	485	211	274
당진2동	293	128	165
당진3동	155	60	95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6)

- 당진시 외국인 근로자는 2012년 2,808명, 2013년 2,773명, 2014년 2,955명, 2015년 3,606명으로 증가 추세임
- 당진시 결혼 이민자는 2012년 618명, 2013년 660명, 2014년 727명, 2015년 722명으로 2012년에 비해 증가 추세임
- 외국인 근로자는 여성보다 남성 비율이 높으며, 여성 결혼이민자는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음

[표 9] 당진시 외국인 근로자결혼 이민자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계	남	여	계	남	여
2012	2,808	2,421	387	618	27	591
2013	2,773	2,371	402	660	32	628
2014	2,955	2,525	430	727	40	687
2015	3,606	3,042	564	722	48	674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15)

- 당진시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이 연도별로 2010년 564건, 2012년 628건, 2014년 683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임
- 당진시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도 2010년 19건, 2012년 32건, 2014년 48건으로 증가 추세임

[표 10] 당진시 외국인과의 혼인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남편+외국인 아내	아내+외국인 남편
2010	564	19
2011	591	27
2012	628	32
2013	687	40
2014	683	48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6)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당진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778가구, 2011년 1,634가구, 2012년 1,566가구, 2013년 1,518가구, 2014년 1,466가구로 점차 감소하였음
- 당진시 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는 2010년 67가구, 2011년 80가구, 2012년 92가구, 2013년 97가구, 2014년 141가구로 점차 증가하였음

[표 11] 당진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단위 : 가구수, 명)

연도별 읍면동별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시설수	인원
2010	1,778	1,711	67	10	-
2011	1,634	1,554	80	13	121
2012	1,566	1,474	92	15	132
2013	1,518	1,426	97	14	117
2014	1,466	1,325	141	17	116
합덕읍	193	165	21	2	1
송악읍	218	207	14	2	27
고대면	61	59	3	2	2
석문면	70	65	5	-	-
대호지면	27	25	2	-	-
정미면	58	53	6	2	29
면천면	72	67	6	2	19
순성면	68	60	8	2	7
우강면	102	99	3	1	-
신평면	138	124	11	1	3
송산면	59	57	4	-	-
당진1동	150	132	15	1	1
당진2동	227	191	40	2	27
당진3동	23	21	3	-	-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6)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당진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2012년 15,073명, 2013년 14,840명, 2014년 15,838명으로 2013년 감소하였다가 2014년에 다소 증가하였음
- 2014년 당진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남자 50%, 여자 69%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12] 당진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

연도별 읍면동별	전체 노인 대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명)								
	전체노인			수급자수			수급률(%)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2012	24,328	10,218	14,110	15,073	5,189	9,884	62	51	70
2013	25,140	10,643	14,497	14,840	5,083	9,757	59	48	67
2014	25,975	11,093	14,882	15,838	5,561	10,277	61	50	69
합덕읍	2,658	1,185	1,473	1,769	680	1,089	67	57	74
송악읍	3,191	1,404	1,787	1,683	570	1,113	53	41	62
고대면	1,854	800	1,054	1,183	419	764	64	52	72
석문면	1,917	817	1,100	1,116	366	750	58	45	68
대호지면	986	431	555	664	252	412	67	58	74
정미면	1,285	533	752	916	334	582	71	63	77
면천면	1,167	507	660	866	334	582	74	66	88
순성면	1,654	704	950	1,083	384	699	65	55	74
우강면	1,623	687	936	1,034	364	670	64	53	72
신평면	2,614	1,093	1,521	1,505	496	1,009	58	45	66
송산면	1,724	723	1,001	967	318	649	56	44	65
당진1동	1,943	827	1,116	1,020	473	848	52	57	76
당진2동	1,963	811	1,152	1,321	473	848	67	58	74
당진3동	1,396	571	825	709	227	482	51	40	58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6)

■ 독거노인

- 당진시 독거노인은 2013년 7,484명, 2014년 6,767명으로 다소 감소함
- 당진시 읍면동별 독거노인 현황은 송악읍 937명, 합덕읍 662명, 석문면 654명, 신평면 652명 순으로 나타남

[표 13] 당진시 연령별 독거노인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읍면동별	합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일반		
		65~ 79세	80세 이상	소계	65~ 79세	80세 이상	소계	65~ 79세	80세 이상
2013	7,484	5,532	1,952	506	340	166	6,978	5,192	1,786
2014	6,767	5,035	1,732	473	316	171	6,294	4,733	1,561
합덕읍	662	487	175	74	48	26	588	439	149
송악읍	937	678	259	72	56	16	865	622	243
고대면	424	295	129	15	10	5	409	285	124
석문면	654	504	150	29	21	8	625	483	142
대호지면	302	209	93	12	8	4	290	201	89
정미면	359	243	116	13	8	5	346	235	111
면천면	328	213	115	31	19	12	297	194	103
순성면	422	307	115	36	19	17	386	288	98
우강면	372	263	109	28	13	15	344	250	94
신평면	652	632	20	49	31	18	603	601	2
송산면	393	273	120	14	7	21	379	280	99
당진1동	490	385	105	33	26	7	457	359	98
당진2동	488	342	146	60	47	13	428	295	133
당진3동	284	204	80	7	3	4	277	201	76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6)

제2절 당진시 유형별 현황

1. 복지

■ 노인여가복지시설

- 당진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2013년 333개소(노인복지관 2개소, 경로당 312개소, 노인교실 19개소), 2014년 341개소(노인복지관 2개소, 경로당 320개소, 노인교실 19개소)으로 경로당 8개소가 추가로 개소됨
- 읍면동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은 송악읍 42개소, 합덕읍 41개소, 신평면 30개소, 고대면 25개소, 당진2동 25개소 순임

[표 14] 당진시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읍면동별	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2011	345	1	325	19
2012	349	2	328	19
2013	333	2	312	19
2014	341	2	320	19
합덕읍	41	1	37	3
송악읍	42	-	40	2
고대면	25	-	24	1
석문면	21	-	20	1
대호지면	13	-	13	-
정미면	20	-	19	1
면천면	19	-	18	1
순성면	21	-	20	1
우강면	23	-	22	1
신평면	30	-	29	1
송산면	22	-	20	2
당진1동	21	-	16	5
당진2동	25	-	25	-
당진3동	18	1	17	-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6)

■ 노인의료복지시설

- 당진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13년 15개소(노인요양시설 9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개소), 2014년 18개소(노인요양시설 9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개소)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개소가 추가로 개소됨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15] 당진시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별 읍면동별	시설수 합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10	12	7	396	341	203	5	45	43	23
2011	10	7	339	239	153	3	28	19	18
2012	15	10	597	494	332	5	36	30	29
2013	15	9	613	563	358	6	54	47	25
2014	18	9	613	563	358	9	81	71	41
합덕읍	1	-	-	-	-	1	9	8	4
송악읍	3	1	200	198	124	2	18	15	9
고대면	3	1	48	24	18	2	18	15	8
석문면	-	-	-	-	-	-	-	-	-
대호지면	1	-	-	-	-	1	9	7	4
정미면	-	-	-	-	-	-	-	-	-
면천면	4	2	95	91	57	2	18	17	10
순성면	2	2	129	111	76	-	-	-	-
우강면	-	-	-	-	-	-	-	-	-
신평면	1	1	27	27	18	-	-	-	-
송산면	-	-	-	-	-	-	-	-	-
당진1동	1	-	-	-	-	1	9	9	6
당진2동	2	2	114	112	65	-	-	-	-
당진3동	-	-	-	-	-	-	-	-	-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6)

■ 여성폭력상담시설

- 당진시 가정폭력 상담소는 1개소이며, 상담건수는 2012년 1,319건, 2013년 1,355건, 2014년 1,479건으로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당진시 성폭력 상담소는 1개소이며, 상담건수는 2012년 89건, 2013년 96건, 2014년 116건으로 성폭력 상담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표 16] 당진시 여성폭력상담소·상담건수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읍면동별	여성폭력상담					
	합계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상담건수	상담소	상담건수	상담소	상담건수
2010	1	1,237	1	1,237	-	-
2011	2	630	1	511	1	119
2012	2	1,408	1	1,319	1	89
2013	2	1,451	1	1,355	1	96
2014	2	1,595	1	1,479	1	116
합덕읍	-	41	-	41	-	-
송악읍	-	200	-	176	-	24
고대면	-	48	-	48	-	-
석문면	-	110	-	89	-	21
대호지면	-	36	-	33	-	3
정미면	-	31	-	31	-	-
면천면	-	46	-	46	-	-
순성면	-	131	-	129	-	2
우강면	-	62	-	62	-	-
신평면	-	140	-	117	-	23
송산면	-	48	-	48	-	-
당진1동	-	243	-	218	-	25
당진2동	2	251	1	233	1	18
당진3동	-	208	-	208	-	-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6)

■ 보육시설

- 당진시 보육시설은 2011년 128개소, 2012년 156개소, 2013년 170개소, 2014년 161개소로 2013년 증가하였다가 2014년 9개소 감소하였음
- 읍면동별 보육시설은 당진3동 32개소, 송악읍 30개소, 당진1동 24개소, 당진2동 22개소, 송산면 14개소 순임

[표 17] 당진시 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읍면동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민간	법인· 단체 등	직장	가정
2011	128	5	-	60	9	2	52
2012	156	6	-	65	9	2	74
2013	170	7	-	75	9	3	76
2014	161	7	9	70	5	3	67
합덕읍	5	1	1	2	1	-	-
송악읍	30	1	1	12	2	-	14
고대면	4	-	2	1	-	-	1
석문면	3	-	-	2	-	1	-
대호지면	-	-	-	-	-	-	-
정미면	1	1	-	-	-	-	-
면천면	-	-	-	-	-	-	-
순성면	5	-	-	4	1	-	-
우강면	1	-	-	1	-	-	-
신평면	20	-	2	10	-	-	8
송산면	14	-	1	8	-	1	4
당진1동	24	1	2	10	-	1	10
당진2동	22	3	-	10	-	-	9
당진3동	32	-	-	10	1	-	21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6)

■ 문화시설

- 당진시 문화시설은 2014년 공공공연장 2개소, 영화상영관 4개소, 미술관 1개소, 종합복지회관 8개소, 청소년회관 2개소, 문화원 1개소, 전수회관 2개소 총 20개소임
- 읍면동별 문화시설은 2014년 당진1동 7개소, 순성면 2개소, 송악읍 2개소, 그 외 지역 1개소임

[표 18] 당진시 문화공간 현황

(단위 : 개소)

읍면동별 (2014년)	합계	공연시설		전시실	지역문화 복지시설		기타시설	
		공공 공연장	영화 상영관	미술관	종합 복지회관	청소년 회관	문화원	전수 회관
합계	20	2	4	1	8	2	1	2
합덕읍	1	-	-	-	-	1	-	-
송악읍	2	-	-	-	-	-	-	2
고대면	1	-	-	-	1	-	-	-
석문면	-	-	-	-	-	-	-	-
대호지면	1	-	-	-	1	-	-	-
정미면	1	-	-	-	1	-	-	-
면천면	1	-	-	-	1	-	-	-
순성면	2	-	-	1	1	-	-	-
우강면	1	-	-	-	1	-	-	-
신평면	1	-	-	-	1	-	-	-
송산면	1	-	-	-	1	-	-	-
당진1동	7	2	3	-	-	1	1	-
당진2동	1	-	1	-	-	-	-	-
당진3동	-	-	-	-	-	-	-	-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6)

■ 의료기관

- 당진시 의료기관은 2011년 175개소, 2012년 188개소, 2013년 195개소, 2014년 192개소임
- 읍면동별 의료기관은 당진1동 82개소, 송악읍 22개소, 합덕읍 21개소, 당진 3동 20개소, 신평면 14개소, 석문면 7개소 순임

[표 19] 당진시 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소)

읍면동별	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요양 병원	치과 병의원	한의원	부속 의원	보건 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 소
2011	175	1	4	70	1	41	26	2	1	11	18
2012	188	1	3	74	1	45	31	2	1	11	19
2013	195	1	4	79	2	45	31	2	1	11	19
2014	192	1	4	77	2	43	32	2	1	11	19
합덕읍	21	-	1	10	-	5	3	-	-	1	1
송악읍	22	-	-	6	1	5	4	2	-	1	3
고대면	3	-	-	1	-	-	-	-	-	1	1
석문면	7	-	-	2	-	1	1	-	-	1	2
대호지면	2	-	-	-	-	-	-	-	-	1	1
정미면	4	-	-	1	-	-	-	-	-	1	2
면천면	3	-	-	-	-	-	-	-	-	1	2
순성면	4	-	-	1	-	-	-	-	-	1	2
우강면	3	-	-	-	-	-	-	-	-	1	2
신평면	14	-	-	5	1	3	2	-	-	1	2
송산면	4	-	-	1	-	1	-	-	-	1	1
당진1동	82	-	3	41	-	19	19	-	-	-	-
당진2동	3	-	-	1	-	1	-	-	1	-	-
당진3동	20	1	-	8	-	8	3	-	-	-	-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6)

■ 아동복지시설

- 당진시 아동복지시설은 2010년 5개소에서 2011년 9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입소자는 2010년 207명, 2011년 311명, 2012년 233명, 2013년 287명, 2014년 242명으로 최근 감소하였음

[표 20] 당진시 아동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 도 별	아동복지시설									
	시설수	입소자			퇴소자			연말현재생활인원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0	5	207	-	-	52	-	-	155	-	-
2011	9	311	-	-	63	-	-	248	-	-
2012	9	233	-	-	66	-	-	167	-	-
2013	9	287	-	-	32	-	-	250	-	-
2014	9	242	116	126	15	7	8	242	116	126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6)

2. 주거

■ 주거실태

- 당진시 주거실태는 2005년 40,285가구에서 2010년 52,151가구로 증가하였음
- 유형별로는 2010년 기준 자기집 31,854가구, 전세 7,698가구, 보증부월세 6,678가구, 무보증월세 1,313가구, 사글세 383가구, 무상 4,225가구임

[표 21] 당진시 주택유형별 가구 현황

(단위 : 가구)

연도별	계	자기집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사글세	무상
2005	40,285	26,814	4,140	3,788	1,219	535	3,789
2010	52,151	31,854	7,698	6,678	1,313	383	4,225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6)

3. 교육

■ 학교현황

- 당진시 학교수는 2011년 90개, 2013년 88개, 2015년 89개로 나타남
- 당진시 학생수는 2011년 23,804명, 2013년 24,036명, 2015년 25,446명으로 점차 증가함

[표 22] 당진시 학교 총 현황

(단위 : 개, 명)

연도별 교육과정별	학교수	학급(과)수	보통 교실수	학생수		
				계	남	여
2011	90	786	720	23,804	12,378	11,426
2012	90	790	791	23,855	12,328	11,527
2013	88	828	801	24,036	12,399	11,637
2014	89	846	863	25,123	13,061	12,062
2015	89	880	907	25,446	13,278	12,168
유치원	36	85	86	1,642	836	806
초등학교	30	438	500	9,418	4,945	4,473
중학교	13	167	166	4,733	2,446	2,287
고등학교	8	152	155	4,703	2,454	2,249
일반계 고등학교	6	109	109	3,585	1,718	1,867
특수목적 고등학교	1	16	16	295	295	-
특성화 고등학교	1	27	30	823	441	382
대학	1	27	-	4,140	2,070	2,070
대학교	1	11	-	810	527	283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6)

■ 공공도서관

- 당진시 공공도서관은 당진중앙 도서관, 합덕도서관, 송악도서관, 당진교육지원청 당진도서관 4개임
- 도서 자료수는 2013년 237,937권, 2014년 243,578권, 2015년 258,851권으로 증가 추세임
- 그러나 연간 이용자수는 2013년 461,425명에서 2014년 521,926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5년 456,070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음

[표 23] 당진시 공공도서관 현황

(단위 : 개, 권, 명, 천원)

연도별	도서관수	좌석수	자료수			연간 이용자 수	연간 열람책수	연간 대출책수
			도서	비도서	연속 간행물 (종)			
2011	4	1,110	216,188	5,955	140	134,776	424,172	282,828
2012	4	1,149	224,254	9,649	140	140,934	381,504	249,754
2013	4	1,149	237,937	7,018	126	461,425	426,067	276,780
2014	4	1,104	243,578	7,018	20	521,926	398,999	249,761
2015	4	1,372	258,851	16,162	173	456,070	338,605	214,232
당진중앙 도서관	1	700	76,307	10,971	89	314,223	233,613	155,742
합덕도서관	1	200	45,758	1,097	18	48,468	26,683	17,789
송악도서관	1	177	47,313	1,031	21	61,259	35,712	23,808
당진교육 지원청 당진도서관	1	295	89,473	3,063	45	32,120	42,597	16,893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6)

4. 사회안전

■ 자살률

- 당진시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은 2014년 35.5명에서 2015년 40.5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23.0명으로 감소하였음

[표 24] 당진시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단위 : 명)

연도별	자살률
2014	35.5
2015	40.5
2016	23.0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6)

■ 범죄

- 당진시 범죄발생건수는 2012년 5,414건, 2013년 5,364건, 2014년 5,158건으로 감소추세임
- 당진시 범죄발생 검거건수는 2012년 3,993건, 2013년 4,050건, 2014년 4,206건으로 증가하였음

[표 25] 당진시 범죄발생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발생건수(건)	검거건수(건)
2010	5,841	4,451
2011	4,559	3,337
2012	5,414	3,993
2013	5,364	4,050
2014	5,158	4,206

자료 : 당진시 통계연보(2016)

5. 산업

■ 사업체

- 2015년 기준 당진시의 전체 사업체수는 12,125개로 도매 및 소매업이 2,958명(24.4%)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사업체별 종업원 수는 전체 78,077명 중 제조업이 28,799명(36.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표 26] 당진시 사업체 현황

(단위 : 개, 명)

산업분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여성대표자	계	남	여
농업, 임업 및 어업	36	2	473	414	5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2	11	474	305	169
광업	9	0	75	66	9
제조업	1,155	201	28,799	25,479	3,320
금융 및 보험업	101	13	1,206	530	676
부동산업 및 임대업	459	126	1,368	942	42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0	20	1,342	1,076	26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61	30	3,958	3,328	63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4	1	1,276	1,114	162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6	10	584	529	55
건설업	545	97	5,649	5,145	50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54	0	1,941	1,281	660
도매 및 소매업	2,958	1,191	7,689	4,126	3,563
운수업	1,067	84	3,630	3,246	384
교육서비스업	428	223	3,505	1,361	2,14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98	175	4,241	722	3,5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60	165	1,031	531	500
숙박 및 음식점업	2,766	1,804	6,888	2,258	4,63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26	526	3,948	2,668	1,280
계	12,125	4,679	78,077	55,121	22,956

자료 : 당진시 통계자료(2015)

■ 고용률

- 2017년 상반기 기준 당진시의 취업자 수는 약 97,000명으로 2013년의 88,000명 대비 약 9,000명 정도 증가하였음
- 고용률은 2017년 상반기 68%로 2013년의 66% 대비 2% 정도 증가하였음

[표 27] 당진시 고용률 현황

(단위 : 천 명, %)

구 분	취업자		고용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2013년	88	88	68	66
2014년	90	93	67	68
2015년	93	96	68	68
2016년	97	98	69	69
2017년	97	0	68	0

자료 : 당진시 통계자료(2017)

■ 지역총생산

- 당진시의 2014년 지역총생산은 12조 8,168억 원으로 충청남도 전체 GRDP의 13%를 차지하고 있음
- 당진시의 GRDP는 2012년 부터 증가하고 있으나, 충청남도 전체 GRDP 비중은 증가하지 않고 있음

[표 28] 당진시 지역총생산 현황

(단위 : 백 만원, %)

구 분	지역총생산	도대비 구성비
2012년	11,318,536	13
2013년	11,629,862	12
2014년	12,816,821	13

자료 : 당진시 통계자료(2014)

제3장 당진시 인권 현황

제1절 당진시 인권의식 실태조사 경과

제2절 당진시 인권의식 설문조사

제3절 당진시 인권취약계층 인터뷰 조사

제1절 당진시 인권의식 실태조사 경과

■ 설문조사 경과

- 설문지 작성 : 2017년 6월 28일
- 당진시민 : 353명(읍면동별 인구비례 배분)
- 인권취약계층 : 186명(노인 17명, 장애인 16명, 여성 36명, 다문화여성 20명, 아동·청소년 43명, 비정규직 54명)

■ 인터뷰조사 경과

- 8회, 7개 분야 118명

[표 29] 당진시 인권취약계층 인터뷰조사

분야	인원	일시	장소
노인	18명	2017.7.11(화)	고대노인대학
장애인(시각)	14명	2017.7.13(목)	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지체, 청각)	11명	2017.7.14(금)	장애인복지회관
여성	38명	2017.7.20(목)	당진시청중회의실
다문화	26명	2017.7.21(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청소년	5명	2017.8.1(화)	당진 YMCA
비정규직	2명	2017.9.12(화)	비정규직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	4명	2017.9.21(목)	당진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

■ 인권감수성교육 경과

- 3개 분야 3회

[표 30] 당진시 인권취약계층 인권감수성교육

분야	인원	일시	장소	인권교육 강사
노인	100명	2017.7.11(화)	고대노인대학	김원천 (호서노인전문요양원장)
여성	38명	2017.7.20(목)	당진시청 중회의실	김순영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 인권강의센터장)
다문화	26명	2017.7.21(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엄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이해 전문교육강사)

[그림 5] 노인분야 인권교육 및 인터뷰



[그림 6] 장애인분야 인터뷰(시각·지체·청각)



[그림 7] 여성분야 인권교육 및 인터뷰



[그림 8] 다문화분야 인권교육 및 인터뷰



[그림 9] 아동·청소년분야 인터뷰



제2절 당진시 인권의식 설문조사

1. 조사개요

■ 조사 목적

- 차별 및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인권정책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고, 당진 시민의 인권의식 및 감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수요조사

■ 조사 범위

- 조사기간 : 2017년 7월 10일 ~ 2017년 8월 10일
- 조사대상 : 539명(최대허용 표본오차 5%, 95% 신뢰수준 조건으로 적정표 본수 : 373명)
 - 당진시민 : 353명(읍면동 인구비례 배분)
 - 인권취약계층 : 186명(노인 17명, 장애인 16명, 여성 36명, 다문화여성 20명, 아동·청소년 43명, 비정규직 54명)

■ 설문 내용

- 당진시민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및 평가
- 당진시의 인권 침해와 차별
- 당진시 인권교육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

■ 조사 분석

- 수집된 자료를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 문항별로 빈도분석·교차분석 통하여 표본집단의 결과 도출

2. 조사결과

1) 총괄

■ 일반적인 사항

- 성별은 여성 288명(53.4%), 남성 251명(46.6%)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음
- 연령은 50대 132명(24.5%), 40대 116명(21.5%), 60대 이상 113명(21.0%), 30대 85명(15.8%), 20대 48명(8.9%), 20대 미만 45명(8.3%) 순으로 응답함
- 인권취약계층분야는 여성 164명(30.4%), 일반시민 139명(25.8%), 노인 88명(16.3%), 비정규직노동자 70명(13.0%), 아동 및 청소년 45명(8.3%), 장애인 20명(3.7%), 다문화가족(여성) 13명(2.4%) 순으로 응답함
- 거주지역은 당진1동 94명(17.4%), 당진2동 77명(14.3%), 석문면 67명(12.4%), 송악읍 56명(10.4%), 당진3동 51명(9.5%) 순으로 응답함

[표 31]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여성	288	53.4	거주지역	합덕읍	20	3.7
	남성	251	46.6		송악읍	56	10.4
	합계	539	100.0		고대면	32	5.9
연령	20대 미만	45	8.3		석문면	67	12.4
	20대	48	8.9		대호지면	9	1.7
	30대	85	15.8		정미면	16	3.0
	40대	116	21.5		면천면	9	1.7
	50대	132	24.5		순성면	7	1.3
	60대 이상	113	21.0		우강면	19	3.5
	합계	539	100.0		신평면	47	8.7
인권취약계층분야	여성	164	30.4		송산면	35	6.5
	노인	88	16.3		당진1동	94	17.4
	장애인	20	3.7		당진2동	77	14.3
	아동 및 청소년	45	8.3		당진3동	51	9.5
	다문화가족(여성)	13	2.4		합계	539	100.0
	비정규직노동자	70	13.0				
	일반시민	139	25.8				
	합계	539	100.0				

2) 당진시민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및 평가

■ 당진시민의 전반적인 인권의식에 대한 문항

- ‘기본적 인권의 보호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3.73), ‘3년 전에 비해 한국의 인권은 나아졌다’ (3.25), ‘한국에서 인권은 존중되고 있다’ (3.17)에 대한 문항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남
- ‘한국사회에서 인권약자의 인권은 존중되고 있다’ (2.99), ‘당진시는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알고 있다’ (2.91)에 대한 문항은 보통 이하로 나타남

[표 32] 당진시민의 전반적인 인권의식에 대한 문항 평균값

문항	평균값
기본적 인권의 보호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3.73
3년 전에 비해서 한국의 인권은 나아졌다	3.25
한국에서 인권은 존중되고 있다	3.17
한국사회에서 인권약자(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가족,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비정규 노동자 등)의 인권은 존중되고 있다	2.99
당진시는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알고 있다	2.91

(1: 전혀 아님, 3: 보통, 5: 매우 그러함)

- ‘기본적 인권의 보호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그러함 173명(32.1%), 보통 167명(31.0%), 약간 그러함 138명(25.6%), 별로 아님 33명(6.1%), 전혀 아님 28명(5.2%)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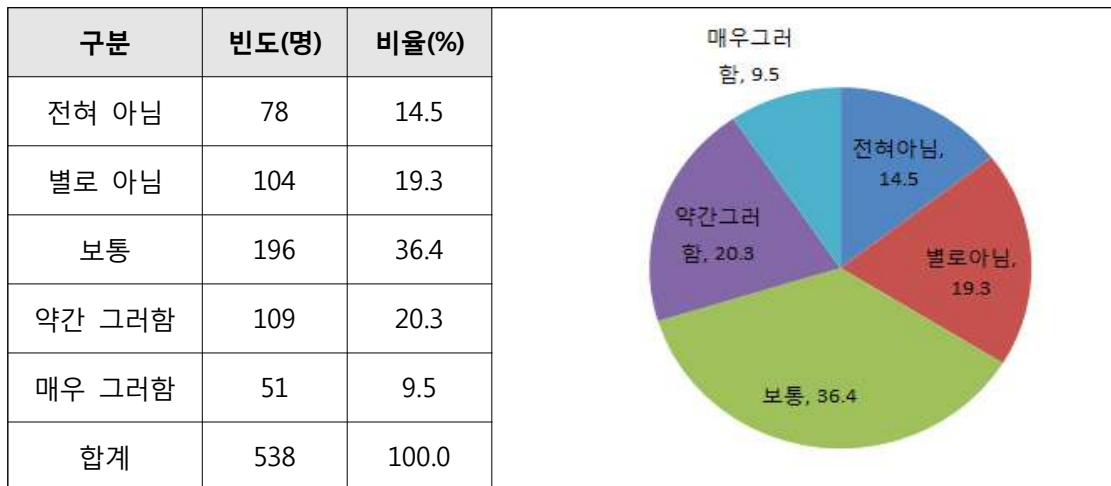
[표 33] ‘대한민국 헌법’에 인권 보호 명시 인지도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아님	28	5.2
별로 아님	33	6.1
보통	167	31.0
약간 그러함	138	25.6
매우 그러함	173	32.1
합계	539	100.0



- ‘당진시가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196명(36.4%), 약간 그러함 109명(20.3%), 별로 아님 104명(19.3%), 전혀 아님 78명(14.5%), 매우 그러함 51명(9.5%)순으로 응답함

[표 34]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인지도



- ‘한국에서 인권은 존중되고 있다’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257명(47.7%), 약간 그러함 116명(21.5%), 별로 아님 90명(16.7%), 매우 그러함 54명(10.0%), 전혀 아님 22명(4.1%) 순으로 응답함

[표 35] 한국에서 인권 존중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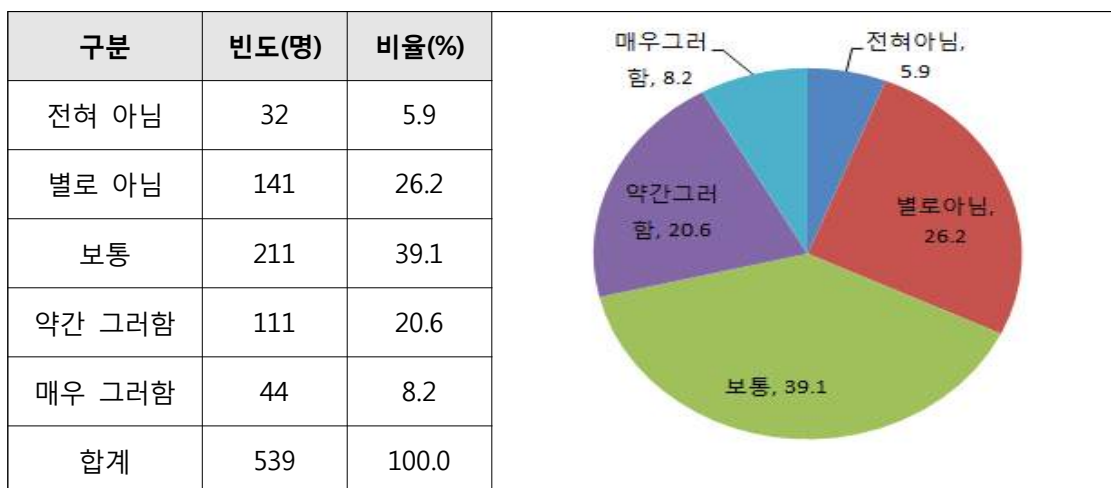
- ‘3년 전에 비해서 한국의 인권은 나아졌다’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210명(39.0%), 약간 그러함 166명(30.8%), 별로 아님 84명(15.6%), 매우 그러함 53명(9.8%), 전혀 아님 26명(4.8%) 순으로 응답함

[표 36] 3년 전에 비해 인권 향상 인지도



- ‘한국사회에서 인권약자의 인권은 존중되고 있다’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211명(39.1%), 별로 아님 141명(26.2%), 약간 그러함 111명(20.6%), 매우 그러함 44명(8.2%), 전혀 아님 32명(5.9%)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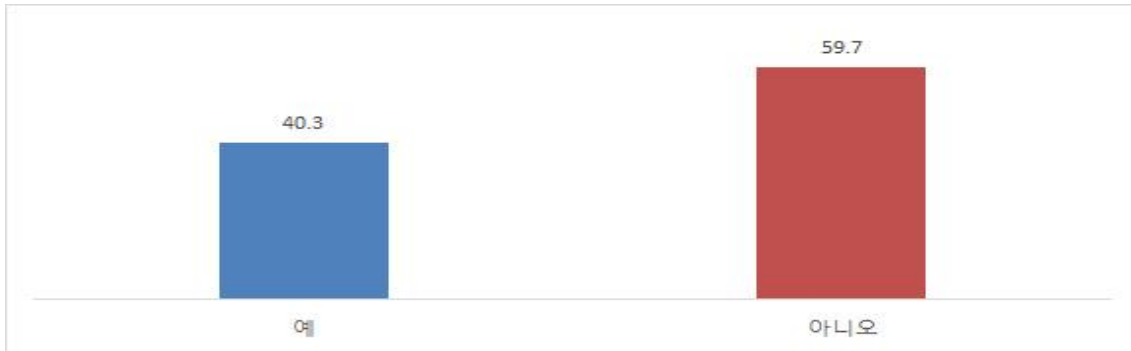
[표 37] 인권약자의 인권 존중 인지도



■ 당진시 인권정책에 대한 평가

- ‘귀하는 “당진시가 시민들의 인권보장을 잘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아니요 322명(59.7%), 예 217명(40.3%)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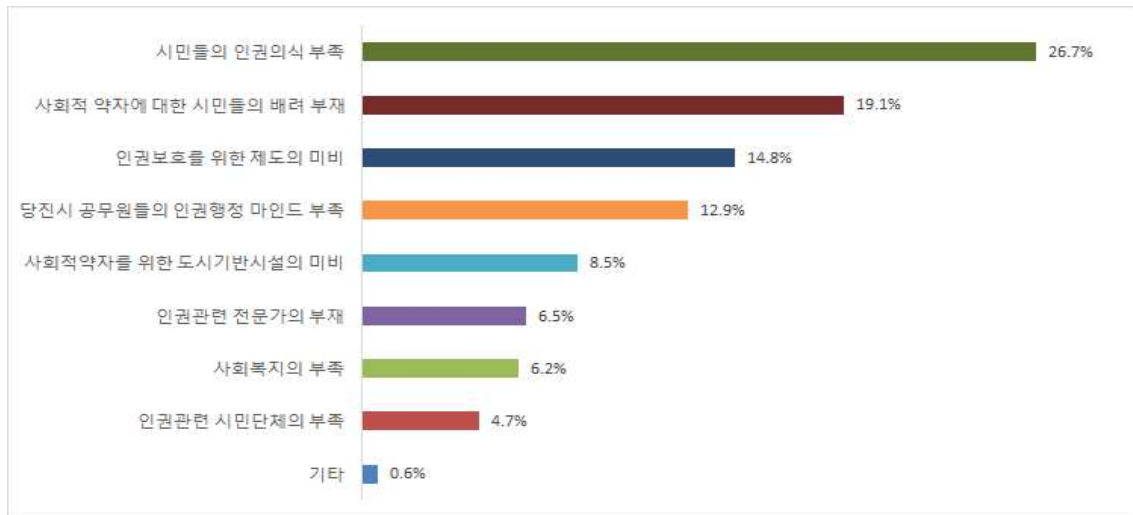
[그림 10] 당진시 인권정책에 대한 평가



■ 당진시가 시민들의 인권보장에 부족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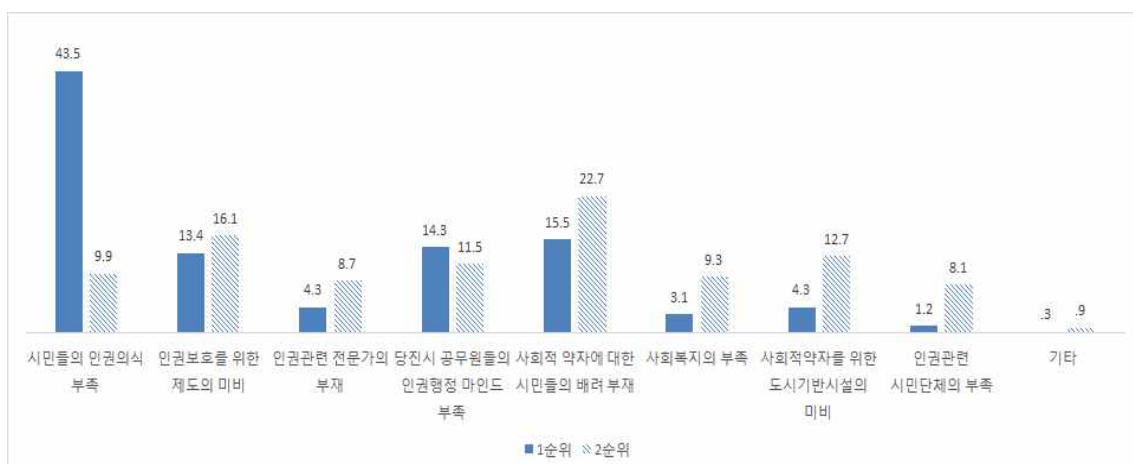
- ‘당진시가 시민들의 인권보장에 부족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으로 시민들의 인권의식 부족(26.7%),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들의 배려 부재(19.1%),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의 미비(14.8%) 순으로 응답함
- 당진시가 시민들의 인권보장에 있어서 부족한 점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음
 - 과거로부터 내려온 관습의 문제
 -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이해와 행정을 실시하는 공무원의 마인드(자세)가 부족하여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관리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예를 들어 장애인주차공간 불법주차 단속, 주차장 폭, 임산부 또는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배려시설, 전동휠체어와 일반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인도 및 경사로 등
 - 인권약자 본인 스스로의 자괴감

[그림 11] 당진시가 시민들의 인권보장에 부족한 점



- ‘당진시가 시민들의 인권보장에 부족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1순위 응답으로 시민들의 인권의식 부족 140명(43.5%),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들의 배려 부재 50명(15.5%), 당진시 공무원들의 인권행정 마인드 부족 46명(14.3%) 순으로 응답함
- ‘당진시가 시민들의 인권보장에 부족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2순위 응답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들의 배려 부재 73명(22.7%),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의 미비 52명(16.1%),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의 미비 41명(12.7%)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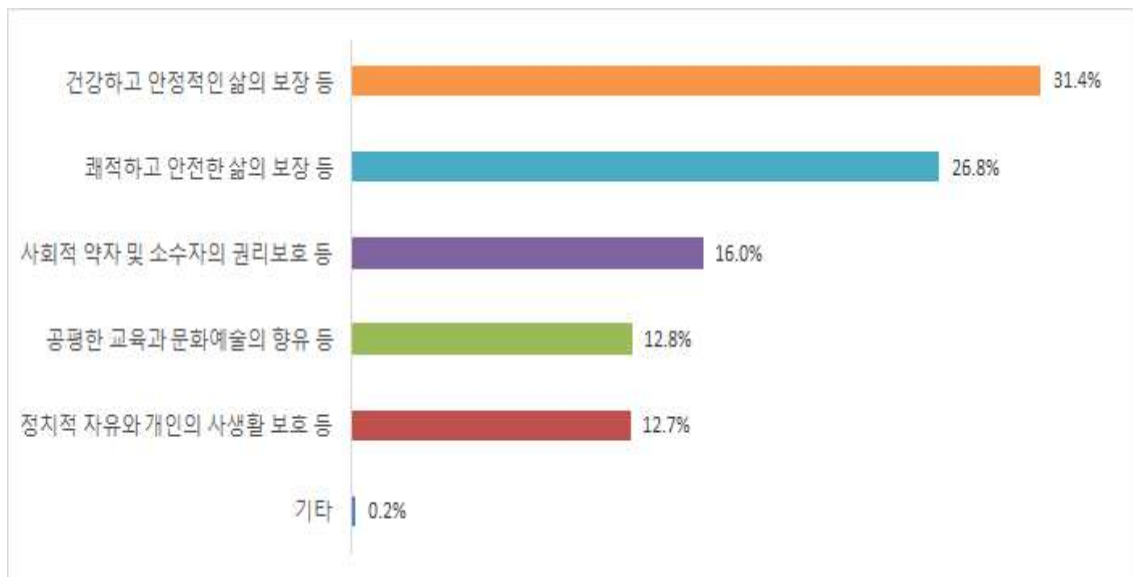
[그림 12] 당진시가 시민들의 인권보장에 부족한 점(1순위 · 2순위)



■ 당진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인권의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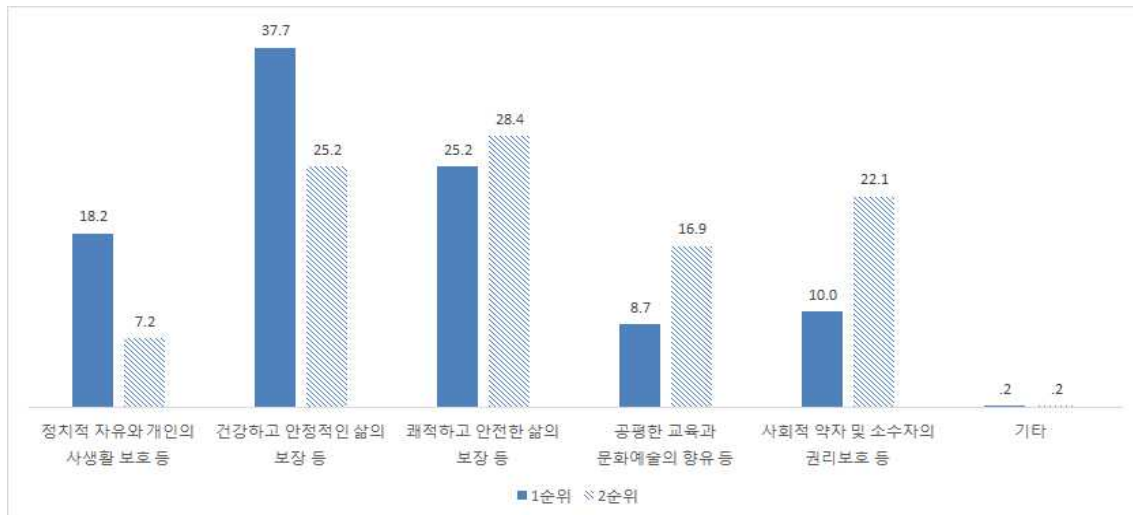
- ‘당진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인권의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의 보장 등(31.4%),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보장 등(26.8%),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보호 등(16.0%) 순으로 응답함
- 당진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인권의 영역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여성인권 보호(남녀차별 완화)가 제시됨

[그림 13] 당진시가 가장 역점 두고 추진해야 할 인권의 영역



- ‘당진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인권의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1순위 응답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의 보장 등 203명(37.7%),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보장 등 136명(25.2%), 정치적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98명(18.2%) 순으로 응답함
- ‘당진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인권의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2순위 응답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보장 등 153명(28.4%),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의 보장 등 136명(25.2%),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보호 등 119명(22.1%) 순으로 응답함

[그림 14] 당진시가 가장 역점 두고 추진해야 할 인권의 영역(1순위 · 2순위)



■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당진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인권친화도시)의 확대(3.98), 사회복지 분야 시설 지원 및 확충(3.96), 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인권의식 고취(3.83),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확대(3.83), 당진시 공무원들의 인권행정 감수성 향상(3.82), 인권관련 시민단체 활성화(3.73), 인권관련 전문가의 확대 및 충원(3.69)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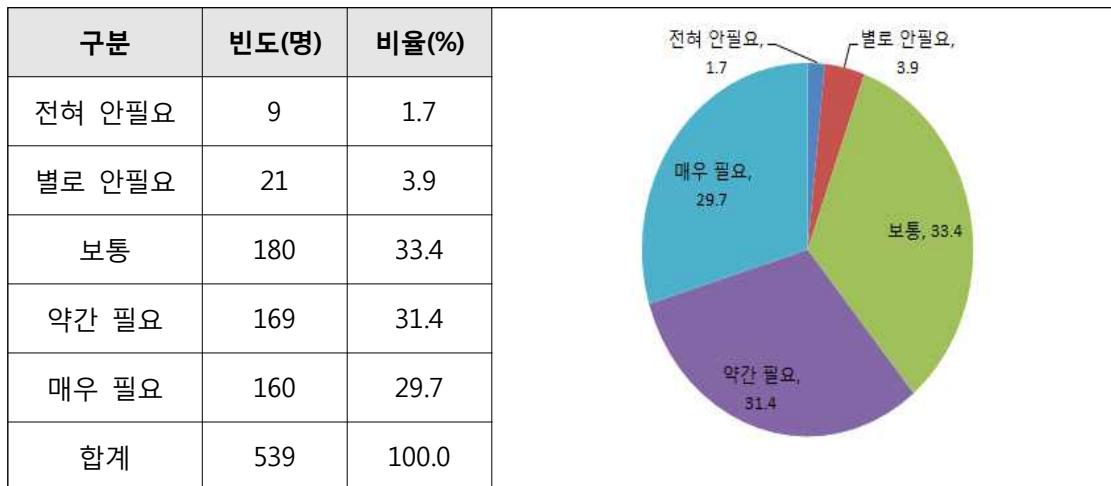
[표 38]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당진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 평균값

문항	평균값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인권친화도시)의 확대	3.98
사회복지 분야 시설 지원 및 확충	3.96
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인권의식 고취	3.83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인권위원회, 인권담당 부서 등)확대	3.83
당진시 공무원들의 인권행정 감수성 향상	3.82
인권관련 시민단체 활성화	3.73
인권관련 전문가의 확대 및 충원	3.69

(1: 전혀 안필요, 3: 보통, 5: 매우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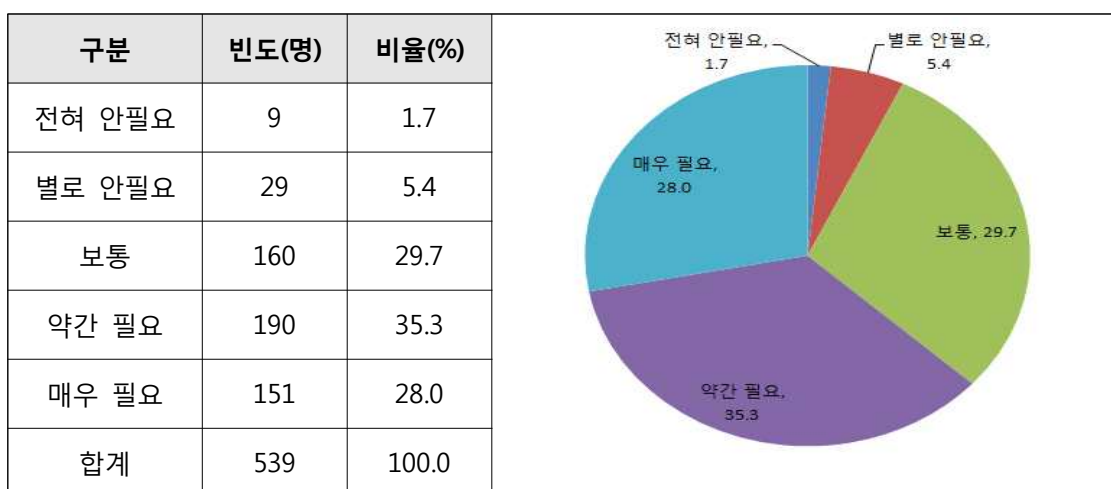
- ‘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인권의식 고취’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180명(33.4%), 약간 필요 169명(31.4%), 매우필요 160명(29.7%), 별로 안필요 21명(3.9%), 전혀 안필요 9명(1.7%) 순으로 응답함

[표 39] 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인권의식 고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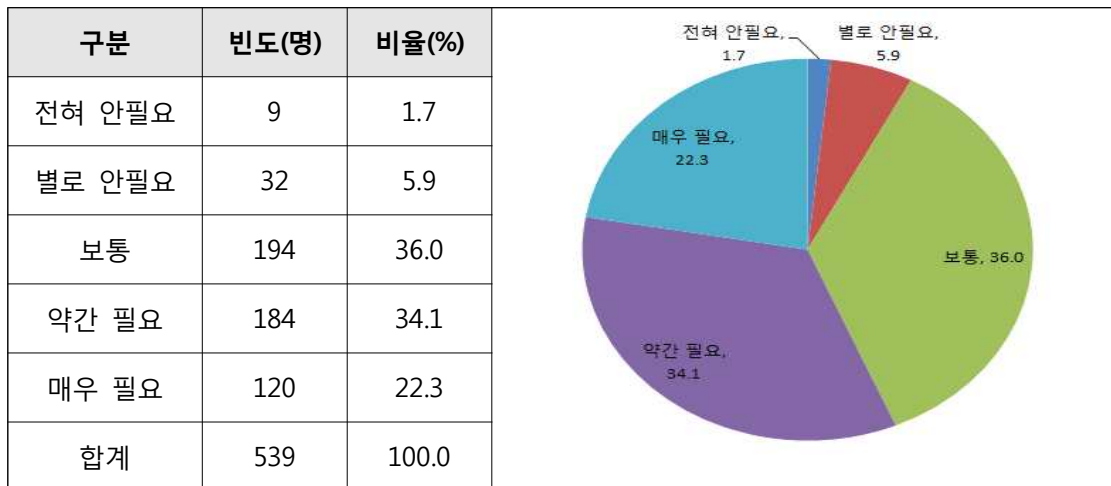
-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의 확대’에 대한 응답으로 약간 필요 190명(35.3%), 보통 160명(29.7%), 매우 필요 151명(28.0%), 별로 안필요 29명(5.4%), 전혀 안필요 9명(1.7%) 순으로 응답함

[표 40]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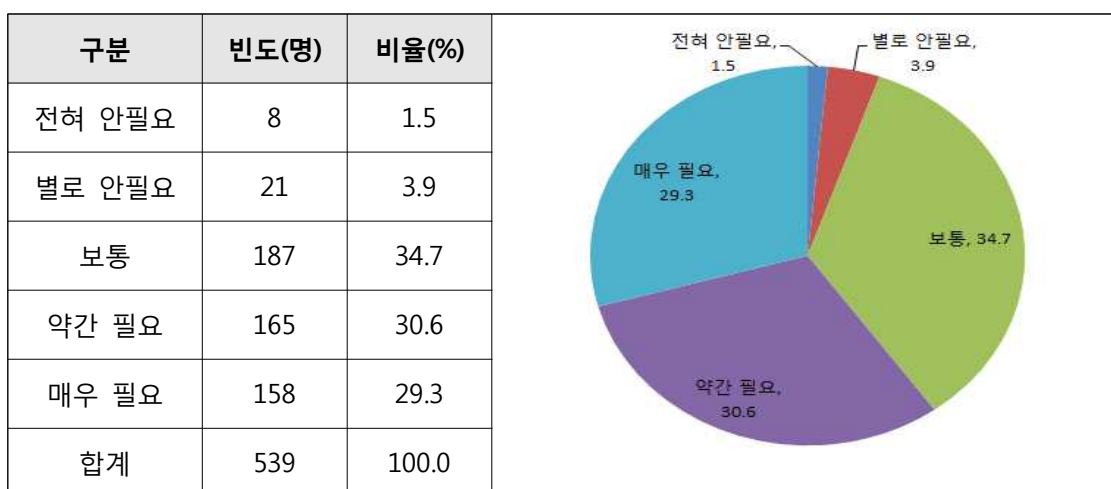
- ‘인권관련 전문가의 확대 및 충원’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194명(36.0%), 약간 필요 184명(34.1%), 매우 필요 120명(22.3%), 별로 안필요 32명(5.9%), 전혀 안필요 9명(1.7%) 순으로 응답함

[표 41] 인권관련 전문가의 확대 및 충원



- ‘당진시 공무원들의 인권행정 감수성 향상’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187명(34.7%), 약간 필요 165명(30.6%), 매우 필요 158명(29.3%), 별로 안필요 21명(3.9%), 전혀 안필요 8명(1.5%) 순으로 응답함

[표 42] 당진시 공무원들의 인권행정 감수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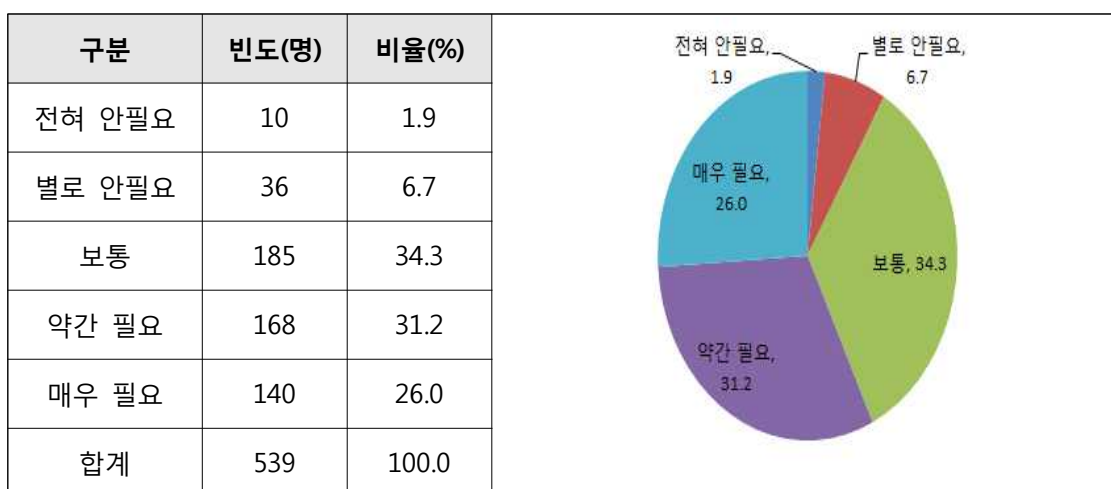
- ‘사회복지분야 시설 지원 및 확충’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필요 186명(34.5%), 약간 필요 171명(31.7%), 보통 162명(30.1%), 별로 안필요 17명(3.2%), 전혀 안필요 3명(0.6%) 순으로 응답함

[표 43] 사회복지분야 시설 지원 및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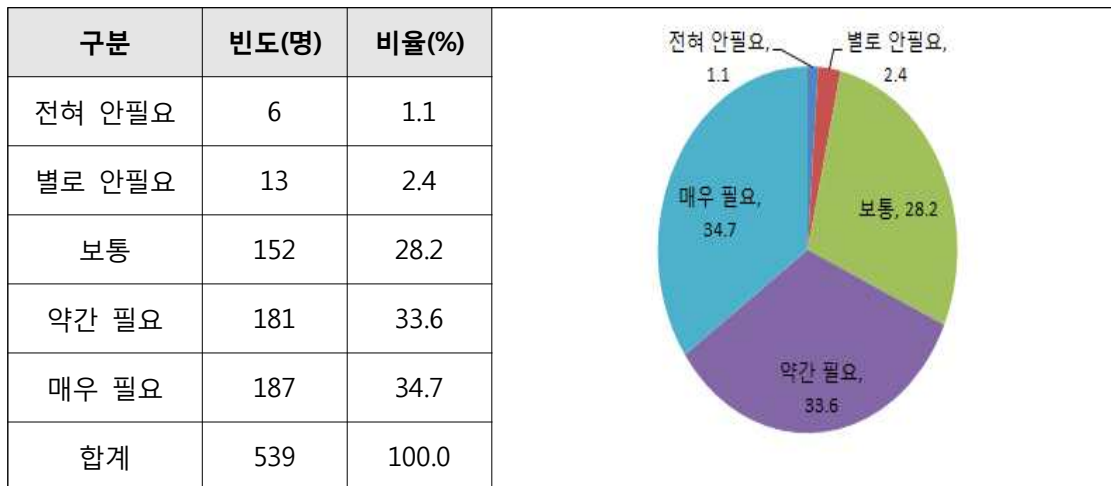
- ‘인권관련 시민단체 활성화’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185명(34.3%), 약간 필요 168명(31.2%) 매우 필요 140명(26.0%), 별로 안필요 36명(6.7%), 전혀 안필요 10명(1.9%) 순으로 응답함

[표 44] 인권관련 시민단체 활성화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대’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필요 187명(34.7%), 약간 필요 181명(33.6%), 보통 152명(28.2%), 별로 안필요 13명(2.4%), 전혀 안필요 6명(1.1%) 순으로 응답함

[표 45]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대



■ 당진시에서 시민을 위한 인권분야의 중요도

- 안전한 생활보장(4.40), 오염방자·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권리(4.30), 쾌적하고 안전하며 부담 가능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4.27), 노동기본권·고용안전 및 적정 임금 보장(4.26),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4.22), 자유로운 이동 및 편리하게 공공시설에 접근할 권리(4.20), 공중위생 및 보건 관리·공공 의료 체계 지원(4.19), 기본적 사회보장서비스를 누릴 권리(4.11)에 대한 문항은 보통 수준보다 높게 응답하였으며, 중요한 사항으로 나타남
- 예술 활동 지원·충분한 여가 기회 및 장소 제공(3.92), 시정 정보 공개·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 보장(3.89), 자유로운 의사표현·집회 및 결사의 자유(3.88),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3.82)에 대한 문항은 보통수준으로 나타남

[표 46] 당진시에서 시민을 위한 인권분야의 중요도 평균값

문항	평균값
범죄, 폭력, 화재,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보장	4.40
오염 방지,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권리	4.30
쾌적하고 안전하며 부담 가능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	4.27
노동기본권, 고용안전 및 적정 임금 보장	4.26
학교·성인·평생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	4.22
자유로운 이동 및 편리하게 공공시설에 접근할 권리	4.20
공중위생 및 보건 관리, 공공 의료 체계 지원	4.19
기본적 사회보장서비스를 누릴 권리	4.11
예술 활동 지원, 충분한 여가 기회 및 장소 제공	3.92
시정 정보 공개, 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 보장	3.89
자유로운 의사표현(인터넷), 집회 및 결사의 자유	3.88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3.82

(1: 전혀 안중요, 3: 보통, 5: 매우 중요)

- ‘시정 정보 공개, 정책 참여 기회 보장’에 대한 응답으로 약간 중요 184명(34.1%), 보통 173명(32.1%), 매우 중요 160명 (29.7%), 별로 안중요 18명(3.3%), 전혀 안중요 4명(0.7%) 순으로 응답함

[표 47] 시정 정보 공개, 정책 참여 기회 보장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안중요	4	.7
별로 안중요	18	3.3
보통	173	32.1
약간 중요	184	34.1
매우 중요	160	29.7
합계	5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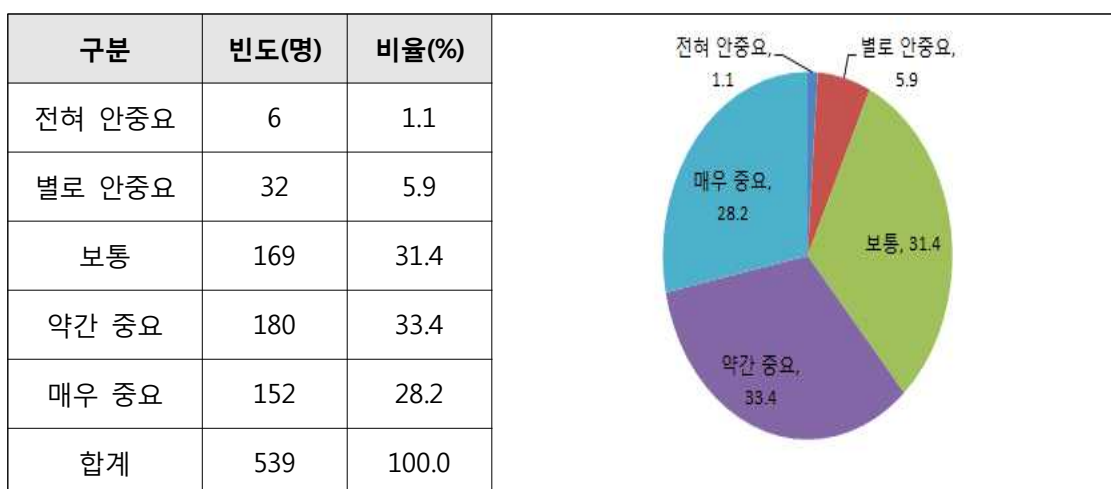
- ‘자유로운 의사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응답으로 약간 중요 196명(36.4%), 보통 176명(32.7%), 매우 중요 149명(27.6%), 별로 안중요 17명(3.2%), 전혀 안중요 1명(0.2%) 순으로 응답함

[표 48] 자유로운 의사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누릴 권리’에 대한 응답으로 약간 중요 180명(33.4%), 보통 169명(31.4%), 매우 중요 152명(28.2%), 별로 안중요 32명(5.9%), 전혀 안중요 6명(1.1%) 순으로 응답함

[표 49]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누릴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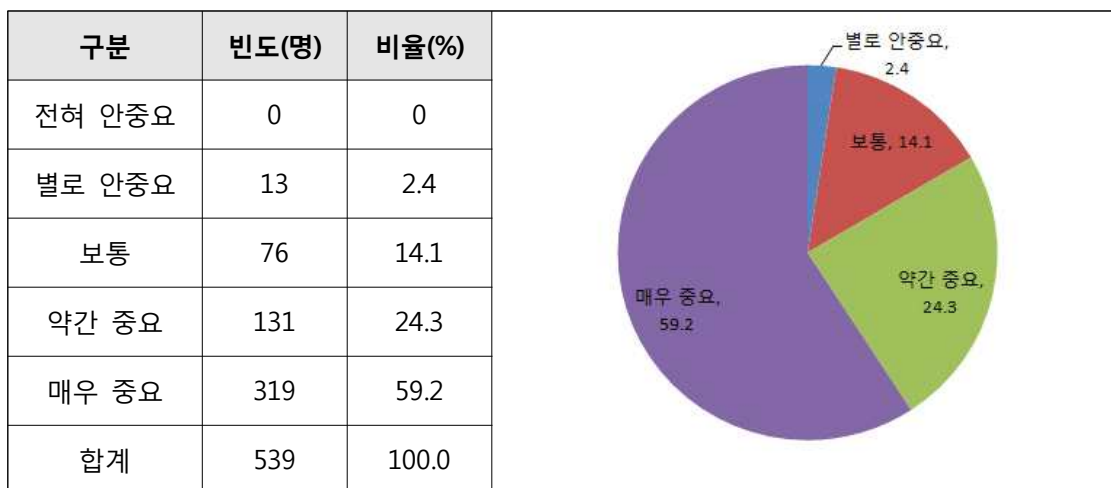
- ‘기본적 사회보장서비스 누릴 권리’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중요 218명 (40.4%), 약간 중요 183명(34.0%), 보통 121명(22.4%), 별로 안중요 14명 (2.6%), 전혀 안중요 3명(0.6%) 순으로 응답함

[표 50] 기본적 사회보장서비스 누릴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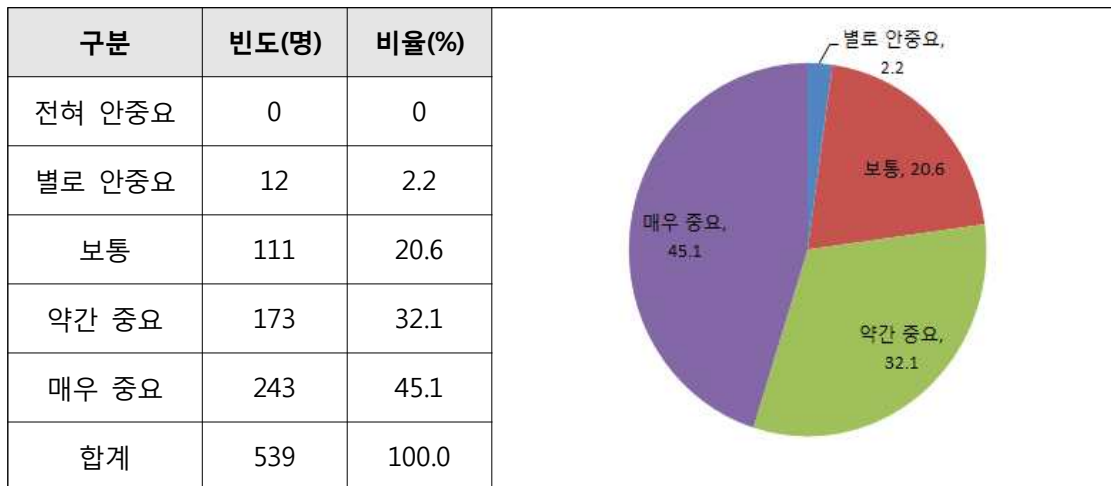
- ‘범죄, 폭력, 화재,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보장’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중요 319명(59.2%), 약간 중요 131명(24.3%), 보통 76명(14.1%), 별로 안중요 13명(2.4%), 전혀 안중요 0명(0%) 순으로 응답함

[표 51] 범죄, 폭력, 화재,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보장



- ‘자유로운 이동 및 편리하게 공공시설 접근할 권리’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중요 243명(45.1%), 약간 중요 173명(32.1%), 보통 111명(20.6%), 별로 안중요 12명(2.2%) 전혀 안중요 0명(0%) 순으로 응답함

[표 52] 자유로운 이동 및 편리하게 공공시설 접근할 권리



- ‘오염방지, 쾌적한 자연환경 누릴 권리’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중요 289명(53.6%), 약간 중요 143명(26.5%), 보통 90명(16.7%), 별로 안중요 15명(2.8%), 전혀 안중요 2명(0.4%) 순으로 응답함

[표 53] 오염방지, 쾌적한 자연환경 누릴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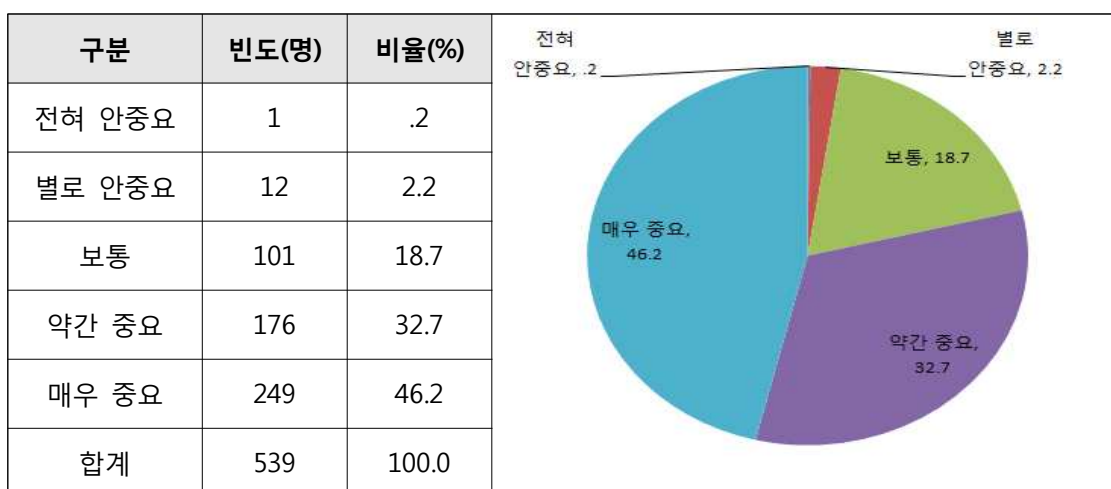
- ‘노동기본권, 고용안전 및 임금 보장’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중요 270명 (50.1%), 약간 중요 154명(28.6%), 보통 103명(19.1%), 별로 안중요 9명 (1.7%), 전혀 안중요 3명(0.6%) 순으로 응답함

[표 54] 노동기본권, 고용안전 및 임금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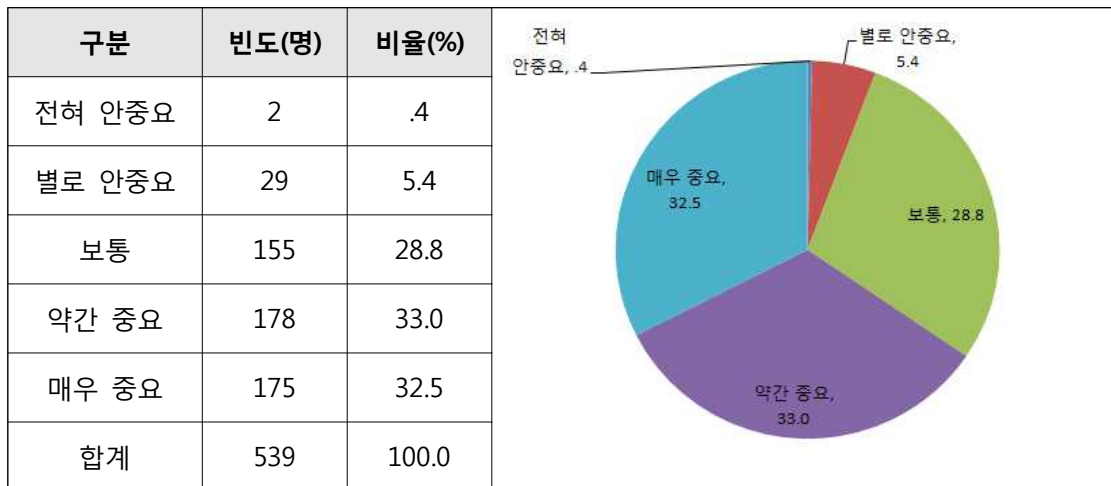
- ‘학교·성인·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등 교육기회 제공’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중요 249명(46.2%), 약간 중요 176명(32.7%), 보통 101명(18.7%), 별로 안중요 12명(2.2%), 전혀 안중요 1명(0.2%) 순으로 응답함

[표 55] 학교·성인·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등 교육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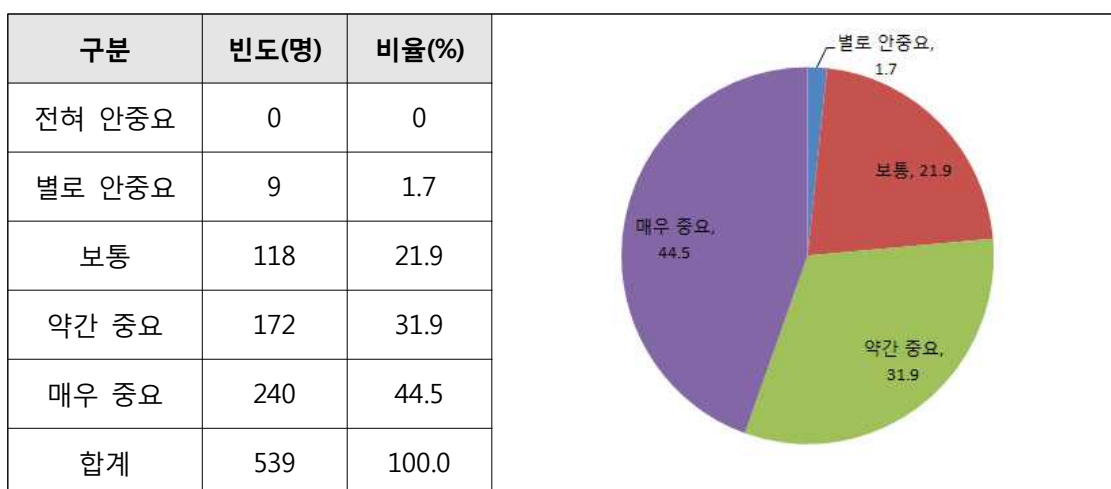
- ‘예술활동 지원, 충분한 여가 기회 및 장소 제공’에 대한 응답으로 약간 중요 178명(33.0%), 매우 중요 175명(32.5%), 보통 155명(28.8%), 별로 안중요 29명(5.4%), 전혀 안중요 2명(0.4%) 순으로 응답함

[표 56] 예술활동 지원, 충분한 여가 기회 및 장소 제공



- ‘공중위생 및 보건 관리, 공공의료 체계 지원’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중요 240명(44.5%), 약간 중요 172명(31.9%), 보통 118명(21.9%), 별로 안중요 9명(1.7%), 전혀 안중요 0명(0%) 순으로 응답함

[표 57] 공중위생 및 보건 관리, 공공의료 체계 지원



- ‘쾌적하고 안전하며 부담 가능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중요 269명(49.9%), 약간 중요 153명(28.4%), 보통 110명(20.4%), 별로 안중요 6명(1.1%), 전혀 안중요 1명(0.2%) 순으로 응답함

[표 58] 쾌적하고 안전하며 부담 가능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



3) 당진시의 인권 침해와 차별

■ 인권취약계층 분야별 인권 존중 인지도

- 노인(3.41), 여성(3.28), 일반 당진시민(3.27), 아동 및 청소년(3.22), 장애인(3.21), 요양원 등 사회복지 시설 생활자(3.10), 결혼이주여성(3.05) 순이며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2.98), 노동자(2.91), 미혼모(2.86), 비정규직 노동자(2.81), 이주노동자(2.78), 전과자(2.70), 병력자(2.63)에 대한 인권 존중 인지도는 보통 이하 수준으로 응답하여 인권 존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59] 인권취약계층 분야별 인권 존중 인지도 평균값

인권취약계층	평균값
노인	3.41
여성	3.28
일반 당진시민	3.27
아동 및 청소년	3.22
장애인	3.21
요양원 등 사회복지 시설 생활자	3.10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정)	3.05
북한이탈주민	2.98
노동자	2.91
미혼모(한부모가족)	2.86
비정규직 노동자	2.81
이주(외국인)노동자	2.78
전과자	2.70
병력자(에이즈, 정신질환자, 한센병 등)	2.63

(1: 전혀 존중 안됨, 3: 보통, 5: 매우 존중됨)

- 여성분야 평균값은 3.18점(여성 응답자 164명)으로 전체 평균값 3.28점(539명)과 비슷한 수준이며, 노인분야 평균값은 3.39점(노인 응답자 88명)으로 전체 평균값 3.41점(539명)과 비슷한 수준임
- 장애인분야 평균값은 2.95점(장애인 응답자 20명)으로 전체 평균값 3.21점(539명)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나, 아동·청소년분야 평균값은 3.42점(아동·청소년 응답자 45명)으로 전체 평균값 3.22(539명)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임
- 다문화가족분야 평균값은 3.54점(다문화 가족 응답자 13명)으로 전체 평균값 3.05(539명) 비해 다소 높은 편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분야 평균값은 2.39점(비정규직노동자 70명)으로 전체 평균값 2.81(539점)에 비해 낮은 편임. 일반 시민 평균값은 3.31점(일반시민 응답자139명)으로 전체 평균값 3.27(539명)과 비슷한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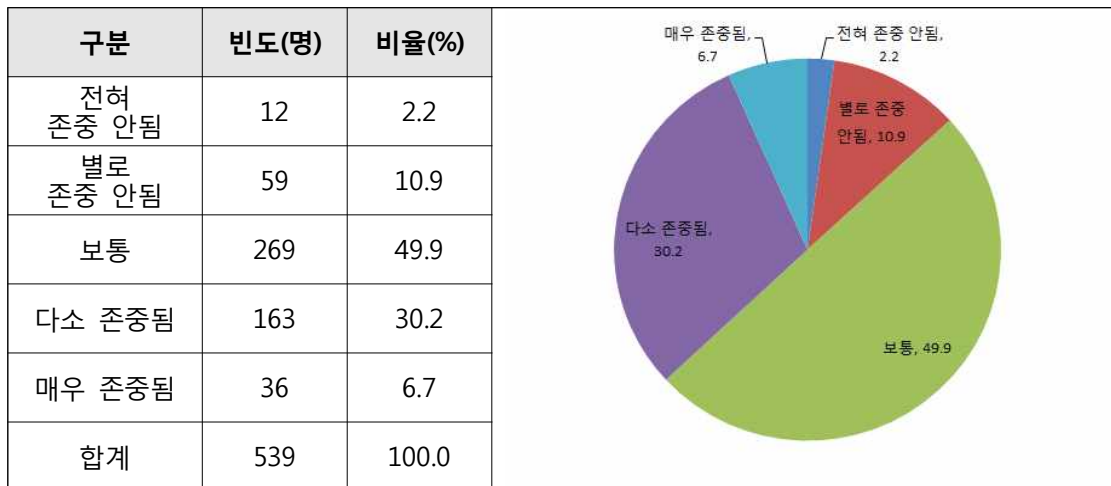
[표 60] 인권취약계층 분야별 인권존중 인지도 평균값 비교(분야별/전체)

대상	분야별 평균값	전체 평균값
여성	3.18 (164명)	3.28 (539명)
노인	3.39 (88명)	3.41 (539명)
장애인	2.95 (20명)	3.21 (539명)
아동 및 청소년	3.42 (45명)	3.22 (539명)
다문화가족(여성)	3.54 (13명)	3.05 (539명)
비정규직노동자	2.39 (70명)	2.81 (539명)
일반시민	3.31 (139명)	3.27 (539명)

(1: 전혀 존중 안됨, 3: 보통, 5: 매우 존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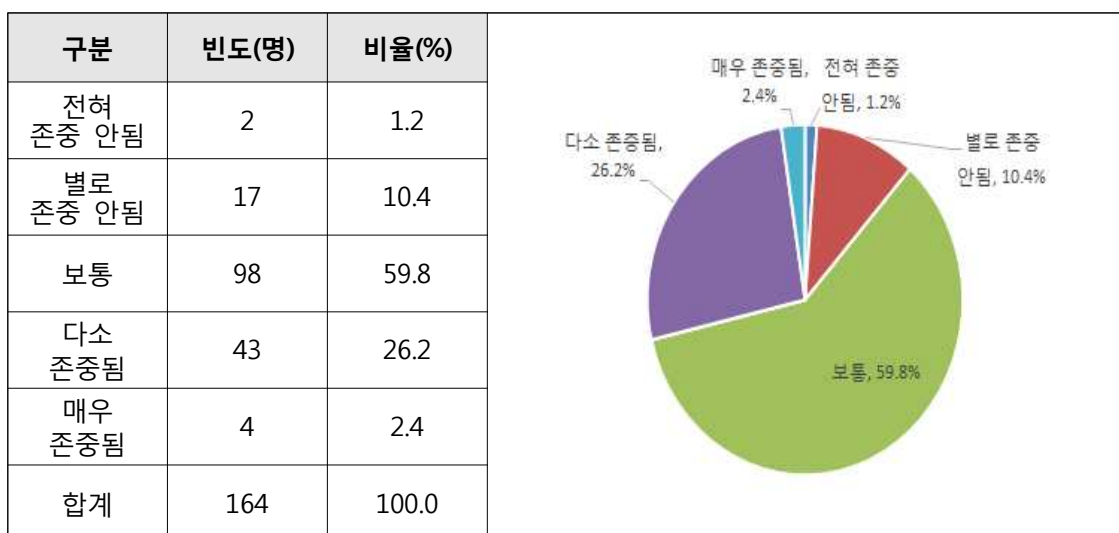
- ‘당진시에서 여성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269명(49.9%), 다소 존중됨 163명(30.2%), 별로 존중 안됨 59명(10.9%), 매우 존중됨 36명(6.7%), 전혀 존중 안됨 12명(2.2%) 순으로 응답함

[표 61] 여성인권 존중



- 여성인권 존중에 대한 여성응답자(164명)에 대한 응답으로는 보통 98명(59.8%), 다소 존중됨 43명(26.2%), 별로 존중 안됨 17명(10.4%), 매우 존중됨 4명(2.4%), 전혀 존중 안됨 2명(1.2%)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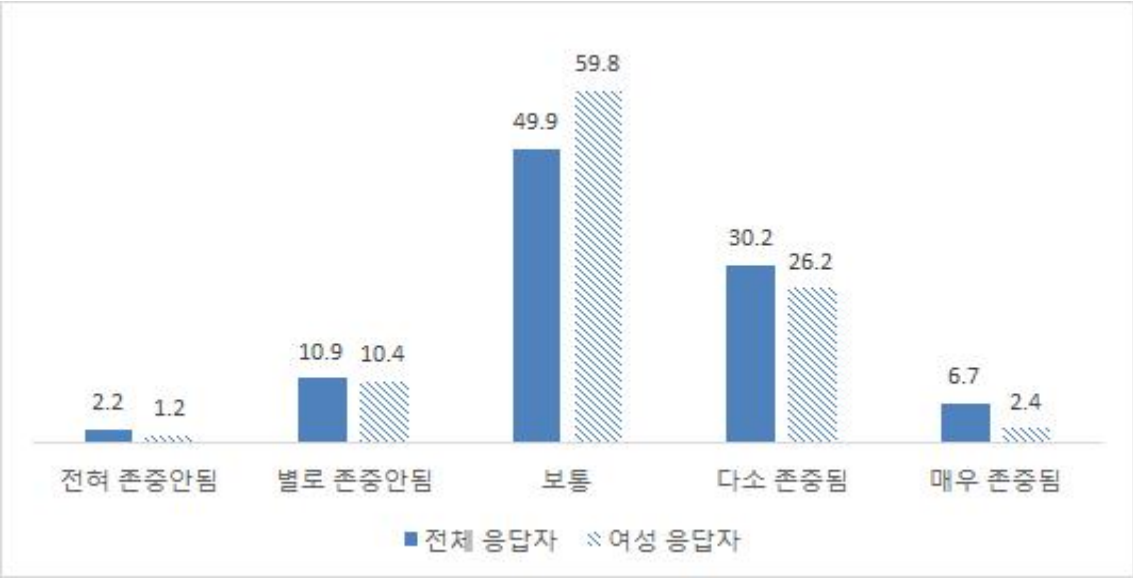
[표 62] 여성인권 존중에 대한 여성 응답자의 교차분석



- 여성인권 존중에 대한 전체 응답자, 여성 응답자 비교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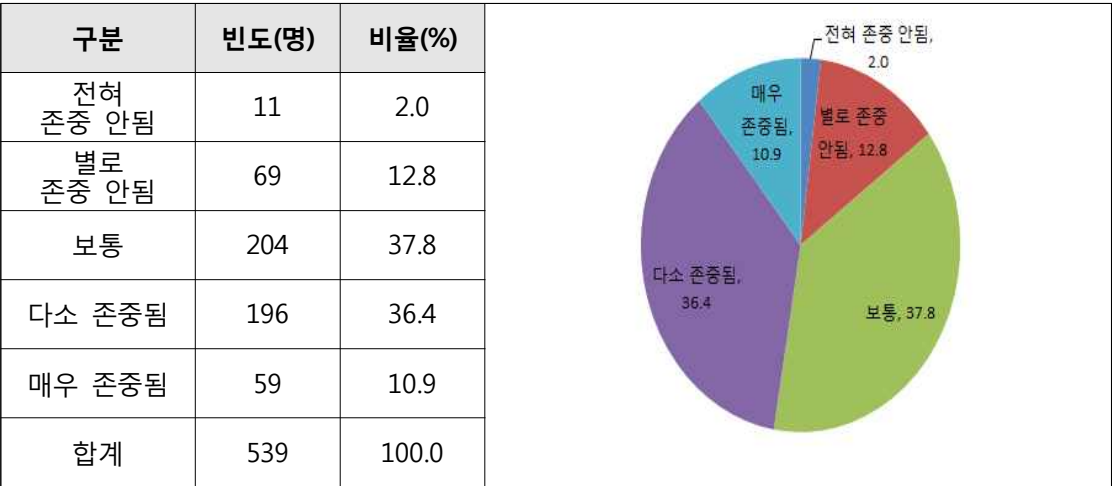
[그림 15] 여성인권 존중에 대한 응답자 비교(전체/여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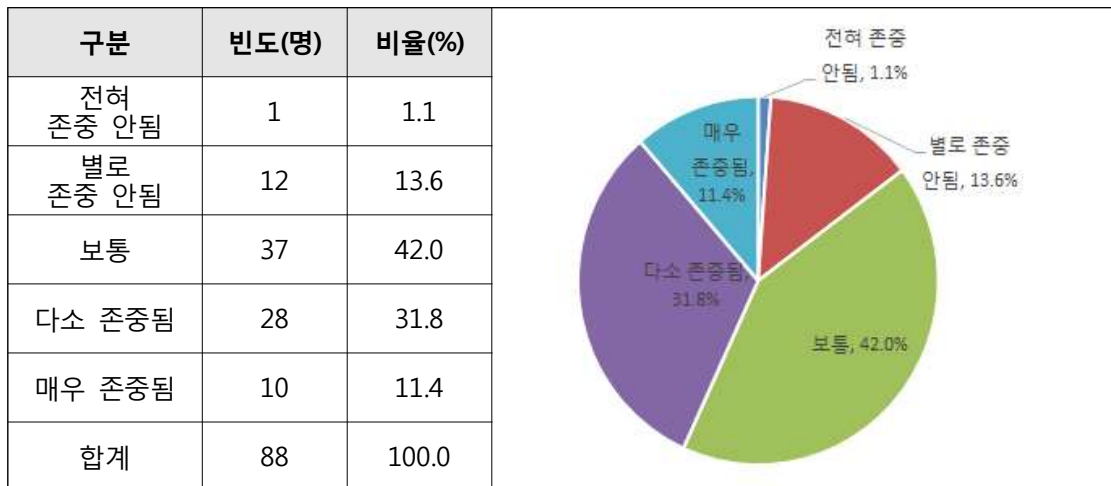
- ‘당진시에서 노인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204명(37.8%), 다소 존중됨 196명(36.4%), 별로 존중 안됨 69명(12.8%), 매우 존중됨 59명(10.9%), 전혀 존중 안됨 11명(2.0%) 순으로 응답함

[표 63] 노인인권 존중



- 노인인권 존중에 대한 노인 응답자(88명)에 대한 응답으로는 보통 37명(42.0%), 다소 존중됨 28명(31.8%), 별로 존중 안됨 12명(13.6%), 매우 존중됨 10명(11.4%), 전혀 존중 안됨 1명(1.1%)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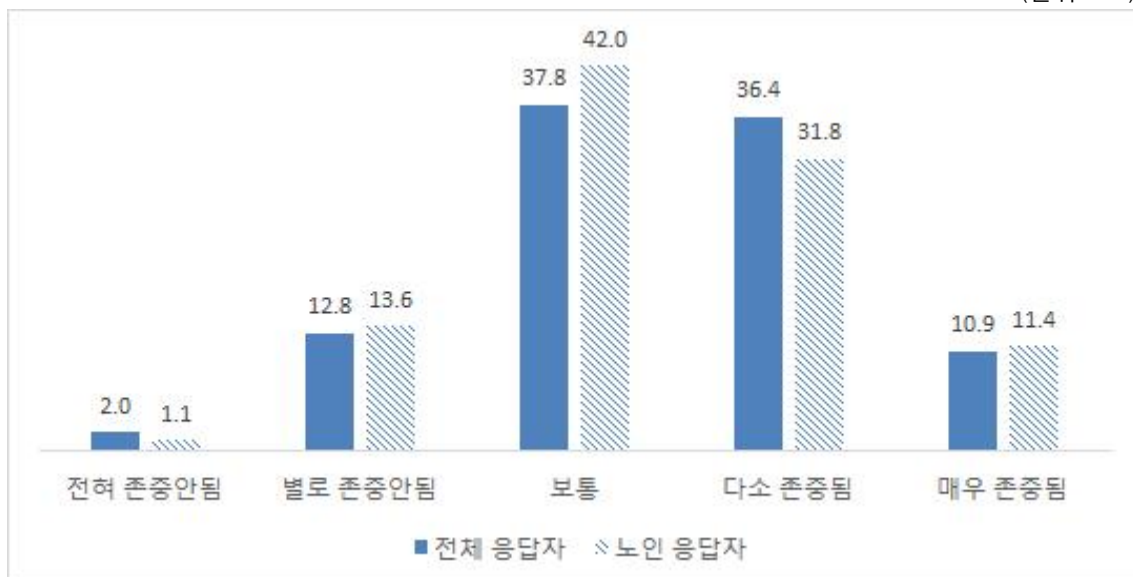
[표 64] 노인인권 존중에 대한 노인 응답자의 교차분석



- 노인인권 존중에 대한 전체 응답자, 노인 응답자 비교는 다음과 같음

[그림 16] 노인인권 존중에 대한 응답자 비교(전체/노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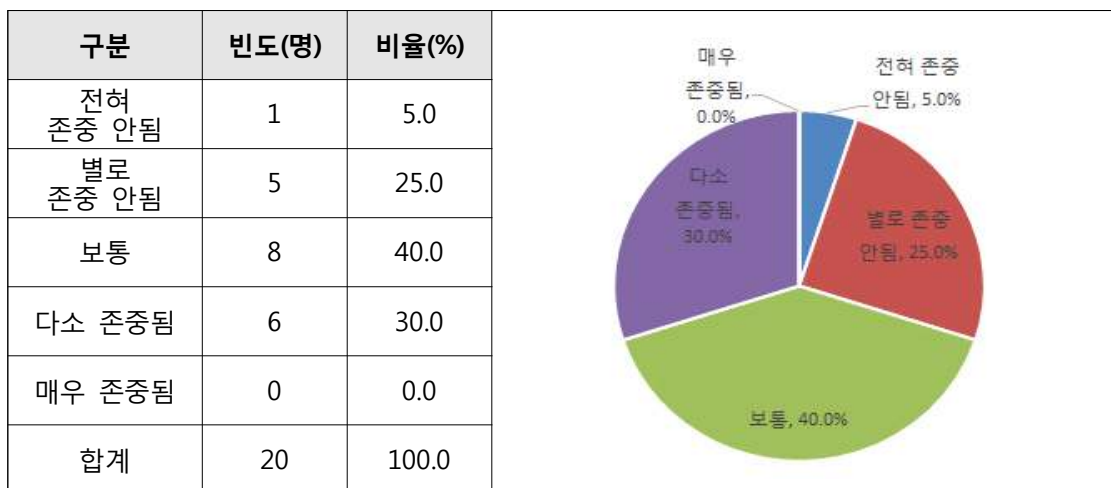
- ‘당진시에서 장애인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199명(36.9%), 다소 존중됨 159명(29.5%), 별로 존중 안됨 105명(19.5%), 매우 존중됨 53명(9.8%), 전혀 존중 안됨 23명(4.3%) 순으로 응답함

[표 65] 장애인인권 존중



- 장애인인권 존중에 대한 장애인 응답자(20명)에 대한 응답으로는 보통 8명(25.0%), 다소 존중됨 6명(30.0%), 별로 존중 안됨 5명(25.0%) 전혀 존중 안됨 1명(5.0%)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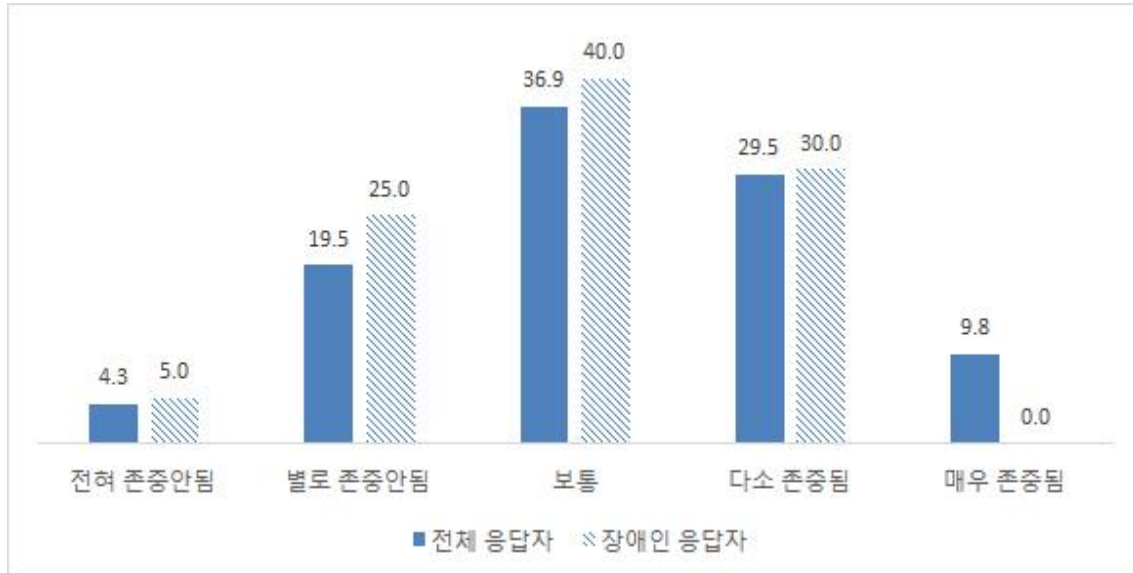
[표 66] 장애인인권 존중에 대한 장애인 응답자의 교차분석



- 장애인인권 존중에 대한 전체 응답자, 장애인 응답자 비교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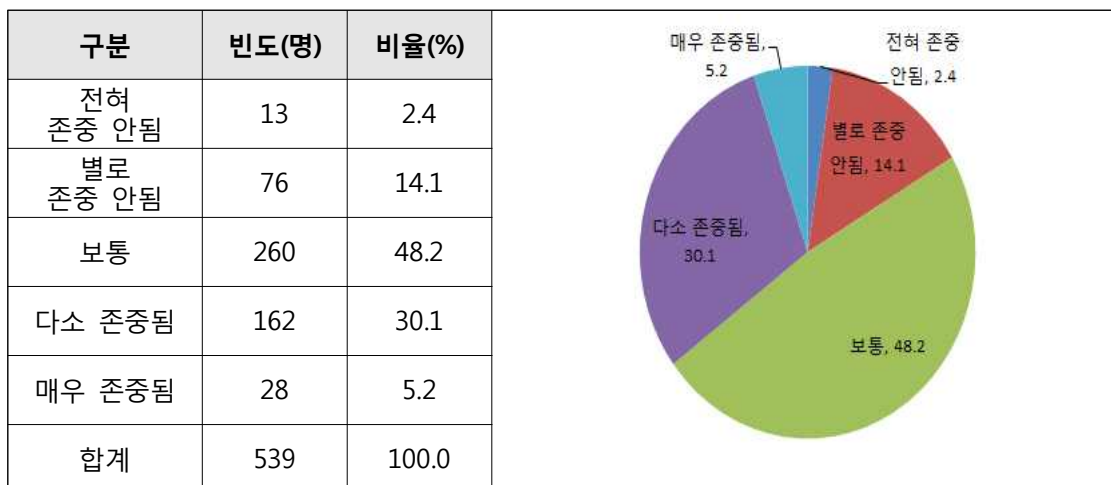
[그림 17] 장애인인권 존중에 대한 응답자 비교(전체/장애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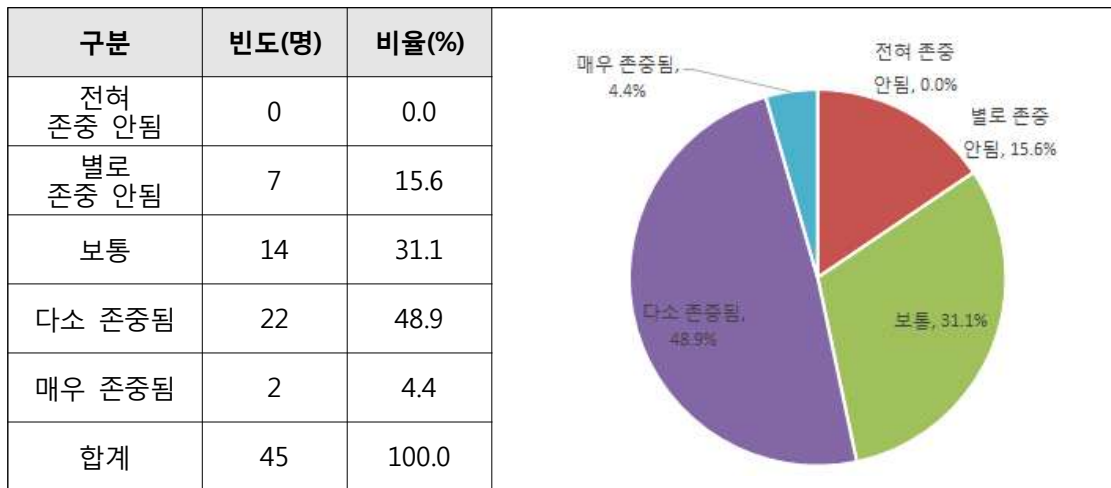
- ‘당진시에서 아동 및 청소년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260명(48.2%), 다소 존중됨 162명(30.1%), 별로 존중 안됨 76명(14.1%), 매우 존중됨 28명(5.2%), 전혀 존중 안됨 13명(2.4%) 순으로 응답함

[표 67] 아동 및 청소년 인권 존중



-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에 대한 아동·청소년 응답자(45명)에 대한 응답으로는 다소 존중됨 22명(48.9%), 보통 14명(31.1%), 별로 존중 안됨 7명(15.6%), 매우 존중됨 2명(4.4%)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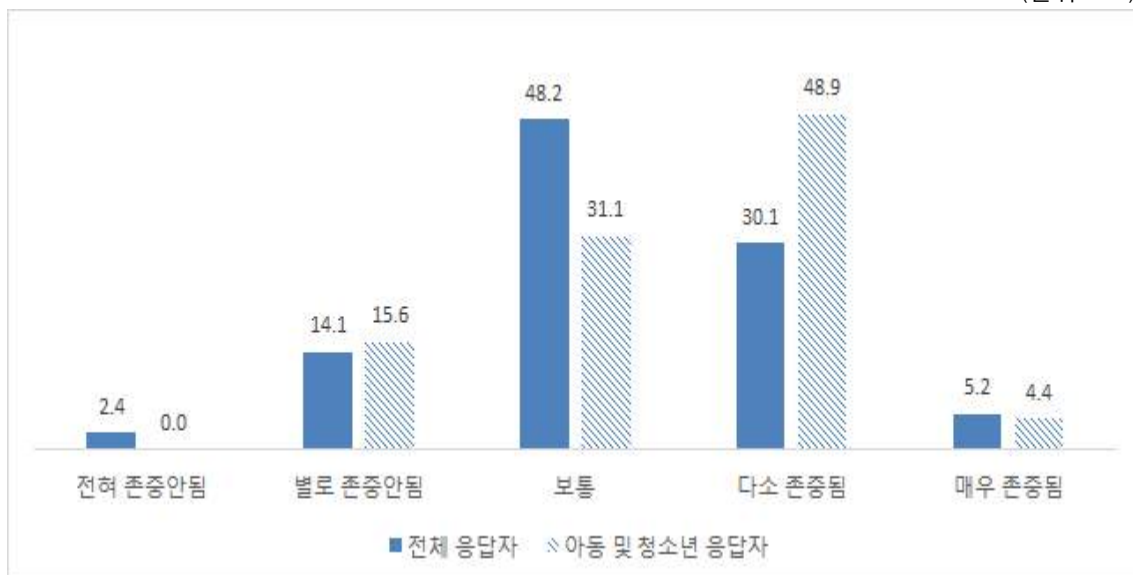
[표 68] 아동 및 청소년 인권 존중에 대한 아동 및 청소년 응답자의 교차분석



-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에 대한 전체 응답자, 아동·청소년 응답자 비교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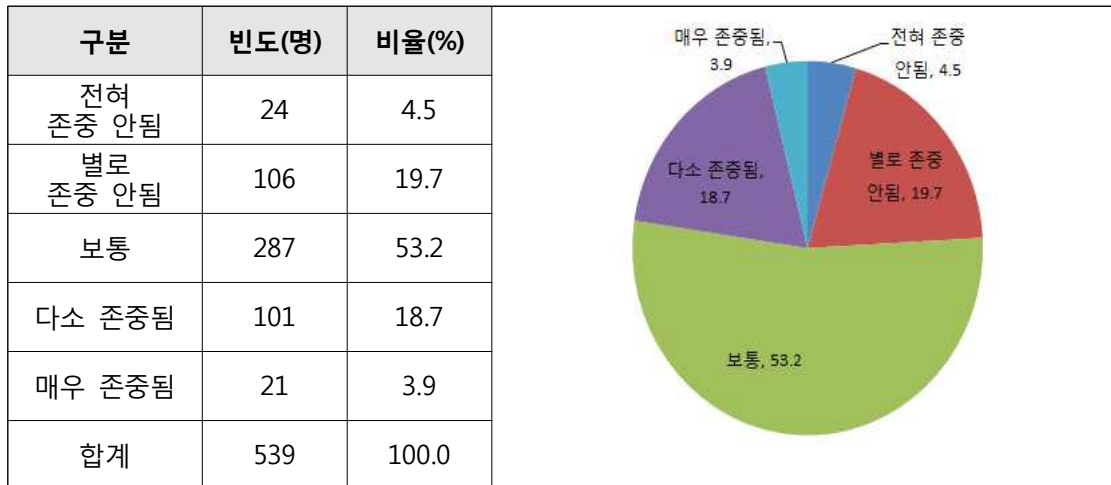
[그림 18] 아동 및 청소년 인권 존중에 대한 응답자 비교(전체/아동 및 청소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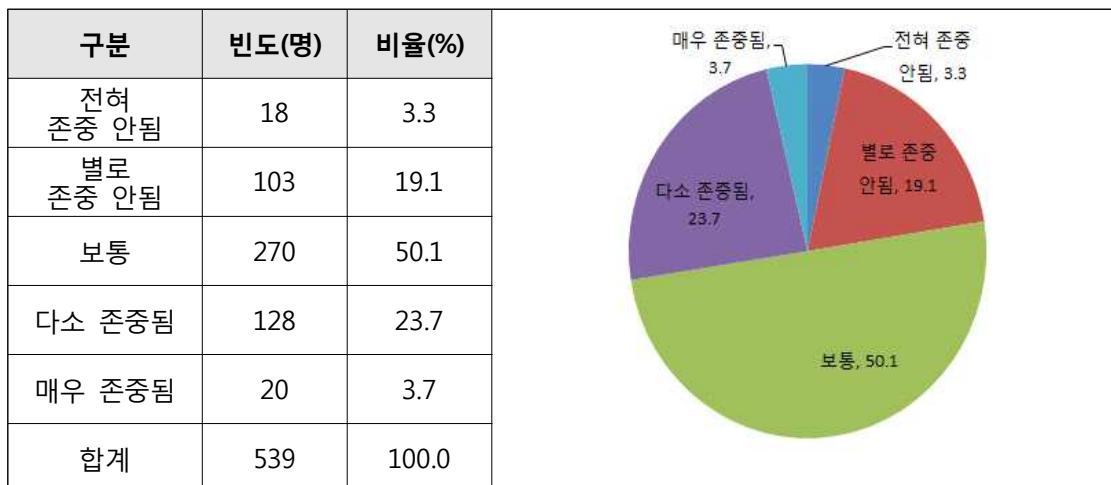
- ‘당진시에서 북한이탈주민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287명(53.2%), 별로 존중 안됨 106명(19.7%), 다소 존중됨 101명(18.7%), 전혀 존중 안됨 24명(4.5%), 매우 존중됨 21명(3.9%) 순으로 응답함

[표 69] 북한이탈주민 인권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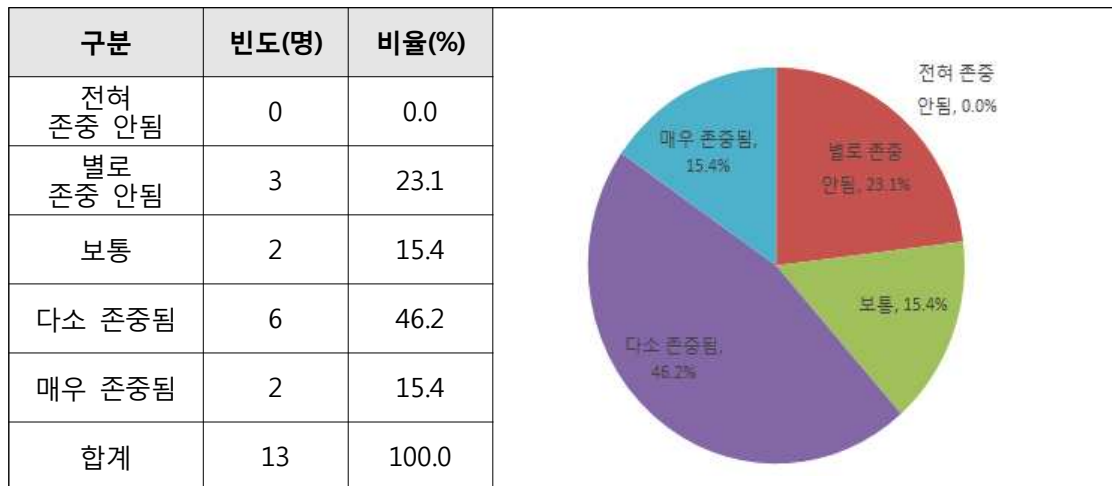
- ‘당진시에서 결혼이주여성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270명(50.1%), 다소 존중됨 128명(23.7%), 별로 존중 안됨 103명(19.1%), 매우 존중됨 20명(3.7%), 전혀 존중 안됨 18명(3.3%) 순으로 응답함

[표 70] 결혼이주여성 인권 존중



- 결혼이주여성 인권 존중에 대한 다문화여성(13명) 응답으로는 다소 존중됨 6명(46.2%), 별로 존중 안됨 3명(23.1%), 보통 2명(15.4%), 매우 존중됨 2명(15.4%)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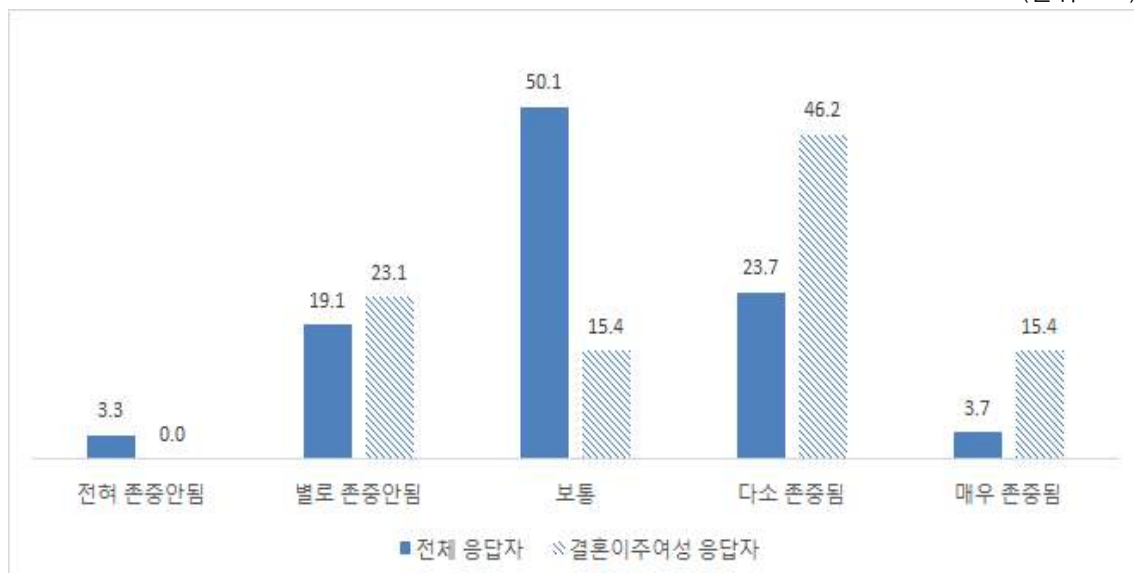
[표 71] 결혼이주여성 인권 존중에 대한 다문화가족(여성) 응답자의 교차분석



- 결혼이주여성 인권 존중에 대한 전체 응답자, 결혼이주여성 응답자 비교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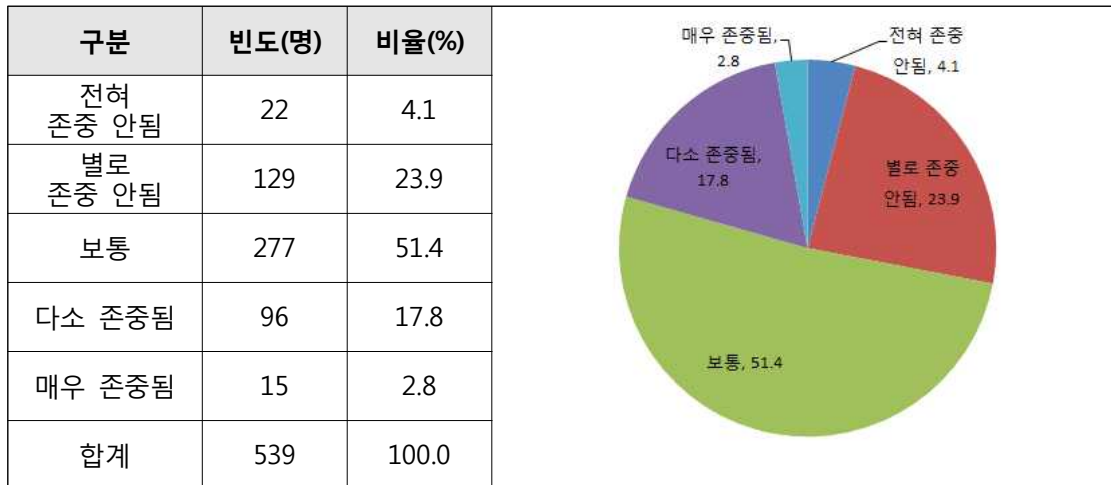
[그림 19] 결혼이주여성 인권 존중에 대한 응답자 비교(전체/결혼이주여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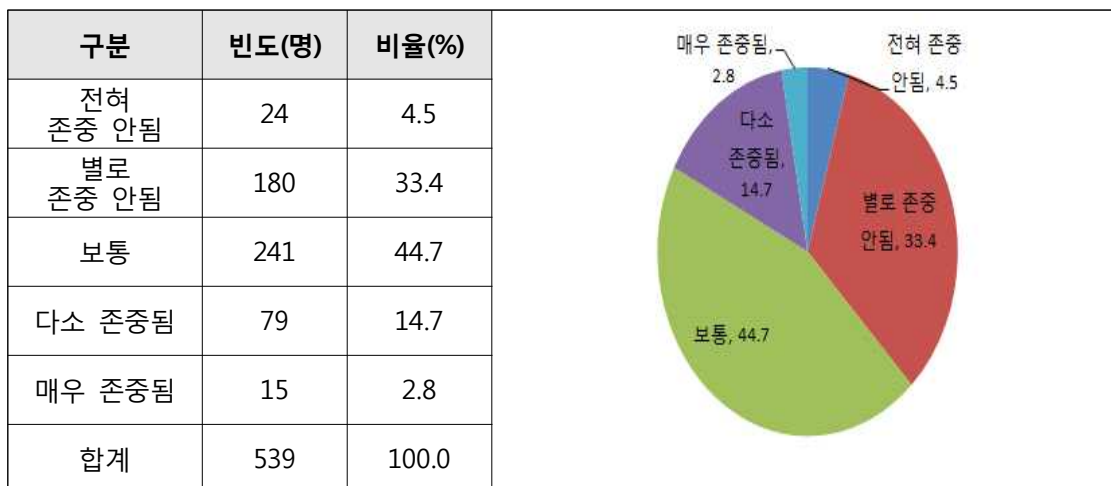
- ‘당진시에서 노동자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277명(51.4%), 별로 존중 안됨 129명(23.9%), 다소 존중됨 96명(17.8%), 전혀 존중 안됨 22명(4.1%), 매우 존중됨 15명(2.8%) 순으로 응답함

[표 72] 노동자 인권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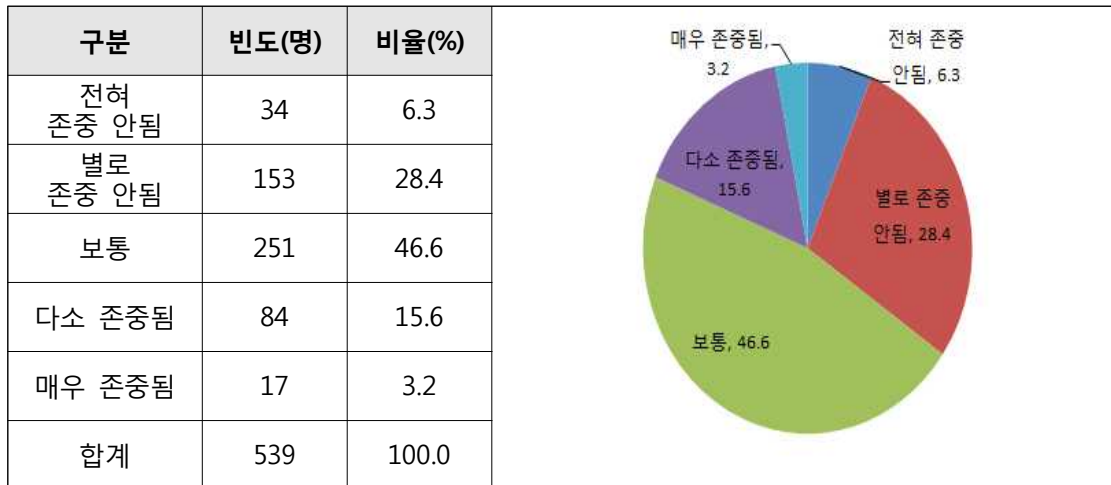
- ‘당진시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241명(44.7%), 별로 존중 안됨 180명(33.4%), 다소 존중됨 79명(14.7%), 전혀 존중 안됨 24명(4.5%), 매우 존중됨 15명(2.8%) 순으로 응답함

[표 73] 이주노동자 인권 존중



- ‘당진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251명(46.6%), 별로 존중 안됨 153명(28.4%), 다소 존중됨 84명(15.6%), 전혀 존중 안됨 34명(6.3%), 매우 존중됨 17명(3.2%) 순으로 응답함

[표 74]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존중



-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존중에 대한 비정규직(70명) 응답으로는 별로 존중 안됨 27명(38.6%), 보통 22명(31.4%), 전혀 존중 안됨 13명(18.6%), 다소 존중됨 6명(8.6%), 매우 존중됨 2명(2.9%)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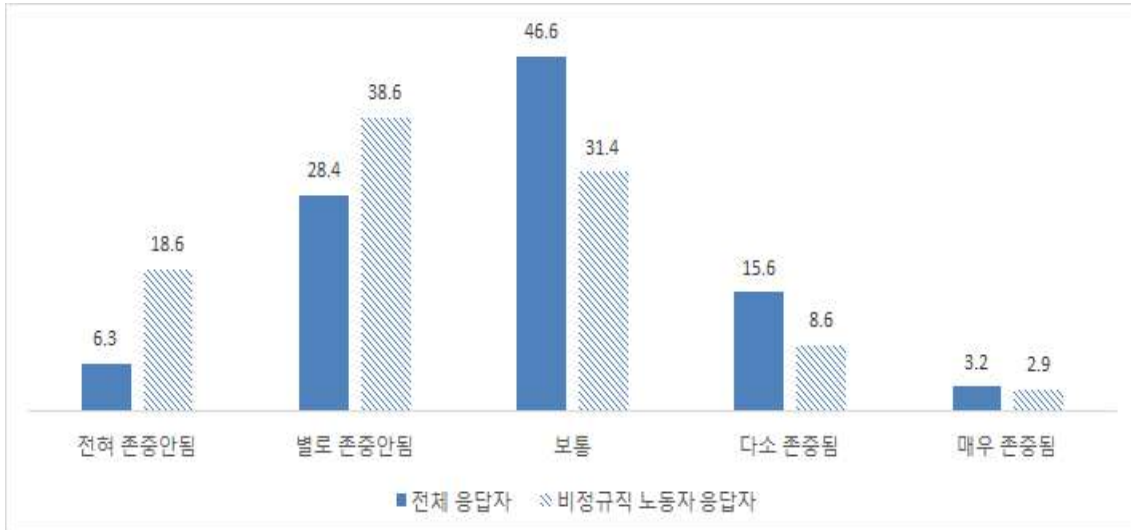
[표 75]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존중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 응답자의 교차분석



- 비정규직 인권 존중에 대한 전체 응답자, 비정규직 응답자 비교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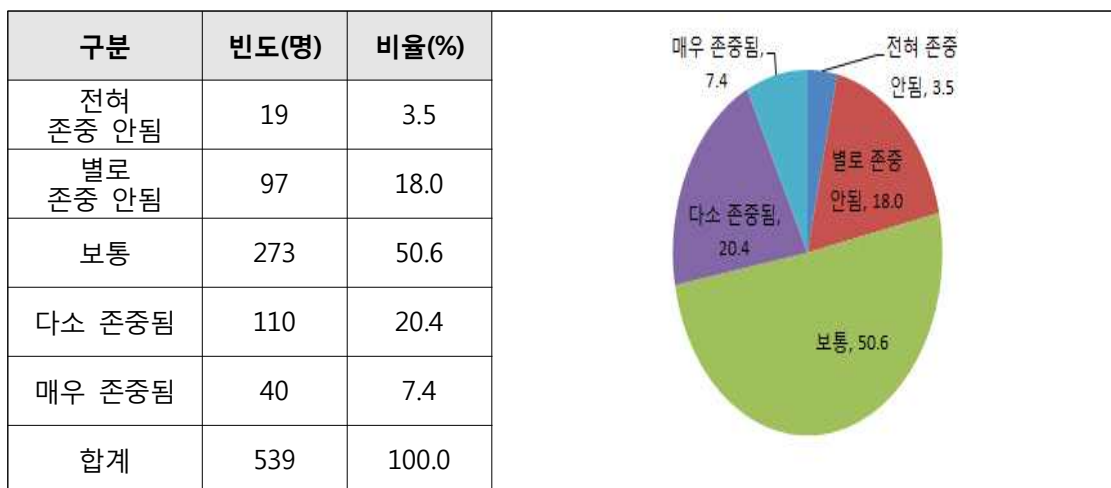
[그림 20]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존중에 대한 응답자 비교(전체/비정규직 노동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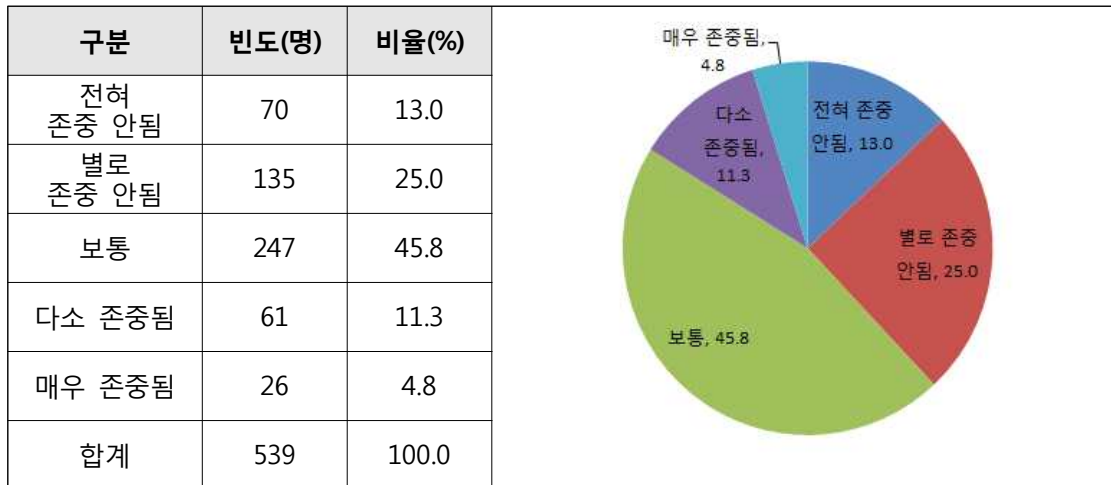
- ‘당진시에서 사회복지 시설 생활자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273명(50.6%), 다소 존중됨 110명(20.4%), 별로 존중 안됨 97명(18.0%), 매우 존중됨 40명(7.4%), 전혀 존중 안됨 19명(3.5%) 순으로 응답함

[표 76] 사회복지 시설 생활자 인권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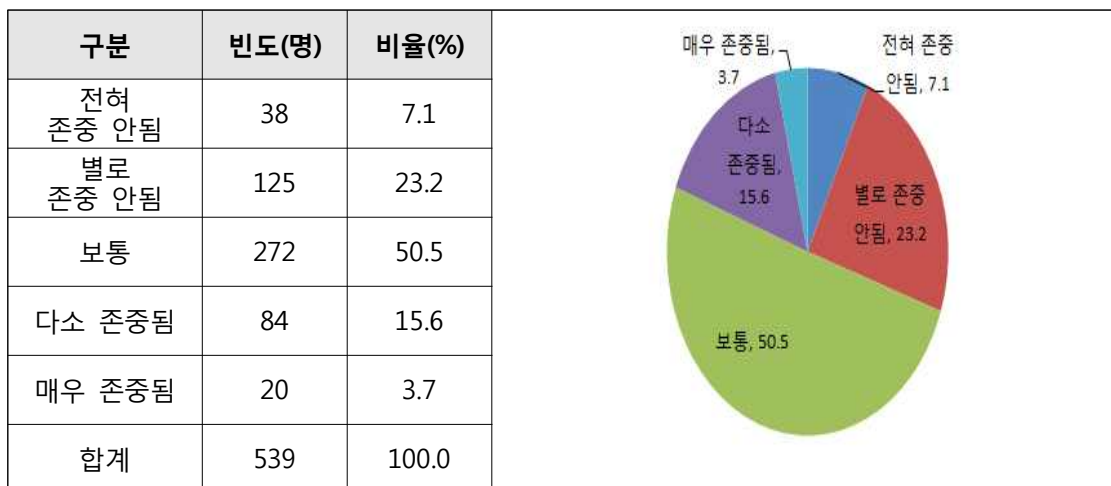
- ‘당진시에서 전과자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247명(45.8%), 별로 존중 안됨 135명(25.0%), 전혀 존중 안됨 70명(13.0%), 다소 존중됨 61명(11.3%), 매우 존중됨 26명(4.8%) 순으로 응답함

[표 77] 전과자 인권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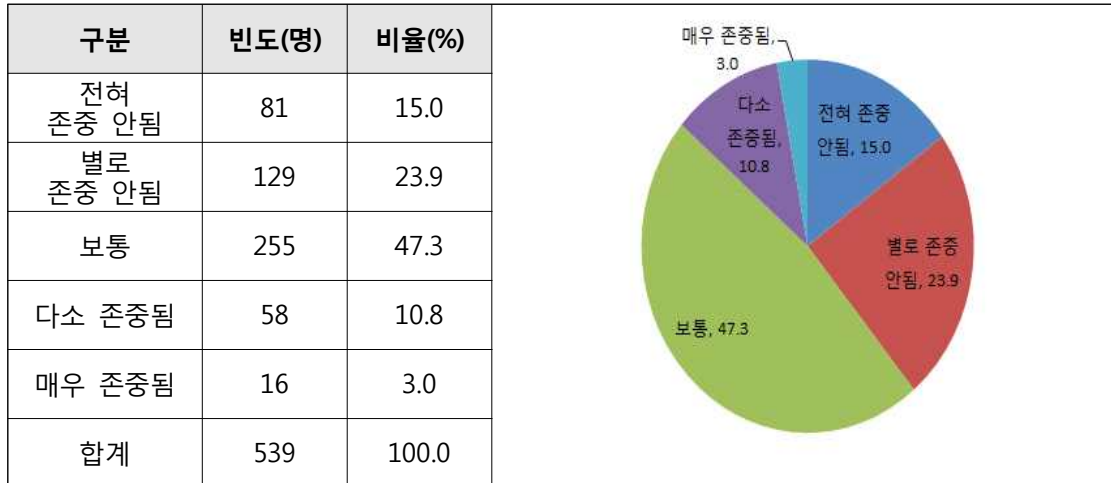
- ‘당진시에서 미혼모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272명(50.5%), 별로 존중 안됨 125명(23.2%), 다소 존중됨 84명(15.6%), 전혀 존중 안됨 38명(7.1%), 매우 존중됨 20명(3.7%) 순으로 응답함

[표 78] 미혼모 인권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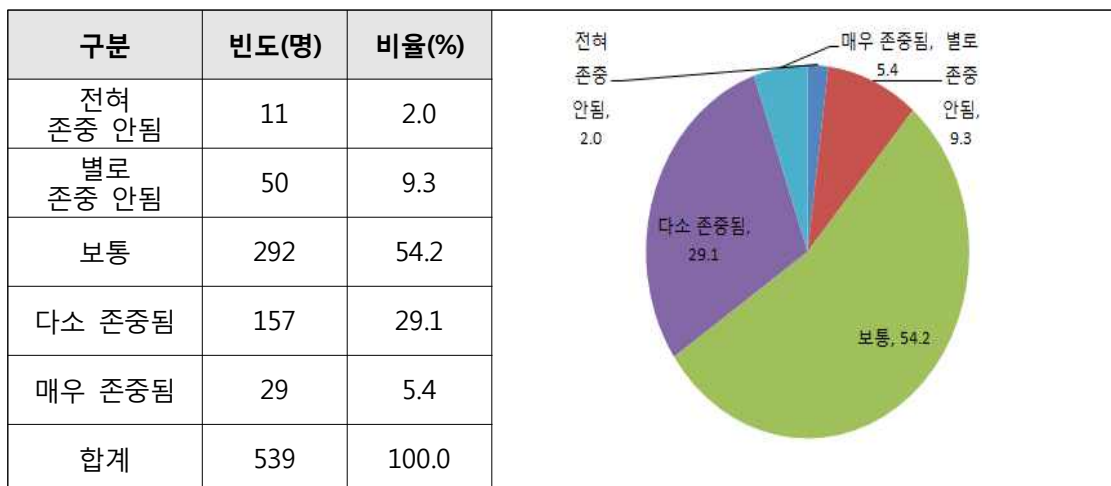
- ‘당진시에서 병력자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255명(47.3%), 별로 존중 안됨 129명(23.9%), 전혀 존중 안됨 81명(15.0%), 다소 존중됨 58명(10.8%), 매우 존중됨 16명(3.0%) 순으로 응답함

[표 79] 병력자 인권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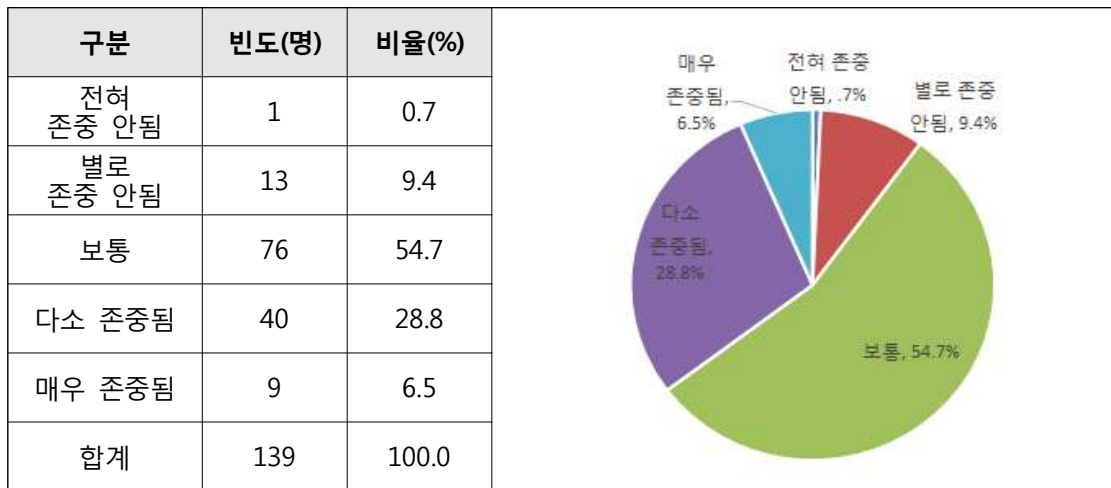
- ‘당진시에서 일반 당진시민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292명(54.2%), 다소 존중됨 157명(29.1%), 별로 존중 안됨 50명(9.3%), 매우 존중됨 29명(5.4%), 전혀 존중 안됨 11명(2.0%) 순으로 응답함

[표 80] 일반 당진시민 인권 존중



- 일반 당진시민 인권 존중에 대한 일반 당진시민(139명) 응답으로는 보통 76명(54.7%), 다소 존중됨 40명(28.8%), 별로 존중 안됨 13명(9.4%), 매우 존중됨 9명(6.5%), 전혀 존중 안됨 1명(0.7%)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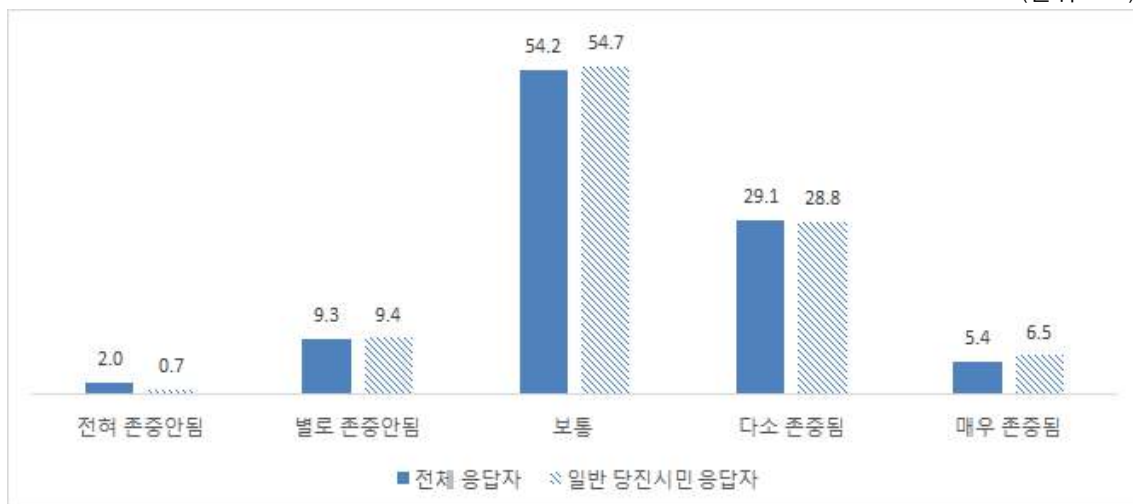
[표 81] 일반 당진시민 인권 존중



- 일반 당진시민 인권 존중에 대한 전체 응답자, 일반 당진시민 응답자 비교는 다음과 같음

[그림 21] 일반 당진시민 인권 존중에 대한 응답자 비교(전체/일반 당진시민)

(단위 : %)



■ 인권 침해 및 차별 유발 요인에 대한 인지도

- 경제적 지위(3.50), 장애(3.47), 학력/학벌(3.43), 용모(3.29), 출신국가(3.27), 병력자(3.24), 나이(3.23), 출신지역(3.12), 정치적 입장(3.12), 성별(3.09), 혼인 상태(3.01), 종교(2.97)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에서 응답하였음

[표 82] 인권 침해 및 차별 유발 요인에 대한 인지도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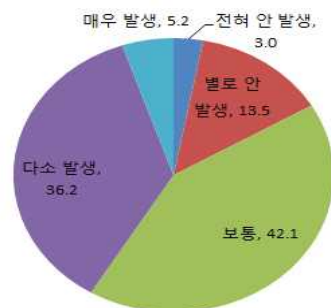
문항	평균값
경제적 지위(직업 소득)	3.50
장애	3.47
학력/학벌	3.43
용모(외모, 키, 몸무게 등)	3.29
출신국가(인종/피부색)	3.27
병력자(에이즈, Hansen병, B형간염 등)	3.24
나이	3.23
출신지역	3.12
정치적 입장(사상/이념 포함)	3.12
성별(임신, 출산 포함)	3.09
혼인상태(이혼, 미혼 등)	3.01
종교	2.97

(1: 전혀 안 발생, 3: 보통, 5: 매우 발생)

- ‘당진시에서 출신국가 때문에 인권 침해나 차별이 얼마나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227명(42.1%), 다소 발생 195명(36.2%), 별로 안 발생 73명(13.5%), 매우 발생 28명(5.2%), 전혀 안 발생 16명(3.0%)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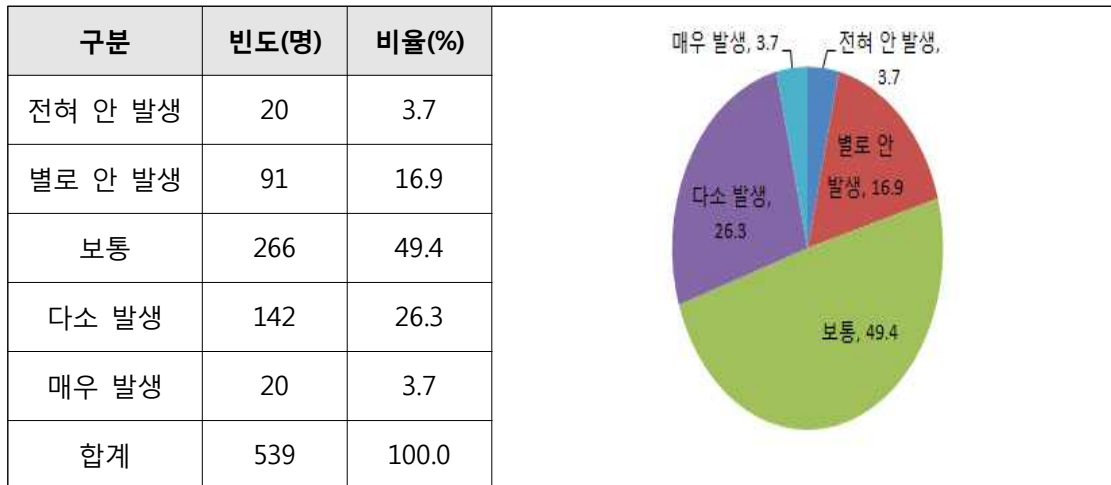
[표 83] 출신국가 인권 침해 및 차별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안 발생	16	3.0
별로 안 발생	73	13.5
보통	227	42.1
다소 발생	195	36.2
매우 발생	28	5.2
합계	5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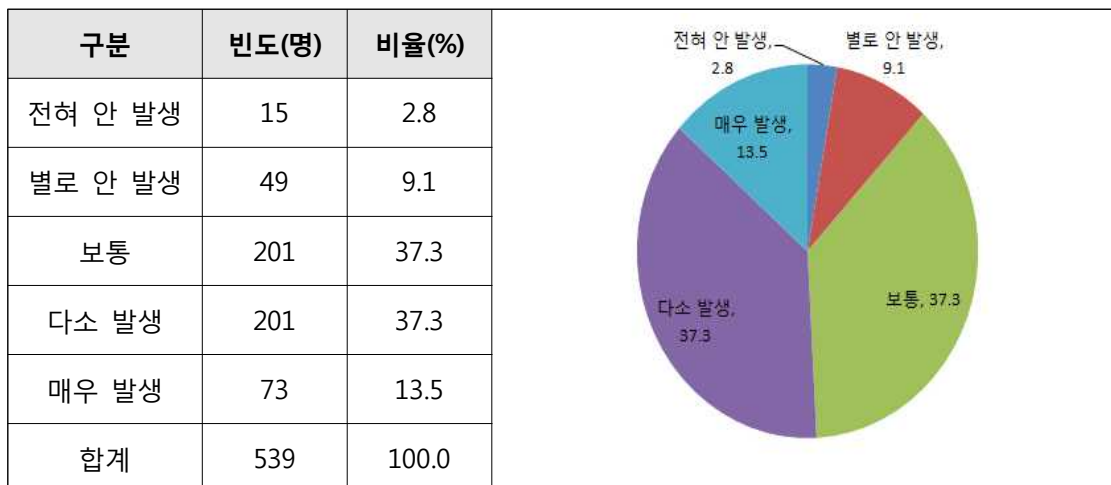
- ‘당진시에서 성별 때문에 인권 침해나 차별이 얼마나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266명(49.4%), 다소 발생 142명(26.3%), 별로 안 발생 91명(16.9%), 매우 발생 20명(3.7%), 전혀 안 발생 20명(3.7%) 순으로 응답함

[표 84] 성별 인권침해 및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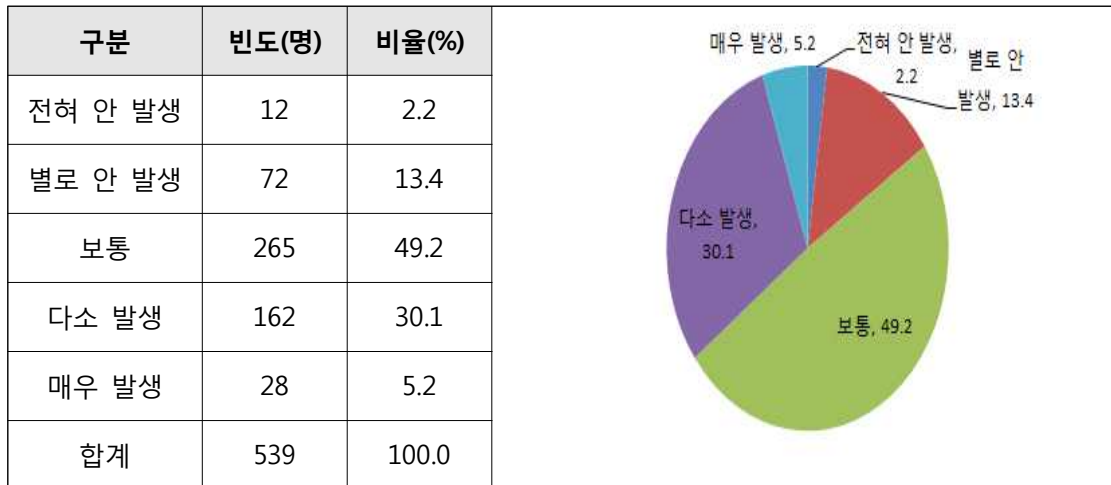
- ‘당진시에서 경제적 지위 때문에 인권 침해나 차별이 얼마나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201명(37.3%), 다소 발생 201명(37.3%), 매우 발생 73명(13.5%), 별로 안 발생 49명(9.1%), 전혀 안 발생 15명(2.8%) 순으로 응답함

[표 85] 경제적 지위 인권침해 및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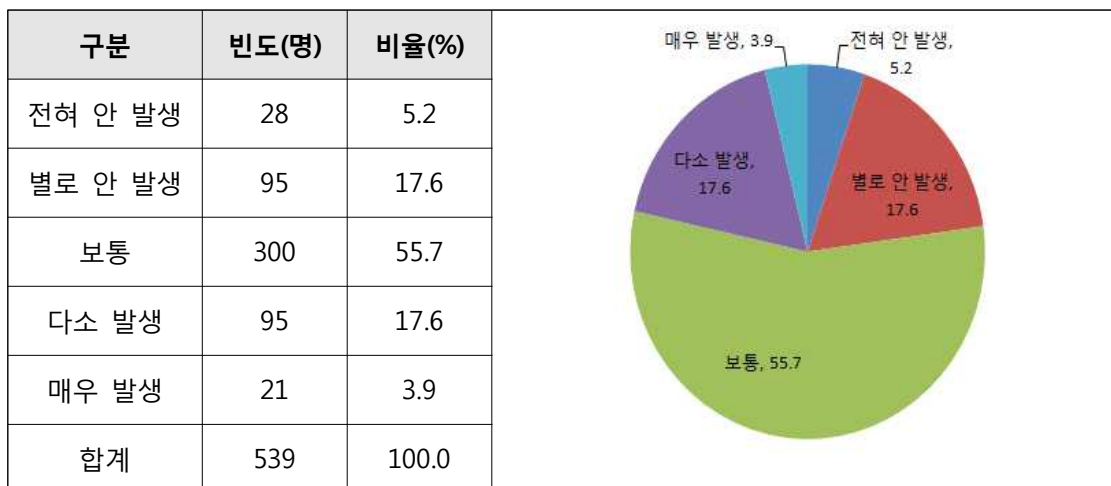
- ‘당진시에서 나이 때문에 인권 침해나 차별이 얼마나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265명(49.2%), 다소 발생 162명(30.1%), 별로 안 발생 72명(13.4%), 매우 발생 28명(5.2%), 전혀 안 발생 12명(2.2%) 순으로 응답함

[표 86] 나이 인권침해 및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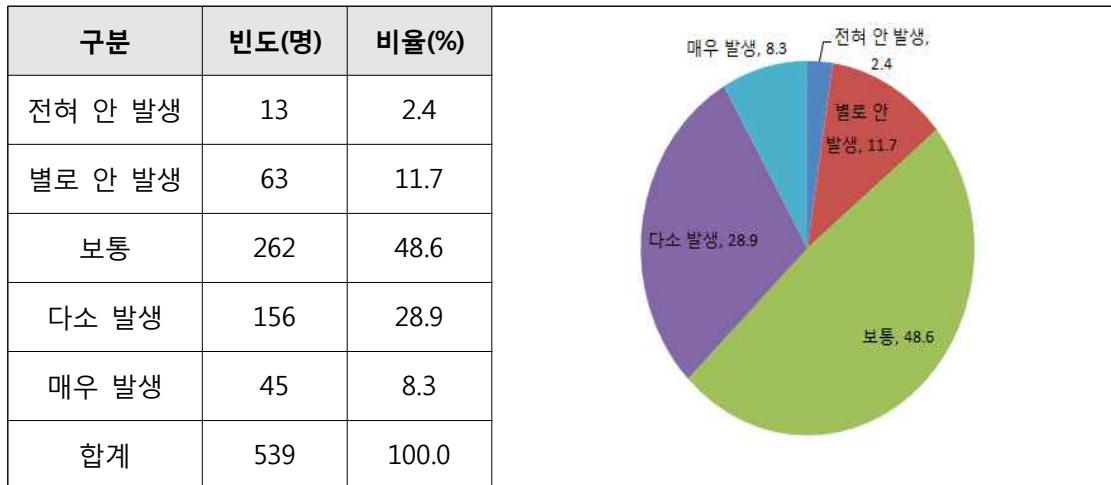
- ‘당진시에서 종교 때문에 인권 침해나 차별이 얼마나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300명(55.7%), 다소 발생 95명(17.6%), 별로 안 발생 95명(17.6%), 전혀 안 발생 28명(5.2%), 매우 발생 21명(3.9%) 순으로 응답함

[표 87] 종교 인권침해 및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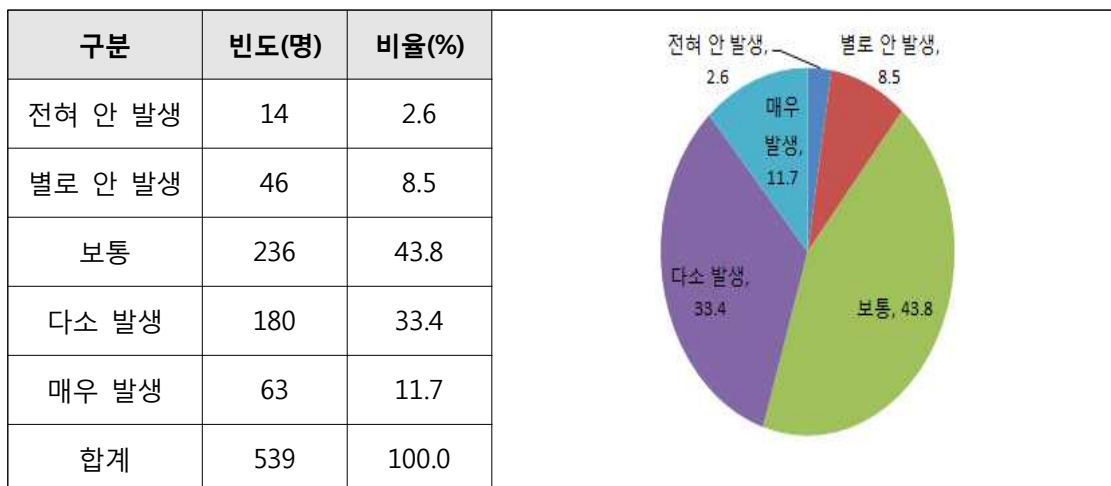
- ‘당진시에서 용모 때문에 인권 침해나 차별이 얼마나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262명(48.6%), 다소 발생 156명(28.9%), 별로 안 발생 63명(11.7%), 매우 발생 45명(8.3%), 전혀 안 발생 13명(2.4%) 순으로 응답함

[표 88] 용모 인권침해 및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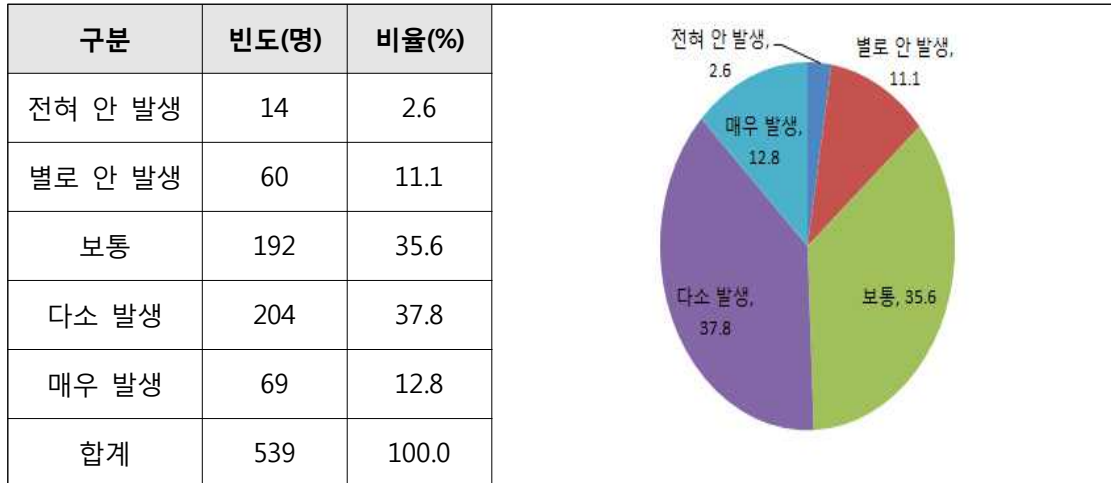
- ‘당진시에서 학력/학벌 때문에 인권 침해나 차별이 얼마나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236명(43.8%), 다소 발생 180명(33.4%), 매우 발생 63명(11.7%), 별로 안 발생 46명(8.5%), 전혀 안 발생 14명(2.6%) 순으로 응답함

[표 89] 학력/학벌 인권침해 및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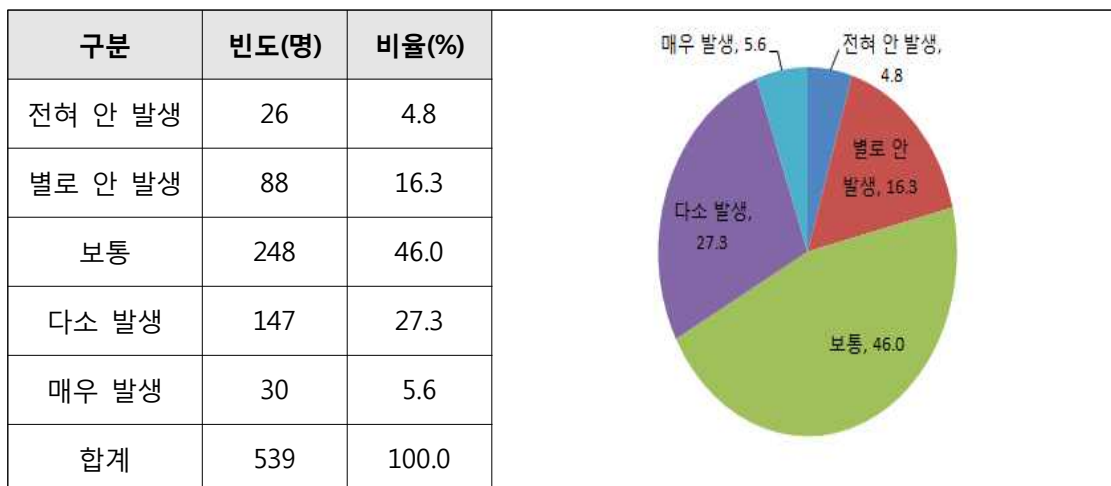
- ‘당진시에서 장애 때문에 인권 침해나 차별이 얼마나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다소 발생 204명(37.8%), 보통 192명(35.6%), 매우 발생 69명(12.8%), 별로 안 발생 60명(11.1%), 전혀 안 발생 14명(2.6%) 순으로 응답함

[표 90] 장애 인권침해 및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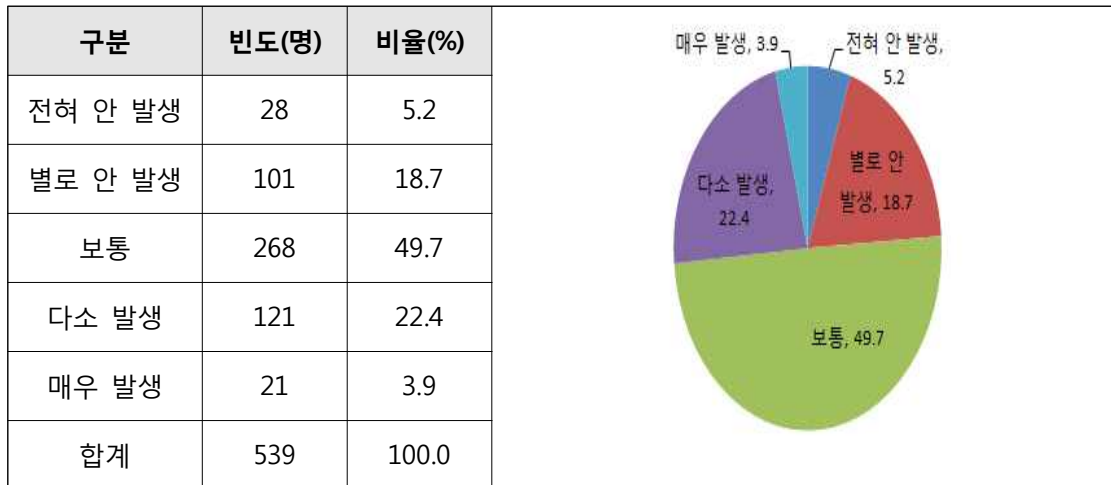
- ‘당진시에서 출신지역 때문에 인권 침해나 차별이 얼마나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248명(46.0%), 다소 발생 147명(27.3%), 별로 안 발생 88명(16.3%), 매우 발생 30명(5.6%), 전혀 안 발생 26명(4.8%) 순으로 응답함

[표 91] 출신지역 인권침해 및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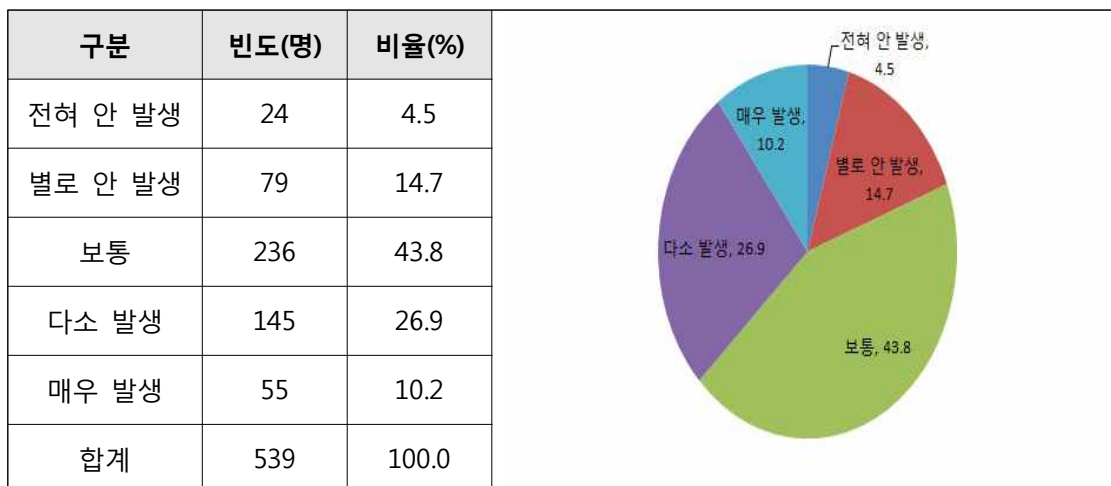
- ‘당진시에서 혼인상태 때문에 인권 침해나 차별이 얼마나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268명(49.7%), 다소 발생 121명(22.4%), 별로 안 발생 101명(18.7%), 전혀 안 발생 28명(5.2%), 매우 발생 21명(3.9%) 순으로 응답함

[표 92] 혼인상태 인권침해 및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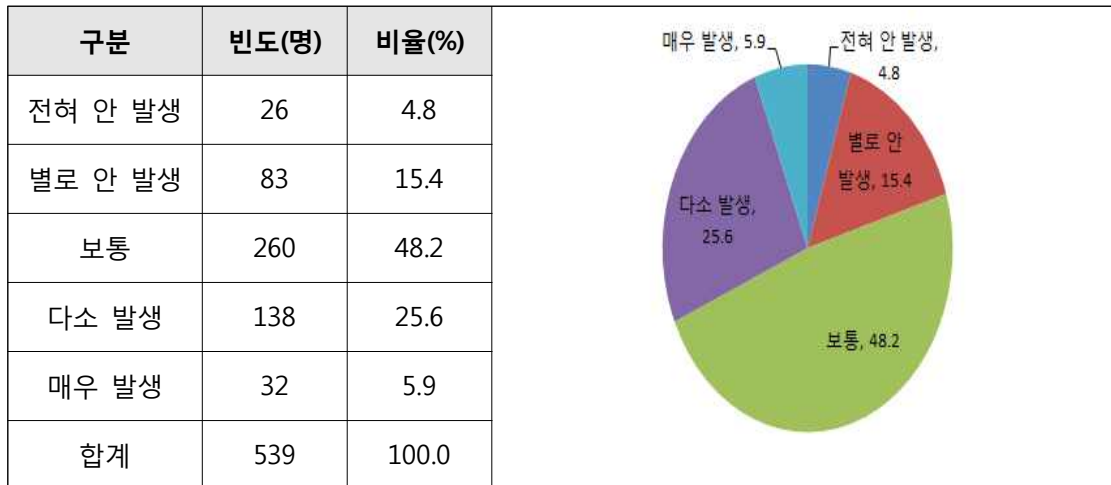
- ‘당진시에서 병력자 때문에 인권 침해나 차별이 얼마나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236명(43.8%), 다소 발생 145명(26.9%), 별로 안 발생 79명(14.7%), 매우 발생 55명(10.2%), 전혀 안 발생 24명(4.5%) 순으로 응답함

[표 93] 병력자 인권침해 및 차별



- ‘당진시에서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인권 침해나 차별이 얼마나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 260명(48.2%), 다소 발생 138명(25.6%), 별로 안 발생 83명(15.4%), 매우 발생 32명(5.9%), 전혀 안 발생 26명(4.8%) 순으로 응답함

[표 94] 정치적 입장 인권침해 및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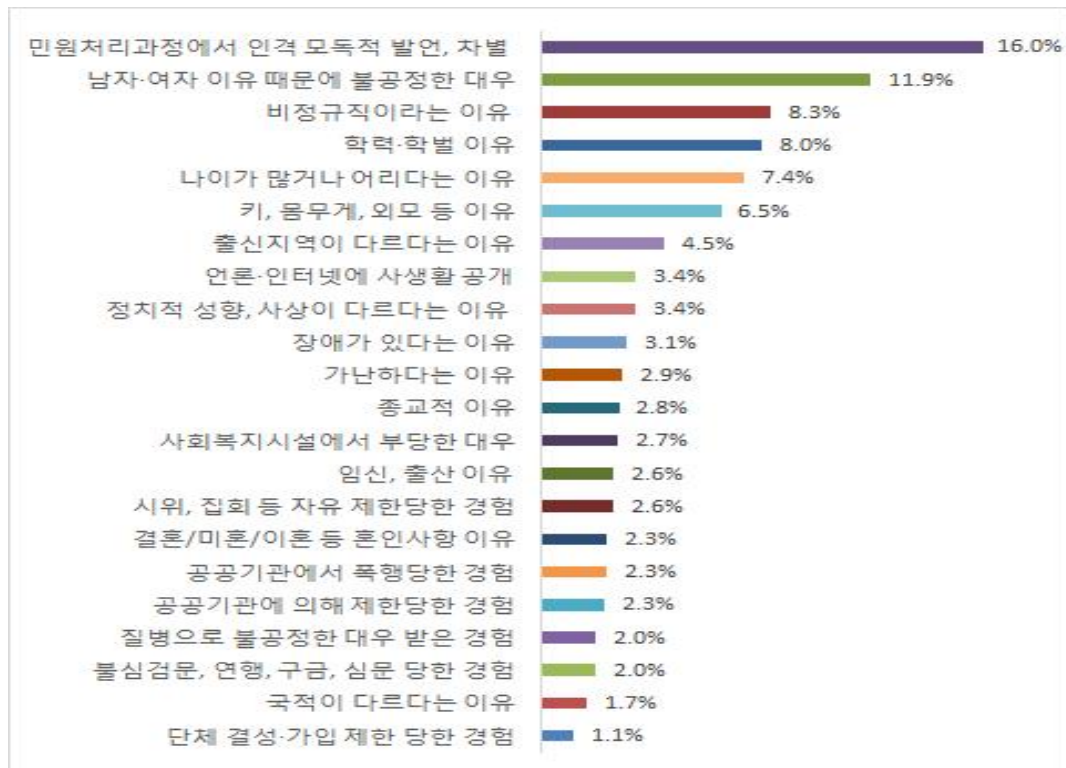
■ 최근 3년 동안 인권침해 경험 사례

- ‘최근 3년 동안 인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민원처리과정에서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239명(16.0%),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178명(11.9%),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124명(8.3%) 순으로 응답함
- 최근 3년 동안 인권침해 경험 사례에 대한 기타의견은 관련기관(공무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이 있음이 제시됨

[표 95] 최근 3년 동안 인권침해 경험 사례

구분	빈도(명)	퍼센트	순위
민원처리과정에서 인격 모독적 발언, 차별	239	16.0%	1
남자·여자 이유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	178	11.9%	2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124	8.3%	3
학력·학벌 이유	119	8.0%	4
나이가 많거나 어리다는 이유	110	7.4%	5
키, 몸무게, 외모 등 이유	97	6.5%	6
출신지역이 다르다는 이유	67	4.5%	7
정치적 성향,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	51	3.4%	8
언론·인터넷에 사생활 공개	51	3.4%	9
장애가 있다는 이유	46	3.1%	10
가난하다는 이유	44	2.9%	11
종교적 이유	42	2.8%	12
사회복지시설에서 부당한 대우	41	2.7%	13
시위, 집회 등 자유 제한당한 경험	39	2.6%	14
임신, 출산 이유	39	2.6%	15
공공기관에서 폭행당한 경험	35	2.3%	16
결혼/미혼/이혼 등 혼인사항 이유	35	2.3%	17
공공기관에 의해 제한당한 경험	34	2.3%	18
불심검문, 연행, 구금, 심문 당한 경험	30	2.0%	19
질병으로 불공정한 대우 받은 경험	30	2.0%	20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	25	1.7%	21
단체 결성·가입 제한 당한 경험	17	1.1%	22

[그림 22] 최근 3년 동안 인권침해 경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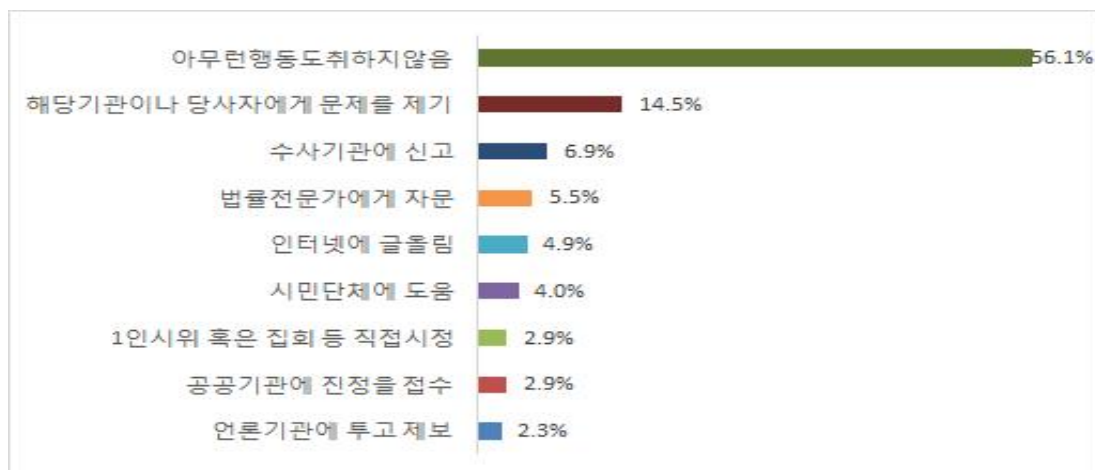
■ 인권 침해·차별 경험시 조치사항

- ‘인권 침해나 차별을 경험하였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388명(56.1%), 해당기관이나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했다 100명(14.5%),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48명(6.9%) 순으로 응답함
- 인권 침해·차별 경험시 조치사항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음
 - 무시함, 노조활동에 참여, 현장에서 의사표현,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주의하도록 전함

[표 96] 인권 침해·차별 경험시 조치사항

구분	빈도(명)	퍼센트	순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	388	56.1%	1
해당기관이나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	100	14.5%	2
수사기관에 신고	48	6.9%	3
법률전문가에게 자문	38	5.5%	4
인터넷에 글올림	34	4.9%	5
시민단체에 도움	28	4.0%	6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	20	2.9%	7
1인시위 혹은 집회 등 직접시정	20	2.9%	8
언론기관에 투고 제보	16	2.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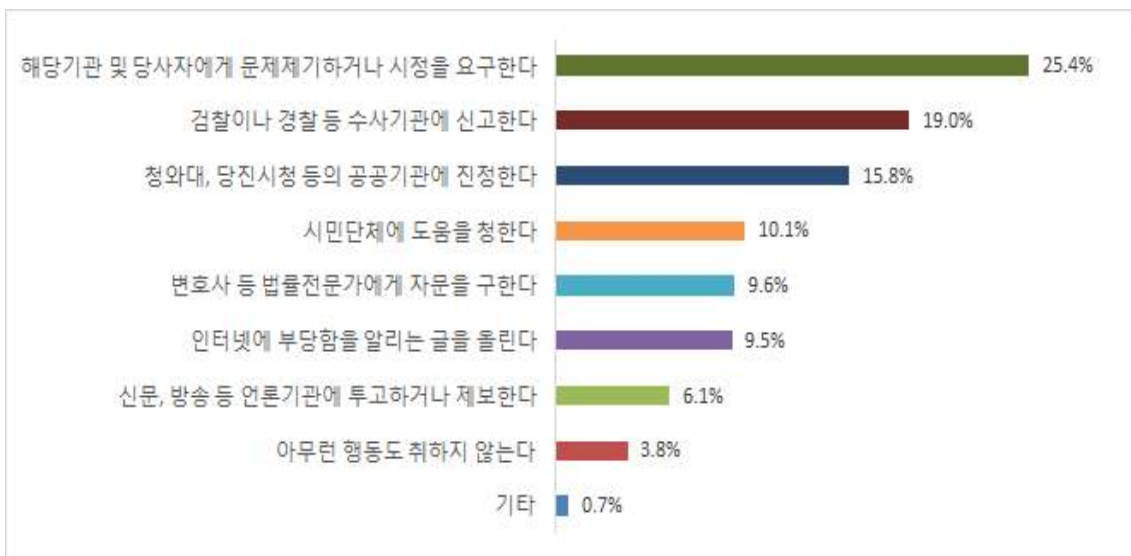
[그림 23] 인권 침해·차별 경험시 조치사항



■ 인권 침해 당했을 경우 취할 행위

- ‘만약 인권침해를 당한다면 어떤 행위를 취하시겠습니까?’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으로 해당기관이나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한다(25.4%),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다(19.0%), 청와대, 당진 시청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한다(15.8%) 순으로 응답함
- 인권 침해당했을 경우 취할 행위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음
 - 어떤 행동을 취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음
 - 무시함
 - 불이익으로 인해 행동을 취할 수 없음

[그림 24] 인권 침해당했을 경우 취할 행위



- ‘만약 인권침해를 당한다면 어떤 행위를 취하시겠습니까?’에 대한 1순위 응답으로 해당기관이나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한다 325명(60.3%),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67명(12.4%), 청와대, 당진시청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한다 37명(6.9%) 순으로 응답함
- ‘만약 인권침해를 당한다면 어떤 행위를 취하시겠습니까?’에 대한 2순위 응답으로 청와대, 당진시청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한다 154명(28.6%),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101명(18.7%), 시민단체에 도움을 청한다 73명(13.5%) 순으로 응답함

- ‘만약 인권침해를 당한다면 어떤 행위를 취하시겠습니까?’에 대한 3순위 응답으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139명(25.8%), 인터넷에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올린다 77명(14.3%), 청와대, 당진시청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한다 60명(11.9%) 순으로 응답함

[그림 25] 인권 침해당했을 경우 취할 행위(1순위 · 2순위 · 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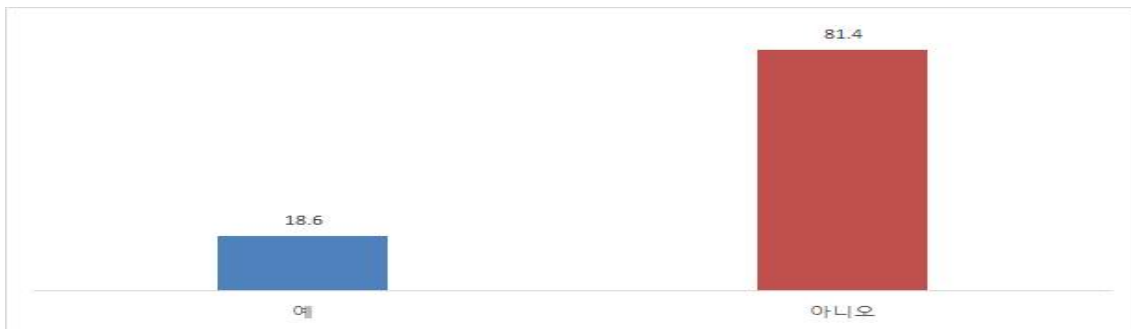


4) 당진시 인권교육

■ 당진시에서 인권교육 받은 경험 유무

- ‘당진시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아니요 439명(81.4%), 예 100명(18.6%) 순으로 응답함

[그림 26] 당진시에서 인권교육 받은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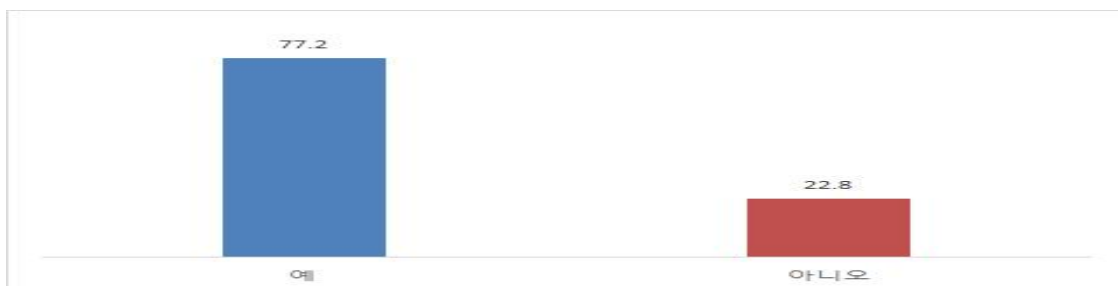
■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 혹은 장소

- 학교,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당진시청, 당진시장애인복지관, 인권위원회, 충남도청, 여성단체, 면사무소, 대학교, 문화원, 복지재단, 당진지역자활센터 등 응답함. 가장 많이 응답한 기관은 당진시청임

■ 인권교육프로그램 받을 의향 유무

- ‘인권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예 339명(77.2%), 아니요 100명(22.8%)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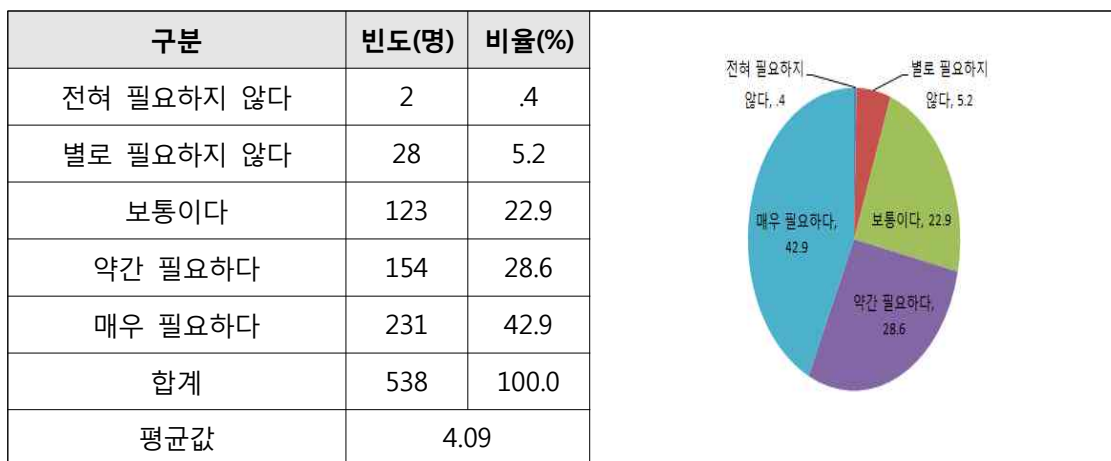
[그림 27] 인권교육프로그램 받을 의향 유무



■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

-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값 4.09으로 보통 이상 수준이며, 인권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야기시킴
- ‘인권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필요하다 231명(42.9%), 약간 필요하다 154명(28.6%), 보통이다 123명(22.9%), 별로 필요하지 않다 28명(5.2%), 전혀 필요하지 않다 2명(0.4%)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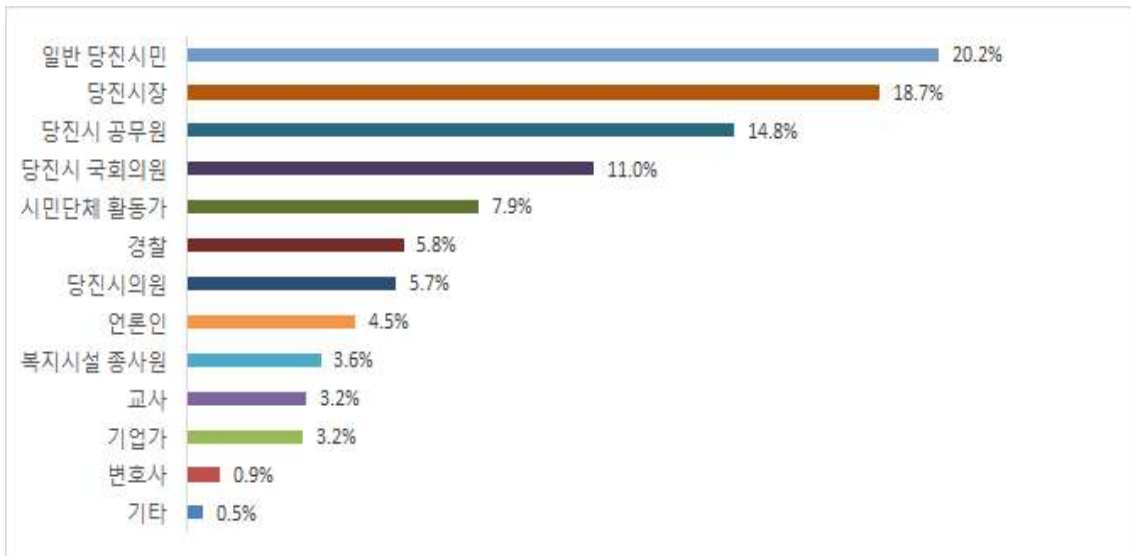
[표 97] 인권교육 필요성 인지도



■ 인권증진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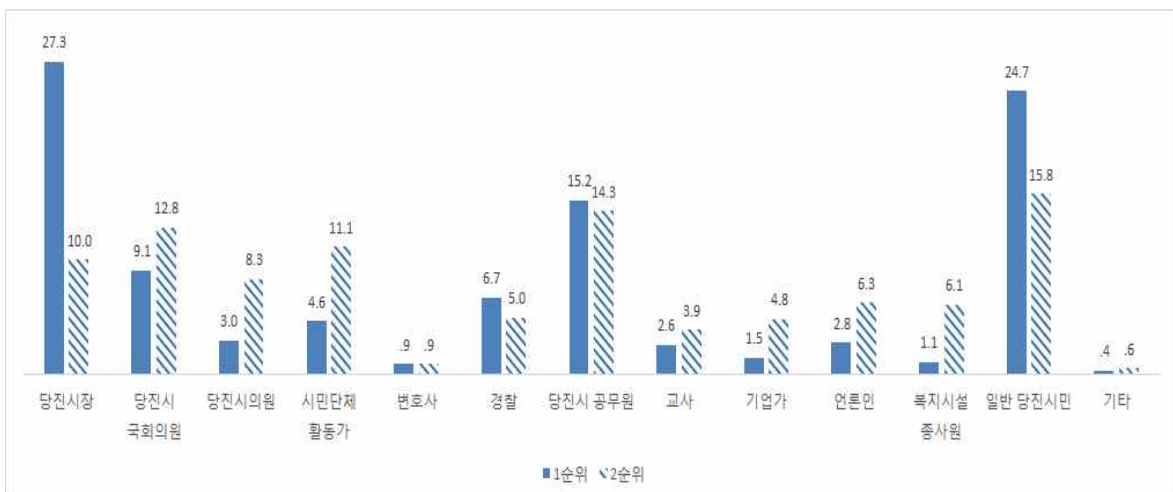
- ‘당진시에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으로 일반 당진시민(20.2%), 당진시장(18.7%), 당진시 공무원(14.8%) 순으로 응답함
- 인권증진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사람에 대한 기타의견으로 다음과 같음
 - 고위관리(시장, 국회의원 등 모두 포함)
 - 자기 자신
 - 가정
 - 도지사

[그림 28] 인권증진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사람



- ‘당진시에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사람’에 대한 1순위 응답으로 당진시장 147명(27.3%), 일반 당진시민 133명(24.7%), 당진시 공무원 82명(15.2%) 순으로 응답함
- ‘당진시에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사람’에 대한 2순위 응답으로 일반 당진시민 85명(15.8%), 당진시 공무원 77명(14.3%), 당진시 국회의원 69명(12.8%) 순으로 응답함

[그림 29] 인권증진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사람(1순위 · 2순위)



■ 인권교육 담당 주체에 관한 인지도

- 인권교육은 공교육의 정규교과과정에서 시행되어야한다(3.88), 인권교육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좋다(3.58), 인권교육은 인권시민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좋다(3.52) 순이며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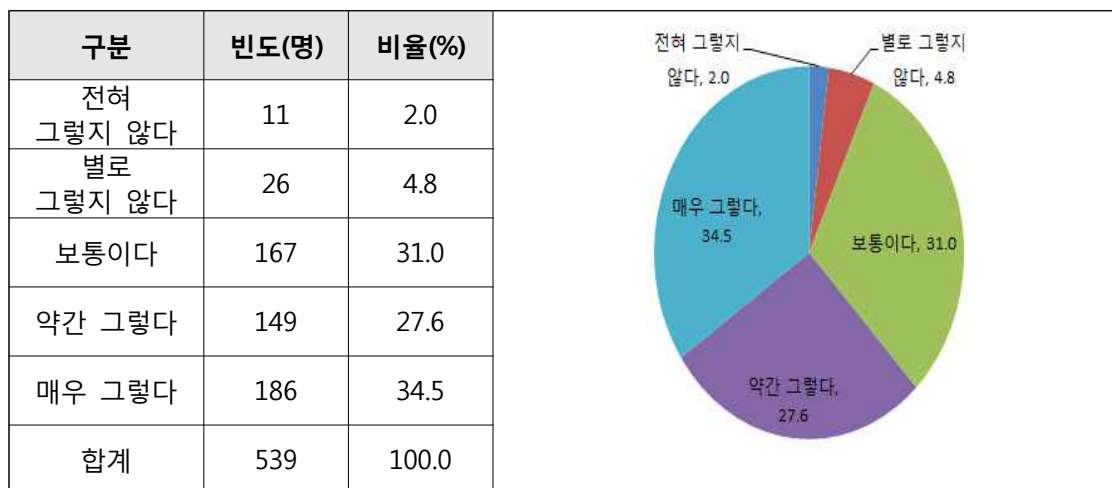
[표 98] 인권교육 담당 주체에 관한 인지도 평균값

문 항	평균값
인권교육은 공교육의 정규교과과정에서 시행되어야한다	3.88
인권교육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좋다	3.58
인권교육은 인권시민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좋다	3.52

(1: 전혀 그렇지 않다, 3: 보통, 5: 매우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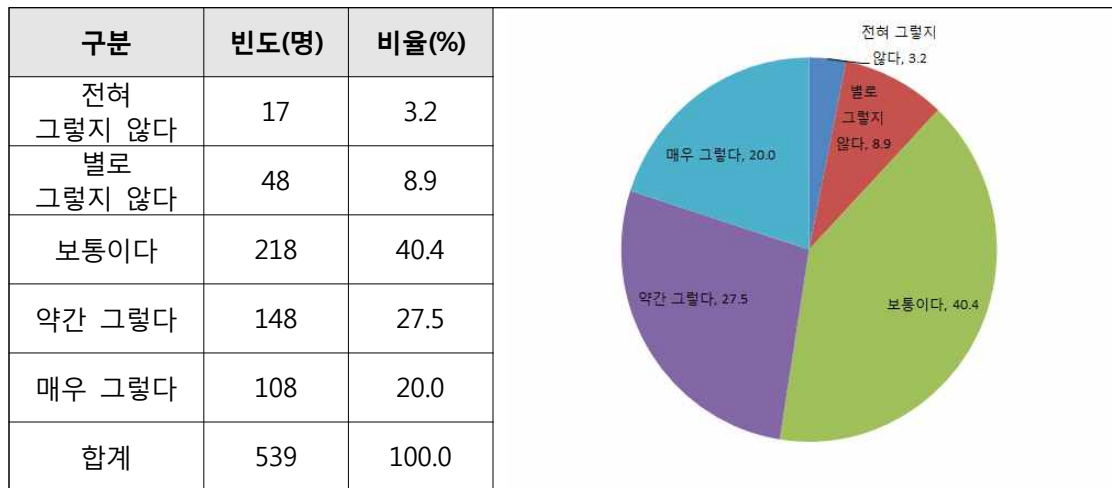
- ‘인권교육은 공교육의 정규교과과정에서 시행되어야한다’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그렇다 186명(34.5%), 보통이다 167명(31.0%), 약간 그렇다 149명(27.6%), 별로 그렇지 않다 26명(4.8%), 전혀 그렇지 않다 11명(2.0%) 순으로 응답함

[표 99] 공교육의 정규교과과정에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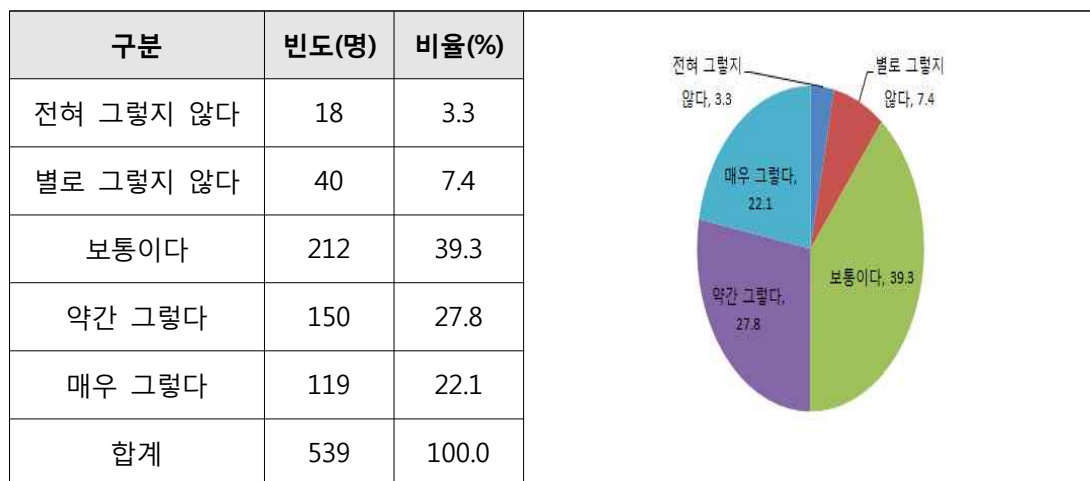
- ‘인권교육은 인권시민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 218명(40.4%), 약간 그렇다 148명(27.5%), 매우 그렇다 108명(20.0%), 별로 그렇지 않다 48명(8.9%), 전혀 그렇지 않다 17명(3.2%) 순으로 응답함

[표 100] 인권시민단체에서 시행



- ‘인권교육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 212명(39.3%), 약간 그렇다 150명(27.8%), 매우 그렇다 119명(22.1%), 별로 그렇지 않다 40명(7.4%), 전혀 그렇지 않다 18명(3.3%)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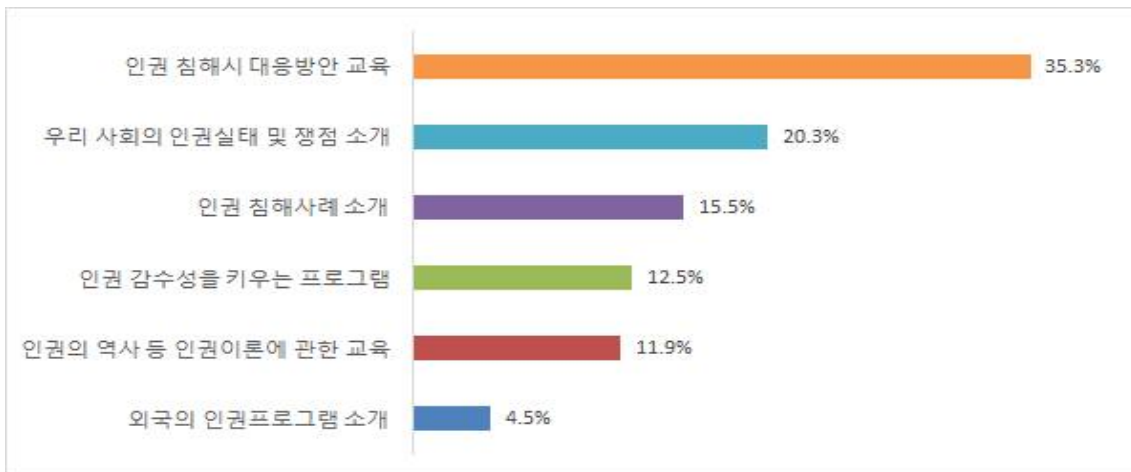
[표 101] 지방정부에서 시행



■ 인권교육 실행시 가장 중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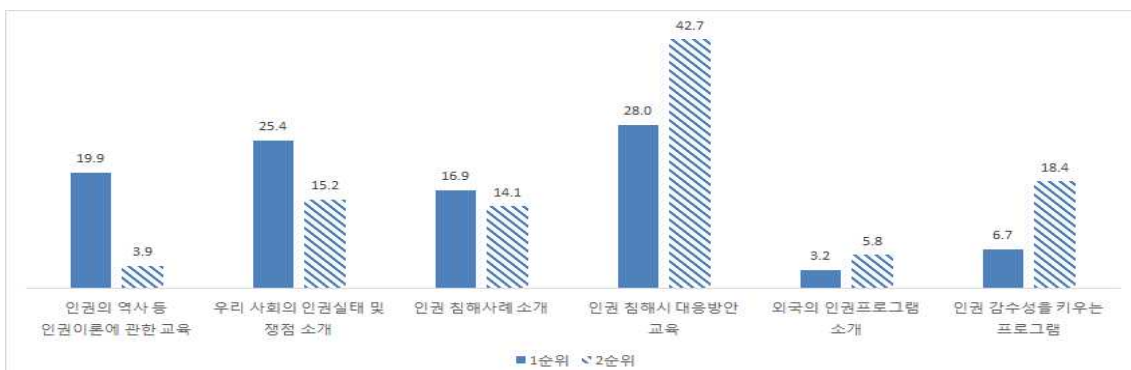
- ‘교육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으로 인권 침해시 대응방안 교육(35.3%), 우리 사회의 인권 실태 및 쟁점 소개(20.3%), 인권 침해사례 소개(15.5%) 순으로 응답함

[그림 30] 인권교육 실행시 가장 중요한 사항



- ‘교육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1순위 응답으로 인권 침해시 대응방안 교육 151명(28.0%), 우리 사회의 인권실태 및 쟁점 소개 137명(25.4%), 인권의 역사 등 인권이론에 관한 교육 107명(19.9%) 순으로 응답함
- ‘교육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2순위 응답으로 인권 침해시 대응방안 교육 230명(42.7%),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 99명(18.4%), 우리 사회의 인권 실태 및 쟁점 소개 82명(15.2%) 순으로 응답함

[그림 31] 인권교육 실행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항(1순위 · 2순위)



제3절 당진시 인권취약계층 인터뷰 조사

1. 조사개요

■ 인터뷰 조사

- 8회, 7개 분야, 118명 대상

■ 인권감수성 교육

- 3회, 3개 분야

[표 102] 당진시 인권취약계층 인터뷰 개요

분야	일시	장소	인권교육
노인	2017.7.11(화)	고대노인대학	김원천 (호서노인전문요양원장)
장애인(시각)	2017.7.13(목)	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지체, 청각)	2017.7.14(금)	장애인복지회관	
여성	2017.7.20(목)	당진시청 중회의실	김순영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덕구지회 인권강의센터장)
다문화	2017.7.21(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엄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이해 전문교육강사)
아동·청소년	2017.8.1(화)	당진 YMCA	
비정규직	2017.9.12(화)	비정규직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	2017.9.21(목)	당진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	

2. 분야별 인터뷰 조사 결과

1) 노인

■ 문제점

- 노인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의료환경이 부족함

- 종합병원에 훌륭한 의사가 부족함

“명색은 종합병원인데, 좋은 의사가 오지 못해 수술을 받으려면 서울이나 아산으로 간다. 당진의 노인들이 가장 큰 소망은 제대로 된 병원이다.”

- 건강약자를 위한 환자이송시스템이 없음

“종합병원이 있기는 하지만, 위급한 환자가 발생시 빨리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 요양원 입원을 위한 자격등급의 완화가 요구됨

“요양원에 가려면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향후 일정 연령 예를 들어 80세 이상의 노인은 다 요양원에 갈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예방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독거노인에게 긴급할 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정부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골의 독거노인이 늘고 있다. 독거노인들이 합숙하면서 공동 생활, 공동 취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노인 그룹홈 등을 확대해야 한다”

“동네 합숙을 하던 혼자 살던, 노인에게 중요한 것은 반찬문제예요. 노인정에 세탁기가 없는 것도 문제예요”

“독거노인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할 경우, 버튼만 누르면 해당서비스 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독거노인의 집에 한해서 CCTV를 설치해주면, 질병·사고 유무를 알 수 있다”

- 노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함
 -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승하차에 불편함이 있음

“시골은 대부분 노인인데, 버스 발판이 높아서 승하차할 때 어려움이 많다”

- 장콜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도 유용한 이동수단이나 이용에 제약이 있음

“고령자들은 다 장애인이다. 신체적 장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장애도 장애이다. 그러나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장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여가권 보장이 미흡함
 - 노인복지회관이 부족한 실정임

“고대면은 당진읍에서 먼데, 복지회관 하나도 없다. 목욕하기도 힘들다. 시골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다. 복지회관을 가려면 버스를 두세번 갈아타야 한다. 무식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은 복지회관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복지회관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가활동에서도 제약이 많다.”

“며칠전에 계룡대에 가려고 신청하려 했는데, 전화신청은 받지 않았어요. 인터넷으로만 신청하는 거래요. 우리는 인터넷을 할 줄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어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복지회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시켜주지만, 배우고 돌아오는 길에 다 잊어버려요.”

- 노인시설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개선함
 - 노인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각종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노인시설 종사자, 시설운영자의 인권의식 부족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입소노인은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상담 및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은폐되는 노인학대 등 노인인권 침해사례가 많음
 - 가족내 학대의 경우 수치심 때문에 신고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방치된 노인’ 이 발생함

- 의존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미흡
 - 오랜 시간 살아온 농어촌 주택의 경우, 몸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주거생활을 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음
 - 농어촌의 경우 시설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서 질이 낮은 서비스가 제공될 우려가 있음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80~85%는 국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지만, 서비스에 따른 본인부담금조차 여유가 없는 노인들의 건강보장정책의 공백이 발생함
- 제약된 노인일자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음
 - 노인고용률이 저조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2) 장애인

■ 문제점

- 장애인을 위한 특별운송수단(장콜),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이동권이 제약되고 있음

“이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상버스를 확대도 필요하지만,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콜이 확대되면 장애인의 이동에 도움이 됩니다.”

“당진시에는 장콜 11대, 생활이동지원센터에 3대가 있다. 장콜 증차가 요구됩니다. 시골에서는 저상버스보다는 장콜이 더 유용합니다.”

“당진시에는 현재 장콜이 주중에는 18:00시까지, 주말에는 2대가 17:00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은 17:00시까지만 받고, 점심시간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야간에도 운행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더 많은 장콜이 운행되어야 합니다.”

“저희 엄마는 시각장애인이예요. 당진시에서 3년 동안 2번 저상버스를 이용했어요. 엄마는 저상버스 승하차대가 낮고, 내가 승차해서 좌석에 앉을 동안 기다려 줘서 버스기사가 기다려줘서 참 좋았다고 말했어요. 고대면에서 택시를 타면 1만5천원정도 나오는데, 노인에게 1만5천원은 많이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저상버스는 확대되면 좋겠어요”

“저상버스가 당진시에는 3대 밖에 없고 저상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이용하려고 안해요”

“당진에는 버스가 1300원이고 택시를 탈 경우 원거리는 1만원 정도예요. 당진에는 전철, 저상버스같은 대중교통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כו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요. 저상버스가 있어도, 지체장애인이 탈 수 없는 노선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장כול비용을 버스에 준하는 비용으로 내려야 합니다. 비장애인은 13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장כו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장애인도 1300원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장애인에게는 장כול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그 비용을 인하해야 합니다.”

- 편의시설 미비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저해하고 있음.
- BF(Barrier free)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모든 장애인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

“경사로, 경사각도 등 BF 설치 단계부터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요구,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차별적 인식이 있음

“저상버스 운전기사, 비장애 승객들의 시선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타고 오를 때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운전기사가 눈총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저상버스를 타도 비장애인 승객들이 수군수군 거려서 저상버스를 이용하기가 꺼려져요. 심지어는 저상버스 운전수가 휠체어장애인을 보았는데도 그냥 통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은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도 인권을 침해받고 있어요. 사회적 활동, 교육 등을 받고 싶어도, 1차적으로 부모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청각장애인은 싸워도 진술서 작성도 못하고 수화통역사도 없고 해서 아예 신고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구나 문맹 농아인은 진술서도 쓰지 못합니다. 진술서를 대필하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안고 사는 대부분 장애인은 일반택시를 이용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

“시각장애인은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가 동행해도 대중버스를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 다른 승객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다른 비장애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버스보다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서천에서와 같이 장애인이 일반택시를 이용할 경우, 시청에서 택시요금을 보조해 주었으면 좋겠다”

- 인도환경이 정비되지 않아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약되고 있음

” 활동보조인인 제가 시각장애인과 같이 걸어가기가 무서울 정도고 인도가 좋지 못하다”

• 여가권, 문화향유권에 제약이 있음

- 장애인에게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센터가 부족함

“시각장애인들은 갈 때가 별로 없고, 현재 센터는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 센터를 확대하면 시각장애인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체육관, 수영장 등을 함께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구장은 건립하면서 장애인체육관은 건설하지 않아 불만이 많습니다.”

“시청대강당 장애인석도 안 좋은 곳(뒷 쪽)에 해 놓았습니다. 극장도 장애인석을 앞 혹은 뒤쪽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가운데에 설치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중앙회에서 BF영화를 월 1회 보여 주는데,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저는 뮤지컬, 연극 등 예술활동을 좋아합니다. 뮤지컬, 연극을 보려고 수화통역사를 불렀는데, 여러 사람의 대화를 수화통역사가 다 통역할 수 없어서 제가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이 제약되고 있어요.”

• 마을회의.행사에서 제외되어 소외되어 있고, 마을회의에서 장애인의 생활 불편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생활불편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부락, 마을회의에서 장애인의 의견을 제기할 기회도 없고, 장애인 관련 사안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당진시청에서 부락, 마을에 장애인을 우선하라는 지시가 필요하다. 예로 마을에 경로당이 있으나, 시각장애인은 경로당에서 놀 수 없다. 경로당에서 행사가 있어도 마을사람들이 장애인과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집앞 도로포장, 야간등 등도 비장애인 주변에 우선적으로 설치되고 있고, 시각장애인 주변에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부녀회에도 시각장애인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생활불편사항이 제대로 건의되지 않고 있다”

“부락, 마을회의에서 소외되고 있어도, (시각)장애인은 불편함을 스스로 참는 수 밖에 없다.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때도 별로 없다”

“마을행사가 있어도 어느 누가 장애인에게 같이 가자고 하자는 사람이 없다. 장애인은 귀찮은 존재라고 인식되어 장애인을 도와주려는 마을주민들이 없다”

“경로당 노인행사가 있어도 장애인은 참석할 수가 없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마을에서 노인행사가 있으면, 시청에서 청년회 혹은 부녀회에게 연락해서 장애인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는 아줌마들하고 교류하고 싶어합니다. 시각장애인이라서 부녀회에 갈 수도 없지만, 가더라도 비장애인이 무시하고 같이 끼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비장애인의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경로당 같은 경우 노래교실이 있는데, 그런 곳에 참여하고 싶어도 이동할 수가 없어서 동참하지 못해요.”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제한이 문제가 있음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자부담금이 부담이 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이 악화됨

“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이 부담되어, 불편해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토요일일에 장례식장, 결혼식장에도 가고 싶어도 못간다.”

- 장애유형별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에서 차등이 있음

“다른 장애유형의 경우 1급이면 300시간까지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1급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같은 1급이면서 150시간 밖에 활동보조를 받지 못한다. 1급이면 차별없이 동일한 활동보조시간을 주어야 한다.”

- 장애인의 정보접근권도 제약되고 있음

“시각장애인은 컴퓨터의 문서를 소리로 듣고 정보를 획득하기도 한다. 그런데 엑셀 등의 표는 아직 소리로 들을 수 없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폴더폰을 읽어 주는 서비스가 개발되면 좋겠다. 일부 통신사는 스마트폰, 폴더폰에 대해 소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것은 정부에서 할 수는 없지만 개발업체들이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

“청각장애인 중에는 문맹 농아인도 있습니다. 농아인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는데, 한글 해독이 안 되는 농아인은 정보접근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제약받고 있음

“당진 수화통역센터에는 3명의 수화통역사가 있습니다. 수화통역사 1인당 40명의 청각장애인을 돕고 있어서 지나친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증원을 요청했으나 지침을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관공서, 종합병원에는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사회가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몰라서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결제를 할 때 인증번호가 소리로 전달되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택배 배달시에도 택배기사에게 내가 청각장애인이니 까 메시지로 문자를 날려 달라고 부탁해도 택배기사가 꼭 전화를 해서 대화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신용카드도 승인을 하려면 전화로만 통화해야 합니다. 들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 통화하면, 본인이 아니라고도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문자는 안 되고, 반드시 통화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회적 법이 많이 있습니다. 농아인도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어 문자를 통해 대화하고 싶어도, 사회적 법 때문에 반드시 수화통역사를 통해야만 합니다. 일반회사에서 문자서비스를 통해 농아인과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권이 취약함

“장애인장려금이 최대한도 70만원이 지급되는데, 시골에 논 조금 갖고 있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장애인이 시골에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장애인장려금, 노인수당 등에서 제외되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도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에서 제외된다면, 장애인이 가족에게 계속 미안한 마음을 갖을 수 밖에 없다.”

“장애인 가운데도 자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도 어렵지만, 주택을 구입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자립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급자에게는 일을 하더라도 일정 수급액을 인정해주어, 노동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근로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취업에서 제한되고 있어요.”

- 이동권이 제약되어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음

“저는 옛날 모대학에 합격했는데, 그 대학 건물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입학을 거절당했습니다. 다음 해에도 거절당해 결국은 사이버대학을 다녀야 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제빵, pc, 바리스타 등을 배우고 싶었는데 수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학원에서 반드시 수화통역사를 대동해야 하는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수화통역사는 수화통역사 근무시간에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외에 학원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포토샵 학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수화통역사를 동행해야 하는데, 수화통역사가 앓을 자리가 없다고 거절당한 적도 있어요. 방송통신대에서 처음에는 예산을 이유로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일부 배치되어 있어요.”

- 장애인의 건강권이 제약되어 있음

“청각장애인의 경우 가벼운 병은 필담으로 대화하지만, 밤에 아프면 수화통역사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크게 아프지 않으면 참아야 합니다. 아침 9시까지 참다가 수화통역사를 동행해서 병원으로 가서 의사소통을 하지요. 이렇게 조금 아픈 것을 참고, 참고 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3) 여성

■ 문제점

-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음
 -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시민이 대부분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음
 -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문화 확산이 필요함
- 여성의 사회참여 수준이 낮음
 - 여성의 정치 및 사회참여 수치가 전반적으로 낮음
 - 여성의 사회참여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도적 역할 요구됨
-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시켜야 함
 -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미비함
 - 피해자에 대한 상담, 가족지원, 직업훈련 공동생활시설(그룹홈, 임대아파트) 등 다양한 욕구에 맞춘 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성폭력에 취약한 여성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함
 - 정신·지적·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지속적이고 극단적인 경우가 많음
 - 여성장애인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며, 마을단위에서 통합적으로 보호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여성에게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발생해도 신고가 되지 않아서 성폭력의 사각지대입니다.”
- 여성에도 여성인권에 대한 격차가 존재함
 - 다문화 여성이 적응하고 자립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다문화 여성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상담, 성폭력 예방 교육, 한국어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결으로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든다고 하였지만,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였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나이를 드신 여성들은 당진시가 살기 좋다고 하지만, 결혼해서 정착하신 분, 아이가 있는 사람들, 농촌에 다문화여성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시어머니가 밖에서 지키면서 다문화여성이 밖으로 못나가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여성도 어느 정도 살만한 여성만 이용하고 있지, 다문화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많은 여성은 힘들게 살고 있어요. 어촌지역에서 20세 나이차로 살고 있는 여성을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실효성이 낮음
 -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도입되고 개선되었지만 대상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실제 활용도가 낮음
 - 고용보험 미가입자(학생, 실업자, 자영업자 등)와 고용보험 사각지대(비정규직)에 속한 사람은 지원 정책이 적용되지 않음
 - 누구나 일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함
-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과 간병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늘어나 돌봄 노동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 대다수의 일자리가 비정규직이며, 고령 여성이 주된 구성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열악함
 - 돌봄 노동자 임금을 높이기 위한 인건비 고정, 최저임금 보장 등 고용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함

4) 다문화

■ 문제점

- 외국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차별적 인식

“외국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듯한 시어머니 말투가 마음의 상처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 ??산은 싫다 “는 등 말마다 모국의 흠을 잡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학교에서 한국말을 모르는 나에게 욕을 가르켜 주어서 창피당했어요.”

“초대를 받았는데 무시를 받았어요.”

“다문화가정 친구들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고 있어요. 중학교 때에는 같이 잘 안놀아줘요. 눈색과 피부 그리고 언어문제로 같이 놀아주지 않아요”

- 언어로 인한 차별이 있음

“내가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한국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고 경찰이 말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 결혼전 한국문화, 결혼 대상 남성에 대한 정보가 미흡함
 - 중매업소를 이용하여 결혼하는 경우 결혼상대와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시댁이나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음
- 한국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공공·민간 프로그램 부족
 - 농촌의 다문화여성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공공기관의 도움보다는 출신국 여성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음
- 언어소통의 문제로 건강권 침해가 우려됨
 - 아파서 병원에 가도 증상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고, 농촌의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려울 때가 있음
- 가정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 미비
 - 가정폭력이 발생하여도 비자 등의 문제로 시댁식구들의 눈치를 보면서 참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
- 결혼 허위 정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 결혼전 시댁에 대한 허위 정보로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도 있고, 일자리를 구하려도 언어문제로 쉽게 일할 수 없음

5) 아동·청소년

■ 문제점

- 청소년의 노동권 침해
 - 알바형태로 일하는 근로청소년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많음
- 성(性) 이유로 인한 차별

“학교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피구를 해야 한다고 해요. 다른 종목도 하고 싶은데 여자라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아요”
- 사춘기 시기의 아동·청소년에게 사생활에 대한 인권침해가 나타남
 - 학교내외에서 어리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일방적인 검사와 통제가 추진됨
- 학교내에서의 폭력이 끊이지 않음
 - 학교에서 폭력이 행해지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폭력 자체를 근절하는 조치와 더불어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대처가 요구됨
- 가정학대 아동·청소년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부족
 -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과 지원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 규정은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은 형편임
- 장애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취약한 실정임
 -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장애유형에 따른 교육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으로 장애아 통합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함
 -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이해가 낮음

-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미흡함
 -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여러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사회에 방치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함
- 학생들의 문화권 향유를 위한 기반이 미약함
 - 학업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들은 청소년시기에 많은 문화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음

6) 비정규직

■ 문제점

-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주의 차별

“정규직은 보너스를 600%를 받는데, 우리는 보너스도 없어요. 경조휴가도 없었어요. 정규직은 휴가도 주고 경조비도 주는데, 비정규직은 경조휴가 자체가 없어요.”

“한 사무실에 있어도, 원청회사에서 하청회사 비정규직에게 온갖 잡일을 시켜요. 단협 조항에 “기타” 라고 표현해서 사무실 이사, 잔디밭 풀뽑기 등 등 온갖 잡일을 부려 먹어요. 투쟁을 통해 약간 개선되었는데, 비정규직 직원은 “그냥 해주자” 라는 체념적인 말을 하기도 해요.”

“노조교육 등에 참석하려면, “왜 가냐!” 고 막기도 하고, 반차를 쓰고 나가라고 요구받기도 해요”

-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점심식사도 정규직은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식사하지만, 비정규직은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규직은 체육대회, 운동회 등도 있고 그것도 공금으로 행사를 하지만, 비정규직을 위한 행사도 거의 없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의류에서도 차별이 있다.”

“정규직을 위한 시설개선은 금방 이루어지지만, 비정규직을 위한 시설개선을 하려면 절차 등을 문제삼아 잘 해주지 않는다.”

- 비정규직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

“비정규직 청년은 결혼하려고 마음먹지도 못해요.”

“기본교육도 없이 하청에 하청을 주기 때문에, 비정규직에서 산재사고가 많이 나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사장을 2년이나 1년마다 1번씩 바꿉니다. 그래야 매년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없으면 1년 혹은 2년단위로 전부 해고당할 수 있어요. 비정규직 노조가 있으면 고용유지협약 등을 통해 사장이 바뀌더라도 비정규직이냐마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청업체가 통째로 날라가요.”

“다음해에 채용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서 이의나 항의를 제기하지 못해요.”

“근로계약을 썼더라도 그것을 회사가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잘 모르고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개인으로서 이의제기를 하면 잘리기 때문에 노조를 통하지 않고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요.”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체에서는 인권교육, 안전교육 등등을 거의 받을 수 없어요.”

“비정규직은 10년을 일했어도 신규채용자의 월급하고 똑 같다. 정규직은 호봉제가 있어서 경력을 인정받는데, 비정규직에게는 경력이 없어요.”

- 건강권

“작업장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여건이 많아요. 특히 밀폐된 공간이라서 공기가 안 좋아요. 정규직에게는 그나마 공기청정기가 제공되지만 비정규직에게는 그것도 제공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에게는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없어요. 정규직에게는 회사내 휴게공간이나 회의공간이 주어져 외부인을 초청해 회의나 교육 등을 할 수 있는데, 비정규직에게는 그런 공간이나 기회가 차단되어 있어요.”

7) 북한이탈주민

■ 문제점

- 노동권에서의 차별

“회사 인터뷰에서 사장들이 “나는 북한사람이 싫다” 라고 직접 대놓고 말해요. 그리고 사람이 없으니까 채용하기는 하는데, 채용된 다음에도 스트레스가 엄청 느껴요. 일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일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고용계약서를 쓸 때에는 한국, 중국, 북한사람을 따로따로 불러서 차이를 두고 차별을 두고 있어요. 내가 일을 잘하는데도 북한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더 시키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 두었어요”

“식당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이다” 고 취직 못했어요. 북한사람들은 안쓰는 인력회사가 있어요. 태국, 베트남 외국인을 쓰면 일당으로 최고 6만원을 주는데, 북한이탈주민을 쓰면 조금 더 줘야 하니까 문전에서 딱 자르고 일자리를 안줍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일을 주더라도 진짜 힘든 일만 주어요.”

- 말투로 인한 차별

“말투가 다르다고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탈북민은 삶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부문에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생활에 급한 것부터 교육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언어교육은 뒤로 밀리게 되요. 사투리라도 일단 말귀를 알아들으면 우선 일부터 하게 되지요. 경상도사람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 흠이 안 되는데, 북한사람이 북한사투리를 쓰면 눈빛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고 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자꾸 숨어서 지내게 되요”

“한국사람하고 많이 사는 사람은 그래도 언어에 적응하기가 수월한데, 북한 말투를 고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나쁜 인식으로 인한 차별

“자녀에게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자녀들에게 학교에 가면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 조선족이라고 말 해” 라고 하기도 하고, 남편도 북한이탈주민임을 속이라고 한다.”

“북한사람이라고 하면 채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선족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 정보부족으로 인한 차별

- 처음 겪는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차별과 어려움을 겪음
- 행정적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불친절로 생활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북한이탈주민을 대하는 관공서의 직원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북한이탈주민이 이 사회에 와서 처음 의지할 곳은 관공서이지요. 북한이탈주민 혼자서 관공서를 가면 하대를 해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보호자와 함께 가면 친절하게 대해 줘요. 완전히 달라져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체제의 속성상 예컨대 직장상사 혹은 강사의 말에 참지 못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상사 혹은 강사는 “너네 나라에서 살지, 왜 왔느냐”는 식으로 모욕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북한이탈주민에게는 힘든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북한출신이라고 편견으로 당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힘들어요.”

“공무원은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공무원을 찾아 가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은 공무원밖에 없어요. 공무원을 찾아가서 물어 보면,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박대를 해요. 더 이상 면사무소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제4장 기본방향 및 향후과제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향후과제

제1절 기본방향

1. 노인

■ 노인 인권교육을 강화

- 노인, 노인시설 종사자 및 시설운영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함

■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인권 강화

- 노인시설 입소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시설의 서비스를 개선함

■ 노인인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을 마련

- 노인학대 등 인권침해사항에 대해 신고접수, 상담, 응급조치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함

■ 빈곤해결을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 노인의 경제적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양질의 노인일 자리를 발굴함

■ 노인의 여가·문화생활을 지원

- 남은 일생을 즐겁게 지내고, 최적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문화 생활을 지원함

2. 장애인

■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 「장애인이동및편의증진법」에 적용되지 않은 민간시설에도 편의시설을 개선함
- 건축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저해하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함

- 준공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함
- BF 시설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유형별 장애인의 의견을 청취함
- 편의시설증진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BF인증을 활성화함

■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특별운송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을 개선함

-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 저상버스 등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함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함

- 비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함
- 장애인의 사회행사를 지원하여 사회참여를 지원함

■ 장애인의 여가권, 문화향유권을 강화함

- 장애인이 여가생활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 활동보조서비스 불편사항을 개선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함

■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함

- 장애유형별 소통 및 정보획득을 위한 교육과 기반을 확충함

■ 장애인의 건강권을 강화함

- 장애유형별로 병원에서 편리하게 진찰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동권과 소통을 지원

■ 경제생활을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력을 지원
- 장애인의 노동권을 지원

3. 여성

■ 양성평등 인식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강화

- 인권교육이 보편화 되도록 인권교육을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여성의 정치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요구

- 여성의 정치참여, 간부급 여성공무원 확대 등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대표성 제고 정책이 요구됨
-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성 후보자 발굴이 필요함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주거지원 프로그램 지원과 가족차원에서의 통합적 사례관리가 요구됨
-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제도·행정적 기반 강화가 필요함

■ 여성장애인 유형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및 관리 제공

-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보고관리가 특별히 이루어져야 함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 인권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 여성 자립 역량을 위한 지원 제공

-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마을 단위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다문화 가족이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건지원 확대가 필요함

■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강화

- 취약계층에 종사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함

■ 돌봄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정책이 시급함

4. 다문화

■ 결혼전 한국 및 결혼상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중매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함

■ 인권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원체계를 마련

- 인권문제가 발생할 경우, 접수 및 상담, 대처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
- 농촌에 고립되어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여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

■ 결혼후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정보제공을 확대, 강화

-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언어 및 사회정보를 제공함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의료)정보를 제공함

5.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인권 교육 강화

- 아동·청소년 당사자, 일반 성인,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을 강화함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 방과 후 홀로 지내야만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보육의 공공성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함

■ 장애아동·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 확대

- 장애아동·청소년의 발달권,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 청소년 문화권 강화

- 당진시 청소년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

6. 비정규직

■ 비정규직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 비정규직의 인권침해사항 접수, 상담, 구제역할 강화

7.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피해 접수 및 상담 강화
- 한국사회 적응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제2절 향후과제

1.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 실시계획」 수립

- 당진시의 인권증진을 위한 장·단기 로드맵 수립
 - 인권증진을 위한 당진시의 장·단기 시책과 사업을 수립함
-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수립 연구」를 구체화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인권취약계층별 기본방향을 당진시 인권정책·사업으로 구체화함

2. 당진시민 인권감수성 향상

- 당진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당진시민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함
- 인권취약계층, 당진시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3. 당진시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당진시 인권침해를 접수,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당진시 인권의식 실태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은 당진시민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당진시민의 인권의식을 파악하고, 차별 및 인권침해실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 및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인권정책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고, 당진시민의 인권의식 및 감수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오직 정책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귀하가 답변한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귀하의 답변은 당진시의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7월

(재)충남연구원

*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 조사기관 : 충남연구원(담당 성태규 선임연구위원 : 041-840-1270 tgsung@cni.re.kr)

I. 당진시민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및 평가

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아님	별로 아님	보통	약간 그러함	매우 그러함
기본적 인권의 보호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당진시는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에서 인권은 존중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년 전에 비해서 한국의 인권은 나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사회에서 인권약자(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가족,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비정규 노동자 등)의 인권은 존중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당진시가 시민들의 인권보장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1로 가시오)

2-1. (아니라고 답한 경우)

당진시가 시민들의 인권보장에 부족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두 가지를 선택해주십시오. 제 1순위 (), 제 2순위 ()

① 시민들의 인권의식 부족

②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예, 인권센터 등)의 미비

③ 인권관련 전문가의 부재

④ 당진시 공무원들의 인권행정 마인드 부족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들의 배려 부재

⑥ 사회복지의 부족

⑦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미비

⑧ 인권관련 시민단체의 부족

⑨ 기타 ()

- ① 정치적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보호 등
- ②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의 보장 등
- ③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보장 등
- ④ 공평한 교육과 문화예술의 향유 등
- ⑤ 노인,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가족,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보호 등
- ⑥ 기타 ()

문항	전혀 안필요	별로 안필요	보통	약간 필요	매우 필요
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인권의식 고취	①	②	③	④	⑤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인권위원회, 인권담당 부서 등)확대	①	②	③	④	⑤
인권관련 전문가의 확대 및 충원	①	②	③	④	⑤
당진시 공무원들의 인권행정 감수성 향상	①	②	③	④	⑤
사회복지 분야 시설 지원 및 확충	①	②	③	④	⑤
인권관련 시민단체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인권친화도시)의 확대	①	②	③	④	⑤

- 115 -

5. 귀하는 당진시에서 모든 시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인권분야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안중요	별로 안중요	보통	약간 중요	매우 중요
시정 정보 공개, 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 보장	①	②	③	④	⑤
자유로운 의사표현(인터넷), 집회 및 결사의 자유	①	②	③	④	⑤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①	②	③	④	⑤
기본적 사회보장서비스를 누릴 권리	①	②	③	④	⑤
범죄, 폭력, 화재,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보장	①	②	③	④	⑤
자유로운 이동 및 편리하게 공공시설에 접근할 권리	①	②	③	④	⑤
오염 방지,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권리	①	②	③	④	⑤
노동기본권, 고용안전 및 적정 임금 보장	①	②	③	④	⑤
학교·성인·평생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⑤
예술 활동 지원, 충분한 여가 기회 및 장소 제공	①	②	③	④	⑤
공중위생 및 보건 관리, 공공 의료 체계 지원	①	②	③	④	⑤
쾌적하고 안전하며 부담 가능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	①	②	③	④	⑤

II. 당진시의 인권 침해와 차별

6. 당진시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취약계층	전혀 존중 안됨	별로 존중 안됨	보통	다소 존중됨	매우 존중됨
여성	①	②	③	④	⑤
노인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아동 및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북한이탈주민	①	②	③	④	⑤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정)	①	②	③	④	⑤
노동자	①	②	③	④	⑤
이주(외국인)노동자	①	②	③	④	⑤
비정규직 노동자	①	②	③	④	⑤
요양원 등 사회복지 시설 생활자	①	②	③	④	⑤
전과자	①	②	③	④	⑤
미혼모(한부모가족)	①	②	③	④	⑤
병력자(에이즈, 정신질환자, 한센병 등)	①	②	③	④	⑤
일반 당진시민	①	②	③	④	⑤

7. 귀하는 아래 요인 때문에 당진시에서 인권 침해나 차별이 얼마나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안 발생	별로 안 발생	보통	다소 발생	매우 발생
출신국가(인종/피부색)	①	②	③	④	⑤
성별(임신, 출산 포함)	①	②	③	④	⑤
경제적 지위(직업 소득)	①	②	③	④	⑤
나이	①	②	③	④	⑤
종교	①	②	③	④	⑤
용모(외모, 키, 몸무게 등)	①	②	③	④	⑤
학력/학벌	①	②	③	④	⑤
장애	①	②	③	④	⑤
출신지역	①	②	③	④	⑤
혼인상태(이혼, 미혼 등)	①	②	③	④	⑤
병력자(에이즈, 한센병, B형간염 등)	①	②	③	④	⑤
정치적 입장(사상/이념 포함)	①	②	③	④	⑤

기타()

8. 최근 3년 동안 귀하나 가까운 지인이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 항	경험함
경찰/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불심검문, 연행, 구금, 심문을 당했다	
언론이나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한 개인의 의견 표현을 공공기관에 의해 제한당한 적이 있다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사생활이 공개되었다	
시위, 집회 등의 자유를 제한당한 적이 있다	
단체 결성 혹은 단체 가입을 제한당한 적이 있다	
군대,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폭행당한 적이 있다	
복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나이가 많거나 어리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출신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국적(인종,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키, 몸무게, 외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결혼/미혼/이혼 등 혼인상황으로 인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정치적 성향, 사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종교적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불공정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질병으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기타()

9. 귀하는 위와 같은 인권 침해나 차별을 경험하였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주시시오

- ___ ① 해당기관이나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했다
___ ② 청와대, 당진시청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했다
___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___ ④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___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___ ⑥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했다
___ ⑦ 인터넷에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___ ⑧ 1인 시위 혹은 집회 등을 통해 직접 시정을 요구했다
___ ⑨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___ ⑩ 기타(취한 행동: _____)

10. 만약 귀하가 인권침해를 당한다면 어떤 행위를 취하시겠습니까?

우선순위 세 가지만 골라주시시오.(1순위: ___, 2순위: ___, 3순위: ___)

- ① 해당기관이나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한다
② 청와대, 당진시청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한다
③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④ 시민단체에 도움을 청한다
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⑥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한다
⑦ 인터넷에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올린다
⑧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⑨ 기타(취할 행동: _____)

Ⅲ. 당진시 인권교육

11. 귀하는 지금까지 당진시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____ (11-1로 가시오) ② 아니오 ____ (11-2로 가시오)

11-1. 있다면 어떤 기관 혹은 장소 에서 받았습니까?

$$\left(\begin{array}{c} \text{ } \end{array} \right)$$

11-2. 귀하는 인권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_____ ② 아니오 _____

12. 귀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3. 귀하는 당진시에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당진시장 ② 당진시 국회의원 ③ 당진시의원 ④ 시민단체 활동가
⑤ 변호사 ⑥ 경찰 ⑦ 당진시 공무원 ⑧ 교사
⑨ 기업가 ⑩ 언론인 ⑪ 복지시설 종사원 ⑫ 일반 당진시민
⑬ 기타()

14. 귀하는 인권교육을 누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권교육은 공교육의 정규교과과정에서 시행되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인권교육은 인권시민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인권교육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순위: __, 2순위: __)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

성태규 선임연구위원

총괄

□ 내부 연구진

최웅선 책임연구원

신혜지 연구원

